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44-10

[www.mafra.go.kr](http://www.mafra.go.kr)

---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

2015.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목 차

<b>I. 업무보고</b> .....	<b>1</b>
1. 행사 개요 .....	3
2. 서면보고서 .....	7
3. Presentation .....	37
4. 보도자료 .....	55
<b>II. 2015년 업무계획</b> .....	<b>73</b>





업무보고





# 1. 행사 개요





## 업무보고 행사 개요

□ 일시 : 2015. 1. 13(화) 10:00~10:50, 12:00~ 오찬

□ 장소 : 세종 행정지원센터 4층 국제회의장, 대연회장

□ 주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초가 튼튼한 경제+내수·수출 균형경제)

○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합동보고

※ 2015년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I·II),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으로 주제를 나누어 관련 부처간 합동보고 형식으로 진행

구분	내용	보고
① 총괄 (6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4년 성과 및 '15년 추진방향</li> <li>* 경제혁신의 큰 그림과 업무보고 전체 틀 소개</li> </ul>	부총리
② 소주제 (30분)  발표 : 각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li> </ul>	고용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li> </ul>	공정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li> </ul>	국토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li> <li>① (농축산업)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li> </ul>	농식품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해양수산업)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li> </ul>	해수부 차관

※ 2015년 업무계획은 총리실(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대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 토론과제 발제 및 토론

\* 주제 : ①공공부문 개혁방안, ②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2. 서면보고서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  
**소통과 실천으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계획 =

2015. 1. 1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I . 2014년 농정 평가 .....	13
II . 2015년 농정 추진방향 .....	19
III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 .....	25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27
2. 첨단화 ·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	29
3.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	31
4.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	33
5.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35





## I. 2014년 농정 평가

1. '14년 농정과제
2. 주요 농정성과



# 1. '14년 농정과제

□ (중장기 농정방향) 국정과제 실천 및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수립(13)

\* 정부 출범 초기 농정철학 부재 및 농정방향 상실 등에 대한 비판 제기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으로 설정

- 고령화, 양극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설정

○ 경쟁력, 소득, 복지의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



□ ('14년 농정과제) 박근혜정부 1년차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 성과 확산 및 쉼관세화·한중FTA 등 현안해소를 위해 3대전략·9대과제를 선정, 속도감있는 농정 추진

1년차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정부 농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양호 53%, 보통 13%</li> <li>☆ '13년 농가소득이 전년(31백만원) 대비 11.3% 상승(34백만원), 19년 만에 최고(통계청)</li> <li>☆ '13년 주요성과: 5대 채소류 가격변동 완화, 쌀 풍작 및 가격안정, 한우 돼지고기 가격안정, 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 가입증가, 직거래인프라 확충 등</li> </ul>
--------	---

○ 경영체DB구축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자립과 책임성 제고, 역량결집 및 협업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농업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수급·유통 개선
① 6차산업화	④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⑦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② ICT·BT 융복합 첨단산업화	⑤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⑧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③ 개방화 대응 및 수출확대	⑥ 체감형 농촌 복지 서비스 향상	⑨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개발

## 2. 주요 농정성과

### ① 위기 극복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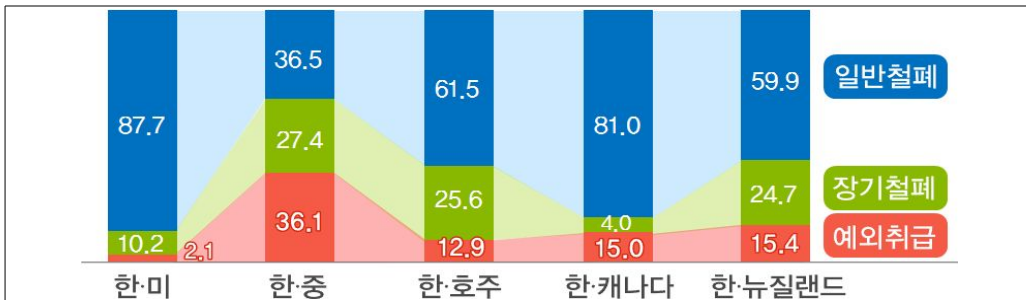
#### □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쌀 관세화 결정(7월), WTO 통보(9월)

- ☆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달
- \*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농해수위·산업위 등 9차례 국회 보고

- 주요 농업인 단체가 **정부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쌀 관세화가 큰 갈등 없이 마무리
-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쌀 소비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9월)

#### □ FTA는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잘 마무리

- \* 타결 시기: 호주('13.12), 캐나다('14.3), 중국('14.11), 뉴질랜드('14.11), 베트남('14.12)
- 국가별·품목별로 **협정제외(쌀), 양허제외, 저율관세(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농업세이프가드(ASG, 영연방)** 등 다양한 **예외수단 확보**



#### ○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계는 **한중 FTA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 \* 한중 FTA 등 협상과정에서 약 180회의 전문가회의·설명회 등 개최

#### □ FTA 보완대책을 넘어 한중 FTA 이후 전면적 개방화에 대비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대도약 기반 마련

- \* 영연방대책(2.1조원 추가 지원, '14.9),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토론회('14.11)

## ② 농업의 6차산업화 및 ICT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 6차산업화 성공사례 확산에 따른 부가가치·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 창업자가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6차산업 예비인증자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11.2% 증가

☆ 예산 사과와인은 예전에 사과생산만으로 연 8천만원 매출을 올렸으나, 6차산업 추진으로 연 6.1억원 매출 달성(사과3.5억원, 와인 1.3, 체험 1.3)

☆ 여수 거문도해풍숙 영농조합법인 고용인원은 '12년 17명에서 27명('14)으로 증가

□ 들녘경영체, ICT융복합으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첨단화 촉진

- 5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158개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ICT 융복합 모델 개발(13종) 및 1,280농가 보급

\* 들녘경영체(생산비 7.1% ↓), ICT융복합모델(시설원예 : 노동비 20% ↓, 생산성 30% ↑ / 양돈 : MSY 3.2두 ↑, 생산성 13% ↑)

## ③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엔화 가치 하락, 비관세장벽 강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국가전체 증가율(2.4%) 보다 높은 8.1% 증가(61.9억불)

- 중국 권역별 수출전략 등 정보제공(KOTRA/aT, 3월), 검역협상 타결('14 : 12건) 및 수출보험·통관 지원 등 현장에로 해소

□ 대한상의회 MOU('14.8)체결 및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14.9)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14건) 등 농업과 기업의 협력 기반 구축

## ④ 농가소득 안정 및 체감형 복지 향상

□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3 : 80만원/ha → '14 : 90) 및 겨울철 논 이모작(식량·사료) 작물에 직불금 신규 지급(40만원/ha)

□ 재해보험 확대('12 : 51품목 → '14 : 59) 및 재해지원 제도 개선

\* 보상기준 표준가격 인상(특정5종 6.4% ↑, 벼 5.6% ↑), 자기부담비율 다양화(70·80% → 60·70·80·85), 최저 가입면적 기준 완화, 가입기간 연장 등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21개 항목), 재해지원 절차 간소화, 재해 농가 복구의무 폐지 등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 \* 농경지유실, 과수재배시설, 농약대 등 평균 19.5% 인상

□ 영세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배려농정** 확대

- **공동생활홈**(35개소), **공동급식시설**(26개소), **작은목욕탕**(14개소) 등 3,000여명 수혜
  - \* 경로당 등 가사도우미 확대('14 : 16백개소), 65세 이상 1인 가구 지원(2월)
- 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시범사업** 시행(13개소)
- **농지연금**(2,927명 → 3,963) 및 **연금보험** 가입자 증가(290천명 → 317천명)

**⑥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로컬푸드 등 신유통확산**

□ 양파는 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 급락세를 방어하고, 배추, 마늘, 무 등도 조기에 **평년수준을 회복**하거나 **가격안정구간 진입**

\* 양파 : (1월) 760원/kg → (3월) 558 → (6월) 430 → (9월) 548

□ 축산물은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민관공동 상시 수급관리 및 자율감축, 소비촉진 등으로 **한우, 돼지가격 등이 평년수준 상회**

\* 한우 큰수소('13 : 502만원/600kg → '14 : 541), 돼지('13 : 30만원/110kg → '14 : 40)

□ 직거래 인프라 확충으로 **신유통경로**를 통한 **거래액이 전년대비 27.9% 증가**(6.5조원)하면서 **유통비용 절감액**(6,200억원)이 **47.6% 증가**

**⑥ 스마트 농정 체계 구축으로 농정성과 확산 기반 마련**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1,891마을 참여) 추진으로 자조자립 정신 제고

□ **농업경영체 DB 구축 및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스마트농정 기반 구축**

- **경영체 DB 일체갱신**으로 경영주 인적사항, 농지면적, 판매금액, 소득, 보조금 지원현황, 면세유 배정량 등 **93개 정보 DB 구축**
- **경영체 DB와 농림사업 연계·통합** 및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된 **보조지원 시설(87천건) DB화**

□ **지역단위 농발계획 수립**(14개 시·도, 163개 시·군·구) 추진으로 지역중심 농정추진 기반 구축

## Ⅱ. 2015년 농정 추진방향

1. 농정방향
2. 추진체계도





# 1. 농정방향

## 가 기본방향

- 전면적 개방화 체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의 위기에 대응하여 **3년의 농정혁신을 통해 30년의 성장을 견인**
-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 농정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방안**(14.11)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실천
- 지난해 말 타결된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과의 **FTA대체 수립**을 통해 농업계의 불안감 해소

## 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바탕으로 ①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②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③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에 집중**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경영체 육성과 지역중심 6차산업화를 통한 농의소득 창출, 지역친화형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산 및 농촌관광 품질 향상
- 전면적 개방화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
  - ICT융복합으로 농업·농촌 혁신, 논·밭 공동경영 활성화로 규모화 촉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정예인력** 육성
  - FTA를 기회로 농업 외부의 기술·자본과 연계하여 **수출시장 확대**
-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행복농촌 조성** 및 체감형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영세고령농 배려 및 귀농·귀촌 활성화

## 다 FTA 등 개방화 대책 수립

### FTA 등 철저한 개방화 대책으로 정책 추동력 확보 및 농정신뢰 회복

- **개방화 및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이 농가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책부담**으로 작용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동력을 확보**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개방화대책 수립 필요
- FTA 체결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별·품목별 대책 수립
  -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받 농업 중심 기반정비, 기계화, 인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수립
    - **직불제 확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농가경영 불안요인 최소화
  - 국회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충실하게 검토

## 라 체감성과 확산

### 농정 체감성과 확산을 통한 대도약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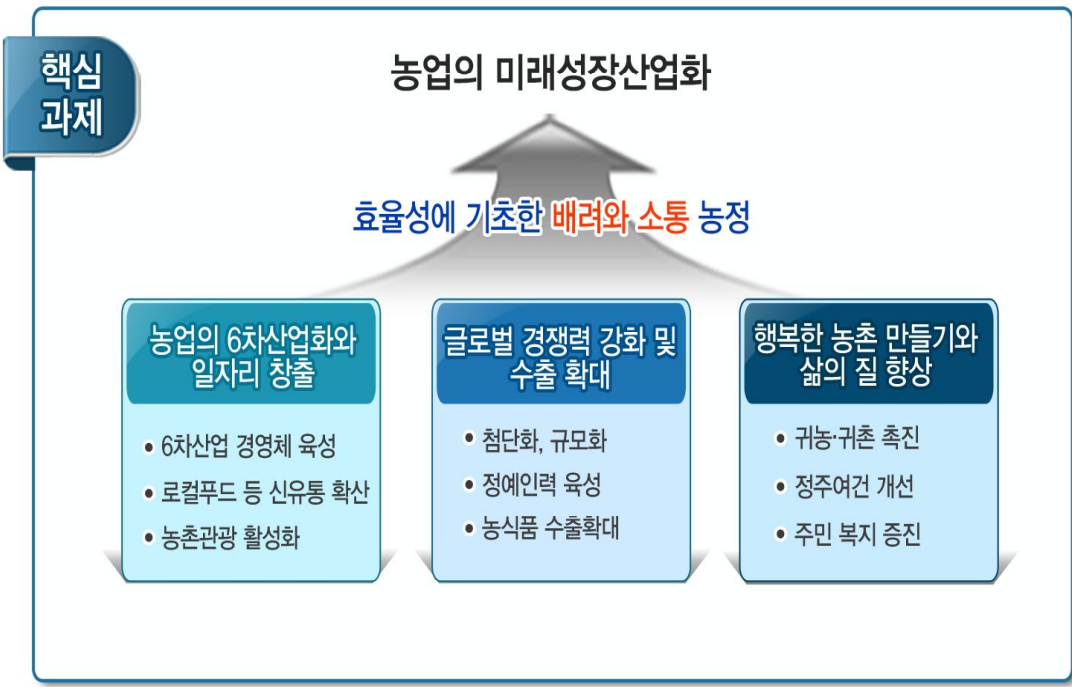
- 금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 농정 및 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경영체DB, 지역단위 농발계획** 등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여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사례 해소
  -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은 **전면 개선**
  - 관련부처, 산하기관, 도시 등 **외부와의 협업 활성화**

## 2. 추진체계도

**정책 여건**

<p><b>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li> <li>▶ 취약한 농업 구조</li> </ul>	<p><b>기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BT 기술의 융복합 확대</li> <li>▶ 건강·휴양 및 삶의 질 중시</li> </ul>
---	---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김 로저스, '14.12.4, 서울대 강연)



**정책 기반**

- ▶ 정부3.0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Ⅲ.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

-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2. 첨단화·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 3.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 4.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 5.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14 : 379개소) 선정, 현장애로 해소·판로 확대 등을 통해 **경영체별 매출액 전년대비 11.2% 증가**  
\* 예비인증 사업자 매출액 : ('13) 평균 747백만원 → ('14) 831
-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전국 확산** ('12 : 3개소 → '14 : 71) 및 **신유통비중 증가**('13 : 10.9% → '14 : 14.6)
- 농촌관광 품질향상을 위한 **등급평가 대상 확대**('13 : 200개소 → '14 : 300)  
\* 1·2등급 관광시설 이용객 만족도 : ('12) 72점 → ('14) 86.2

### 나. 미흡한 점

- 정책 확산 초기 단계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6차산업 관련 정책**(제조·가공·외식·관광 등)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
- 농촌 관광자원의 **연계형 프로그램 부족** 및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재방문율이 낮으며 관광객 유입에도 한계**  
\* 농촌체험마을 방문지역에 대한 재방문 의향률 : ('11) 81.5% → ('14) 72.7

## 2 '15년 추진계획

- 6차산업 창업자 수 전년 대비 **10%**('14 : 396명 → '15 : 435) 증대
  -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30개), 도별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9개) 기능 확충을 통해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추진**

- 규제특례\* 적용 및 공동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6차산업 융복합 지구를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9개소)

\* 옥외광고물 설치, 식품표시기준 완화, 농지의 위탁경영·임대·사용 등

- 6차산업 경영체를 위한 **기술·경영 및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종합적 지원 및 전문 펀드 확대**(100억원)

- **농지제도 합리화**(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및 **산림규제 완화**(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

-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시설 조례·규칙 제정 확산** 및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등 현장규제 지속 발굴, 개선

\* 시설기준 완화 조례·규칙 제정 지자체 : ('14) 20개 → ('15 목표) 50

#### □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300억원의 유통비용 절감

-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운영(6월), **POS-Mall 활성화** 및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 등 ICT 활용 직거래 활성화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3 : 32개소 → '15 : 100), 꾸러미사업 확대, 상생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10개소), 농산물 택배시스템 개선

-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는 음식점 지정, 전통시장 농산물 직거래 등 추진

#### □ 농촌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체험마을 이용자수를 11백만명까지 확대

- 지역축제 및 5일시장과 연계한 **음식관광 코스** 개발,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 구성 지원(2~3월, 8개소, 4억원)

- 철도인프라와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확대 ('14 : 9종 → '15 : 15) 및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등급제 확대**(350개소) 및 도시민 수요에 맞춘 **관광 인프라 확충**

- 승마장, 휴양림·치유의 숲(11개소), 산악관광 활성화 등 추진



## 2. 첨단화 ·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쌀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공동영농이 확대\*되고 ICT 융복합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 들녘경영체 수 및 경영 면적 : ('13) 132개소(25천ha) → ('14) 158(32)

\*\* ICT시설 딸기 조수입(0.5ha기준) : 71백만원 → 93

#### 나. 미흡한 점

- 들녘경영체 운영이 공동 육묘·방제 수준에 그쳐 단일영농계획 수립 등 공동경영 심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벼 단일 품목 경영체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소득증대형 지역 공동영농체로의 발전은 미미

- 밭농업은 영세소농이 많고, 다품목·소량 생산 및 개별 생산자 중심 시장 출하로 조직화, 공동경영체 육성에 애로

- 시설 노후화\*, 농가의 ICT 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ICT 융복합 첨단시설의 전면적 확산에 한계

\* (사례) ICT 융복합 사업에 딸기재배 109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시설여건이 양호한 33농가만 지원

### 2 '15년 추진계획

- 첨단농업 구축을 위해 ICT 융복합 스마트팜 보급 확산

\* 현대화 / 첨단온실(누계) : ('13) 10,500ha / 345ha → ('15) 13,200 / 755

- 기존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원예 1,150ha, 축산 2,786억원), 수출·고소득 품목(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중심으로 스마트 온실 보급(350ha) 가속화

- ICT 시설도입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현장 기술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실습형 교육농장 및 권역별지원센터 확대

-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ICT와 농촌의 유통망·에너지·스마트러닝·문화 등을 융합하는 ICT 창조마을 표준모델 개발
- 스마트팜 맵을 경작확인·재해보험 등에 활용, 인공위성 이용 작황예측시스템 구축

□ **쌀 공동경영 면적을 4천ha로 확대**(‘13년 2.5천ha)하고, 쌀농업 주산지 중심 공동 생산·수급 조절 및 쌀농업 경쟁력 제고

-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체계 마련(4월) 및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모델 개발(6월)
- 주요 쌀작물 20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받기만 정비 및 기계화 지원**

□ **밭고정직불과 수입보장보험(쌀작물 중심)을 도입하여 쌀 뿐만 아니라 밭에도 ‘소득안정 +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

- **밭직불은 대상농지의 지목과 품목 제한을 폐지하여 고정직불로 개선**(‘14 : 26개 품목 → ‘15 : 전 품목, 25만원/ha)
-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14개 시·군)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 ‘15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4 : 90만원/ha → ‘15 : 100)

구분	기 존	개 선
경영안정 (위험관리)	쌀 변동직불	쌀 변동직불
소득안정 (공익형)	쌀고정직불 (90만원/ha)	밭고정직불 (전품목 25만원/ha 기준 26개품목 15만원 추가)
논, 밭	논	논
	밭	밭

-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종합위험방식 시범사업**(배 30곳, 단감 12, 사과 3) 실시(2월)

\* 보험 대상품목 : (‘13) 56 → (‘14) 59 → (‘15) 62 → (‘17) 69

### 3.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한농대 졸업생은 영농종사율이 86.3%에 이르고,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소득 시현(한농대 졸업생 6,814만원, 농가평균 3,452)

##### 나. 미흡한 점

- 계절적 요인 및 정보제공 부족으로 노동력 수급에 미스매치 발생
- 실습교육을 위해 전국에 대표 현장실습장(WPL)을 지정하였으나, 단기 체험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술교육에는 한계

#### 2 '15년 추진계획

- 농고·농대생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농업 직업전문 학교로서의 기능 강화
  -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 영농승계가 가능한 학생 중심으로 농업법인 실습 등 전문교과 비중 확대(70%수준)
  -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 교육과정\*(안)' 마련(6월)

\* 타 단과대와 협력하여 첨단기술·영어·경영 과목을 중점 교육하고 기업 인턴십·해외연수 등으로 견문 확대

□ 개방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ICT 등 첨단기술과 선진 농업기술 습득 기회 확대

-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 개설(토마토), 해외교육기관 방문연수 실시('15.하)

\* (기존) 육묘, 재배방식, 병충해 진단·방제 등 기본교육 강의 → (토마토 대학) ICT 설비 제어기술, 재배환경 실시간 진단·활용 관련 이론과 현장중심 실습

- 생산량이 많고, 재배가 까다로운 품목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실시간 컨설팅 실시('14 : 6개 품목 → '15 : 20)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화율 35%) 등 창업보육 지원 확대

- 인턴십,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 현장과 연계한 도제식 교육 확대

- 청년·새터민·제대군인 등 유형별 영농교육 및 창업지원

-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 확대 및 2030세대 농지 우선지원(2,300ha)

- 농업창업보육센터(5월), 창조경제타운(미래부 협업) 등과 연계하여 기술력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벤처 창업 지원 강화

- 연구개발 기업에 연구기관의 기자재·실험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후 컨설팅·시제품 제작·양산화·판매 등 일관지원

□ 핵심인력 7만명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활성화, 인력중개 시스템 개선

-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하여 전문인력 육성체계 구축

- 구인·구직 인력풀 확장을 위한 광역단위 정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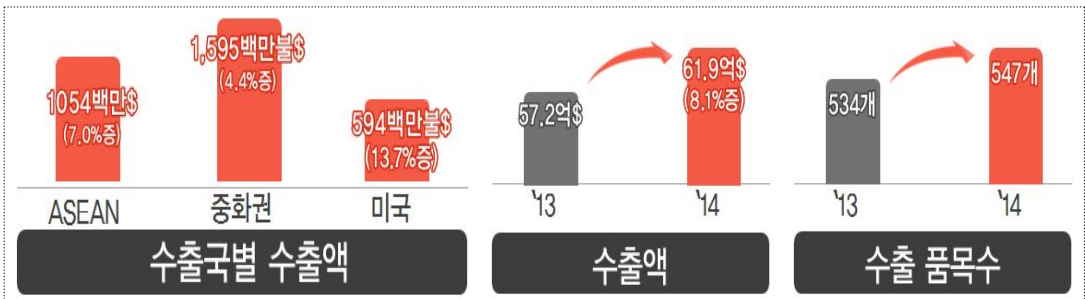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시·군 단위 인력 중개(158개 시군, 연간 20만명)로 연령별·계절별 인력미스매치 해소

## 4.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농식품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61.9억불로 동기간 국가 전체산업 수출액 증가율(2.4%) 보다 3.4배 높은 수준 기록



- 적극적 검역협상 추진을 통해 주요 수출유망 품목 검역이슈 해소
  - 베트남 가금육(3월), 필리핀 파프리카(3월), 미국 삼계탕(7월), 멕시코 배(7월), 호주 포도(8월), 칠레 버섯(11월) 등 12개 품목 검역협상 타결 등(14)

#### 나. 미흡한 점

- 엔저, 러시아의 EU 농산물 금수 등 여건 악화로 수출 목표 미달성
  -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對日 수출물량 증가 대비 수출액 증기폭 저조
    - \* 대일 수출 실적('14.12월말 기준 전년대비) : 937.8천톤(5.5%↑), 1,316.9백만불(2.4%↑)
  - 러시아의 對EU 금수조치('14.8월)로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 농식품과 경쟁 심화
- 수입국의 위생, 검역, 통관 등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 미흡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중심의 수출 전략품목 육성

-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14품목), 제2파프리카 품목 對중국 수출 지원(15억원), 간척지에 수출용 쌀 생산기지 조성(540ha) 추진
- GAP(10%)·HACCP(37%) 인증 확대, 친환경농산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과정 이중 점검 시스템(민간+농관원) 구축(1월)
  - 체험, 관광을 접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인증대상 확대 추진(산란계·돼지·한·육우 등 7종)

□ 수출기업 중심 통합적 애로해소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액 77억불 달성

- 대중국 수출품목 라벨링 지원(90%),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산업부 협업), 종자산업 진흥센터 설립, 비관세 장벽 협의체 구성(3월)
- 주요 온라인 쇼핑몰(中알리바바, 日라쿠텐, eBay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확대, 동남아·중국 등 현지 한국 농식품 판매관 설치 검토
- 중동·아세안 국가 등과 할랄식품 진출 확대를 위한 정보·생산 기술·자본 등 협력, 할랄식품 전문연구기관 지정(2월) 및 심층조사

□ 수출개척 협의회를 통한 기업의 기술·자본 및 해외유통망 연계 활용 강화

- 외국 진출 유통매장(롯데마트 등) 및 인터넷·홈쇼핑(CJ 홈쇼핑 중국채널 등)의 해외유통망 활용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본격 확산('14: 14건 → 20(누적))

-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1월), 품목별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상생협력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분위기 확산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사회공헌인증제 등) 마련

## 5.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1 '14년 농정평가

#### 가. 성과

- 농촌 특화형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만족도 향상\***, 귀농·귀촌 가구 증가\*\*  
\* ('12) 36% → ('14) 41    \*\* ('12) 27천호 → ('13) 32.4
- 대중교통 취약지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 추진('14: 13개소)으로 **생활여건 개선**
- 범 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15~'19) 수립(12월)

#### 나. 미흡한 점

- 마을정주환경 개선사업 확산이 미흡하고, 읍·면 중심지 거점 기능 미약  
\* 지자체 요청 : 주민·지자체 부담완화, 짧은 사업 기간(2년), 획일적 총사업비(마을규모 미고려) 등
- 주민주도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존재

### 2 '15년 추진계획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4천호로 확대**
- 귀농인 등 **신규농 정착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 쌀직불금 지급요건 개선(경작면적 : 10,000㎡ →1,000, 판매액 : 900만원 이상 → 120)

- 귀농·귀촌자 농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비닐하우스 자금지원요건 : 2000㎡ → 660)
  - 신규마을 조성사업 확대(20개 지구), 수요자 중심(청년, 새터민 등) 맞춤형 교육, 선도농가 인턴제 지원
  - 대학생 등 대상으로 농촌마을 설계, 6차산업화 등 아이디어 발굴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추진(예타중)
- 2030세대 등 젊은 계층의 수요에 맞추어 ICT 융복합 창조마을 등 주거·교육·의료·문화·체육 서비스 제공 강화
- 젊은 층을 겨냥한 삶의 질 인프라 확충
    -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놀이교실(34개소), 주말돌봄방(15개소),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교육부), 작은 영화관·도서관 지원(문화부)
  -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 육성(15개지구),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30여지구, 1,200여 주택) 추진
  - 농촌형 교통모델(19개) 등 농촌특성에 맞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확대(관계부처 협업)
- 영세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수혜자 311천명까지 확대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각각 17천, 15천 가구로 확대, 공동 생활홈 등 고령농 공동생활시설 71개소\* 조성
    - \* 공동생활홈(35개소), 공동급식시설(20개소), 작은목욕탕(16개소)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 상향('14 : 85만원 → '15 : 91),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조정(70% → 80수준), 소유농지 면적기준(현행 3ha) 폐지



## 3. Presentation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  
소통과 실천으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

2015. 1. 1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I '14년 농정 평가

II '15년 농정 방향

III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

1.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2.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3. 행복한 농촌 만들기과 삶의 질 향상



보고 순서는

'14년 농정평가,

'15년 농정방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계획입니다.

**성과** 농정현안 해소와 핵심과제 성과창출로 대도약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 20년간 미루어졌던 **쌀 관세화 결정**  
 • 쌀 수입 최소화 방안으로 평가

▶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개방화 현안을 잘 마무리  
 • 중국·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과의 FTA 타결  
 ▶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사례 차단**을 위한 **경영체 DB 구축**

▶ 6차산업 활성화



▶ 유통구조 개선



▶ 농식품 수출 확대



▶ 농가소득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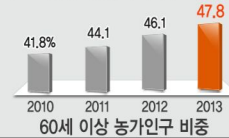


**미흡한 점** 농업의 **구조적 취약점**이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영세한 농업구조



▶ 고령농 위주 인력구조 심화



▶ 소규모 다품목 생산 구조(밭)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지난해 농정 평가입니다.

농업계 내외부와 진정성있는 소통을 통해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주요 현안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사례 차단을 위해 경영체 DB를 구축하고  
 6차산업화, 수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면서  
 대도약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정책  
여건

위기

- ▶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
- ▶ 취약한 농업 구조

기회

- ▶ ICT·BT 기술의 융복합 확대
- ▶ 건강·휴양 및 삶의 질 중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농업이 향후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집콧저스, '14.12.4, 서울대 특강)

핵심  
과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 농정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산
- 농촌관광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첨단화·규모화·고급화
- 정예인력 육성
- 농식품 수출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  
와 삶의 질 향상

- 귀농·귀촌 촉진
- 정주여건 개선
- 주민 복지 증진

정책  
기반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 ▶ 정부3.0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금년 농정방향입니다.

우리 농업이 전면적 개방화 체제에 편입되었지만,  
ICT기술 발전과 농업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우리 농업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6차산업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으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요성과

▶ 6차산업 경영체  
매출액 증가



평균 매출액

▶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 농촌관광  
품질향상



등급평가 마을

### 미흡한 점

- ▶ 관련 정책간 유기적 연계 미흡
- ▶ 경영주체의 기술·경영능력·판로 부족

### [ 영농조합법인 애농 6차산업화 ] (전북 진안군)

#### 지원사항

- 6차산업 판촉지원(하나로마트, a마켓)
- 우수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새싹채소 재배



햄, 차 등 가공



카레팩토리 운영

#### 주요성과

- 매출액 : 12 19억원 → 14 29억원
- 일자리 : 12 30명 → 14 50명

### 성과창출 방안

경영체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6차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 지역 중심의 6차산업 확산 및 경영체별 1:1 맞춤형 지원
- ▶ 식품가공 등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및 종합지원 강화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먼저,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난해 6차산업경영체, 로컬푸드 등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중심의 6차 산업화와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1.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p><b>농식품 가공</b></p> <p>2013 2015 6차산업 창업자수</p>	<p>개별·분산 추진 → 종합적 연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사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도별 1개소)를 중심으로 <b>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b></li> <li>• 6차산업 <b>융복합 지구</b>의 지역특화 클러스터화(9개소)</li> </ul> </li> <li>▶ 관계부처 협업 및 종합지원 강화(농업과 타산업간 융복합 저해규제 정비)</li> </ul>
<p><b>유통</b></p> <p>2012 2015 유통비용 절감액</p>	<p>개별 경영체 중심 직거래 → 지역 중심 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직거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Mall 활성화, 농수산물-중기 전용 <b>홈쇼핑</b> 개국(6월)</li> </ul> </li> <li>▶ <b>로컬푸드 직매장(100개소)</b>, 상생 직거래 장터(10개소), 택배시스템 개선 등 신유통 확대</li> </ul>
<p><b>농촌관광</b></p> <p>2012 2015 체험마을 이용자수</p>	<p>경영형 농촌관광 → 연계·체류형 농촌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유산 등 <b>지역 자원과 농촌관광 연계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 관광자원과 철도 연계상품 개발(15종, 코레일 협업),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li> </ul> </li> <li>▶ <b>도시민 수요에 맞춘 관광 인프라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마장(15개소), 휴양림·치유의 숲 확대(11개소, 산림청), 산악관광 활성화(산림청)</li> </ul> </li> </ul>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를 위해, 6차산업 융복합 지구와 6차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POS-MALL 활성화, 농수산물 홈쇼핑,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하면서 휴양림 등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 2-1.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ICT 융복합과 들녘경영체가 확산되고 있으나, 해결과제가 많습니다.

### 주요성과

▶ ICT 융복합으로 생산성, 품질 향상



▶ 공동경영 확대



### 미흡한 점

- ▶ 선진국 대비 기술·품질·안전성 차별화 부족
- ▶ 농업경영 및 소득안정 장치 미흡

### [ ICT 융복합 시설 도입 ] (전남 딸기 2개 농가)



### 성과창출 방안

경영체DB를 기초로 맞춤형 농정(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습니다.

- ▶ 수출용 시설원에·축산단지 등 ICT 보급 확대
- ▶ 전업농·중소농 중심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
- ▶ 농업경영체 스스로 경영위험에 대비하는 안정장치 강화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둘째,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ICT융복합,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전업농, 중소농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 2-1.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첨단화	토지·노동기반 농업 → 자본·기술기반 스마트 팜
<p>ICT 보급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현대화와 연계한 한국형 ICT 모델 개발(농진청) 및 스마트 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계('15)-낙농('16) 모델 개발, 시설원예·양돈 ICT 표준모델 보급 확대</li> </ul> </li> <li>▶ ICT를 활용한 창조마을(세종시) 모델 정립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ICT와 유통망, 에너지, 스마트 러닝, 문화·여가 프로그램 융복합</li> </ul> </li> </ul>
규모화·조직화	개별농가 경영 → 들녘경영체·주산지 중심 공동경영
<p>쌀 공동경영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쌀 관세화 대응, 들녘경영체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 체계 구축(4월), 쌀-축산 연계 모델 개발(6월)</li> </ul> </li> <li>▶ 쌀 한중 FTA 대응, 주산지 중심 쌀 농업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241개 주산지 육성, 쌀 기반정비·기계화 지원</li> </ul> </li> </ul>
경영안정	정부 주도 지원 → 농업경영체 주도 위험관리 강화
<p>재해보험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유형별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직불금(100만원/ha), 쌀 고정직불금(25만원/ha), 농업수입보장보험(양파, 포도, 콩)</li> </ul> </li> <li>▶ 경영체DB를 활용한 직불금 등 부정수급 차단 강화</li> </ul>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를 위해, 시설원예와 양돈에 스마트 팜 보급을 확대하고 ICT와 유통·관광·교육 등이 융합된 창조마을을 본격 확산시키겠습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들녘경영체를 확대하고, 쌀 농업은 한중 FTA에 대응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기반정비와 기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 등을 포함한 농업경영과 소득안정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2-2. 현장형 정예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우리 농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 주요성과

#### ▶ 기술농업 효과 창출



한농대 졸업생 평균소득

#### ▶ 선진국과 농업기술 격차 완화



세계최고 대비 기술수준

### 미흡한 점

- ▶ 농고·농대 졸업생 취업 연계 미흡
- ▶ 고령화된 인력 구조로 인해 첨단기술 확산 한계

### [ 젊은 한농대 졸업생 부부 ] (경기도 이천시)

#### 지원사항

- 한농대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한농대 장기현장실습농장 현장교수

#### 주요성과

- 매출액('14) : 15억원
- \* 버섯 및 버섯배지 전국 판매



### 성과창출 방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급 및 창업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 ▶ ICT 등 최신기술을 운용할 전문인력 육성 및 창의적 인재의 창업 지원
- ▶ 도시 유희인력 활용을 통한 농산업 부족인력 확보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셋째, 현장형 정예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고·농대생의 농업 기피로 정예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 인력양성과

창의적 인재의 창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2-2. 현장형 정예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b>교육·훈련</b>  <p>5만명 2013 2015 전문농가교육</p>	<b>이론 위주 교육 ▶ 현장적용 기술교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전문직업학교 전문교과 운영(농고), 영농창업특별과정 운영(농대)으로 <b>직업전문학교 기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대학'을 주산지에 개설(토마토 대학)</li> </ul> </li> <li>▶ <b>스마트 폰</b> 등 ICT를 활용한 현장애로의 <b>실시간 해결</b>(품목별 SNS 스마트 학습조직, 20개)</li> </ul>
<b>창업·보육</b>  <p>30% 35% 2014 2015 개발기술 사업화율</p>	<b>획일적 창업지원 ▶ 정예인력 중심 창업 유형별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능한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농가 실습 확대(농진청), 2030세대 <b>농지 우선지원</b>(2,300ha)</li> <li>• 인턴십,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을 활용한 <b>도제식 교육</b> 강화</li> </ul> </li> <li>▶ <b>농업벤처 창업 지원 생태계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종합가공센터(30개소)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설치(5월)로 <b>컨설팅·제작·판매·양산화</b> 등 <b>일관 지원</b></li> </ul> </li> </ul>
<b>인력수급</b>  <p>5천명 2013 2015 인력중개(월평균)</p>	<b>농가 개인별 구인방식 ▶ 지역 인력중개시스템 구인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품목별 중장기 <b>인력수요 전망</b>에 따른 <b>안정적 인력 관리방안</b> 마련(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구직 인력풀 확장을 위한 광역단위 정보시스템 구축</li> </ul> </li> <li>▶ 연령별·계절별 <b>일자리 불일치 해소</b>(농촌인력중개센터, 20만명 중개)</li> </ul>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를 위해, 농고·농대의 직업전문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현장애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계층의 창업촉진을 위해 임대농지 등을 우대 지원하고 마이스터 등을 활용한 도제식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작목선택부터 판매까지 일관지원하는 농업 벤처생태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인력수급전망에 근거한 인력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20만 명의 일자리를 중개하여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2-3.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인프라와 비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주요성과

#### FTA 활용도 증가



FTA 체결국 농식품 수출 비중

#### 상생협력 시너지효과 창출

- ▶ 종자개발(신세계푸드, 농우바이오)
- ▶ 농산물 가공·수출(농심, SPC)
- ▶ 해외 매장 입점(롯데마트, 홈플러스)

#### 검역협상으로 수출시장 개척

- ▶ 12개 품목 수출 개척 (미국-상계탕, 필리핀-파프리카 등)

### 미흡한 점

- ▶ 수출농산물 생산·물류 등 인프라 취약
- ▶ 전문가 기술·자본 네트워크 부족

### [ 해외 온라인 마켓 한국농식품 전용판매관 개설 ] (중국 알리바바)

**입점업체** 13개 업체 → 24(486개 품목 → 872)

· 막걸리, 차류, 쌀 가공품(떡볶이, 쌀과자) 등 판매

**판매실적** 1개월간 276% 성장(9억원 → 34)



### 성과창출 방안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수출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고품질·안전 농식품 중심 전략품목 육성 및 애로해소 등 맞춤형 전략 추진
-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넷째,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수출기반이 취약하고 비관세장벽도 높습니다.

금년에는

농업분야에서도 확대된 FTA의 성과를 얻기 위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2-3.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p><b>고품질 전략</b></p> <p>2013 37% 2015 40% FTA체결국 수출비중</p>	<p><b>안정적 공급 체계 미흡 → 고품질 농식품 안정적 공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발굴 및 <b>프리미엄 제품 중심</b>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선도조직 육성(14품목), 제2파프리카(5개 품목) 중국 수출 맞춤형 자원(15억원)</li> </ul> </li> <li>▶ GAP(10%), HACCP 인증(37%) 확대로 고품질 이미지 강화</li> </ul>
<p><b>애로해소</b></p> <p>2013 57억불 2015 77억불 농식품 수출액</p>	<p><b>이슈별 애로해소 지원 → 수출업체 중심 통합적 애로해소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농식품 기업의 <b>정보·물류·통관·검역위생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14.11월), 비관세장벽 협의체 구성(3월)</li> </ul> </li> <li>▶ 중화권·아세안·<b>할랄</b> 등 해외 유통시장 중심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b>온라인 교두보 마련</b>(6월, 알리바바·라쿤텐·eBay), 할랄 전문연구기관 지정(2월) 및 심층조사</li> </ul> </li> </ul>
<p><b>상생협력</b></p> <p>2014 14건 2015 20건 상생협력 사례</p>	<p><b>농업계 내부 노력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출개척협의회</b>를 통한 기업의 기술, 자본 및 <b>해외 유통망 연계 활용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진출 유통매장(롯데마트 한국식품존 : 중국, 인니, 베트남) 및 인터넷·홈쇼핑 활용(CJ 홈쇼핑 중국 채널 등)</li> </ul> </li> <li>▶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b>행복사다리 확산</b>(원료구매·제조·수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한 <b>참여기업 인센티브</b> 지원 등 <b>상생협력 제도화</b>(2월)</li> </ul> </li> </ul>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를 위해, 고품질·프리미엄 농식품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FTA체결국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 농식품 기업의 정보·검역·원산지 등 현장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할랄시장 진출 확대, 해외 온라인 교두보 강화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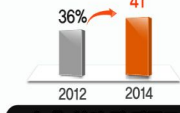
### 3.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농촌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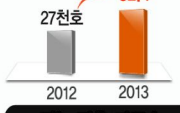
#### 주요성과

##### ▶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



농촌 삶의 질 만족도

##### ▶ 농촌 인력 유입 확대



귀농·귀촌 가구수

#### 미흡한 점

- ▶ 농촌지역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취약
-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미흡

####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 (\*14,11.7, 1,891개 마을 신청 → 27개 선정)

	<b>어름리 마을(체합·소득 분야)</b> · 농특산물 꾸러미 사업('13) · SNS 마을홍보·외국인 체험 도입 연간 3만명 방문, 농가소득 260% 증가
	<b>안터마을(경관·환경 분야)</b> · 빈집털이 축제('09~) · 유기농업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마을인구 최근 6년간 39% 증가
	<b>가시리마을(문화·복지 분야)</b> · 가시리 문화학교(13개 프로그램) · 유재꽃 초림길 등 지역자원 연계 연간 12만명 방문, 마을인구 증가

#### 성과창출 방안

관계부처 협업과 농촌주민의 참여를 묶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 귀농·귀촌인 및 관계부처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농촌활력 창출
- ▶ 농촌지역 공동출, 공동목욕탕 등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 제공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관계부처 협업과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통해  
 농촌을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3.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Ⅲ. 실천계획

<p><b>귀농·귀촌</b></p> <p>11천호 2012 2015 40대 이하 귀농귀촌</p>	<p><b>일률적 지원 ▶ 청년 귀농·귀촌 특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인을 위한 <b>신규마을 조성사업</b> 확대(15지구 → 20)</li> <li>▶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b>취·창업교육 확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b> 입주자격 우대, 농지 우선 지원(2,300ha)</li> <li>• 대학생 농촌건축·6차산업창업 공모전(8월), <b>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b> 추진(예타중)</li> </ul> </li> </ul>
<p><b>정주여건</b></p> <p>4개 지구 2013 2015 마을단위 주거개선</p>	<p><b>농촌환경 개선 위주 ▶ 교육·의료·문화·체육 등 종합 인프라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 중심지 선도지구(15개소), 슬레이트 등 <b>주거취약지구 개선</b>(1,200가구)</li> <li>▶ 창조마을 등 <b>젊은 층을 겨냥한 삶의 질 인프라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아이돌봄센터(34개소), 주말돌봄방(15개소), 거점 우수중학교(교육부), 작은 영화관·도서관(문화부)</li> </ul> </li> </ul>
<p><b>생활안정</b></p> <p>266천명 2012 2015 연금보험료 수혜자</p>	<p><b>영세 고령농 소외 ▶ 취약계층 행복 증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고령농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b>공동생활홈·공동목욕탕·공동급식시설</b>(75개소 → 146, 누적)</li> </ul> </li> <li>▶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안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85만원→ 91), <b>농지연금</b> 활성화(감정평가액 인상 등)</li> </ul> </li> </ul>

201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

이를 위해, 기술지도와 함께  
농촌체험 기회 제공·주택·교육·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겠습니다.

주거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층에 맞추어 보육·교육·문화·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  
겠습니다.

영세고령농 등을 위해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확대와 함께  
농지연금 등 소득안정장치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개방화로  
재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한번 더 크게 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보도자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보도자료

2015년 1월 13일 10: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강형석, 서기관 강민철(044-201-1317) / 제공일 : 1월 9일(총 16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세부 실천계획 발표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 소통과 실천으로 대도약 실현 -

### < 주 요 내 용 >

=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실천을 위해 6차산업화, 첨단화·규모화, 정예인력 육성, 수출확대, 행복한 농촌 만들기 등 5개 실천계획 선정 =

- ① (6차산업) 1차형 산업구조를 6차형 구조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확대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30개) 및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 1:1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29개소) 확충
  - 농업진흥지역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등 농지제도 합리화 및 산림규제(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 완화
- ② (첨단·규모화) ICT기반 첨단화 및 주산지중심 생산·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시설원에 ICT보급(원예 350ha), 스마트 팜 맵(인공위성 이용 농경지 지도)을 활용한 실제 경작 확인·재해피해 조사 및 인공위성 이용 작황 예측시스템 개발
  - 쌀 들녘경영체(15년 200개소/40천ha) 및 밭작물 주산지 육성(20개 품목, 241개 주산지)
- ③ (정예인력) 농고·농대 현장인력 육성 강화 및 농업분야 인력 20만명 증대
  -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 전환, 농대 내 영농창업특별과정 설치 추진
- ④ (수출확대) FTA 활용 및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 77억불 달성
  - 할랄식품 시장 심층조사·정보제공 및 인증지원 강화, 우리 농식품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 검역·위생·원산지 등 비관세장벽 해소
  - 상생협력 사례 본격 확산 위해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및 참여기업 인센티브 마련
- ⑤ (행복농촌)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20지구) 및 2030 귀농지원(‘귀농인의 집’·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농지구입, 정책자금 지원 등)
  - 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15개소),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1,200가구), 고령자공동이용시설(71개소), 행복버스(50회), 농촌형 교통모델(19개)

## 행사 개요

### < 행사 개요 >

- ◆ 일 시 : 2015. 1. 13, 10:00 ~ 11:50
- ◆ 행사내용 : 경제혁신 I 경제부처 합동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 참여부처 : 기재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6개부처)
    - \* 관련부처 : 산업자원부, 중기청
  - 보고내용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 (총괄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14년 성과 및 '15년 추진방향
    - (소주제 보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농식품부) 등 5개 주제
    - (토론과제) 공공부문 개혁방안 등 2개 과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다.
  - 올해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등 경제분야 6개부처가 경제혁신 I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합동 보고**하였으며,
  -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에서 5개의 **주요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추진 목표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 농정

## 핵심 과제

###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경영체 육성
-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산
- 농촌관광 활성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 첨단화, 규모화
- 정예인력 육성
- 농식품 수출확대

### 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 귀농·귀촌 촉진
- 정주여건 개선
- 주민 복지 증진

## 핵심과제 선정 배경

-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관세화, 한중FTA 협상 등 개방 확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금년에는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 특히, 박근혜정부 농정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5개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농업·농촌의 대응력을 높여나간다.
- 둘째, **맞춤형 농정**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전업농·중소농** 등을 **첨단화·규모화**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 셋째, **‘행복한 농촌만들기’**를 통해 귀농·귀촌 등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 유입**을 **가속화**하고 **영세고령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핵심과제 실천계획

### ①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차산업 창업자수 전년대비 10% 증대</li> <li>• 유통비용 절감액 7,300억원</li> <li>• 농촌 체험마을 이용자수 11백만명</li> </ul>
핵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제도(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 합리화</li> <li>• 산지구제 완화(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li> <li>•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의 경영체 1:1 맞춤형 지원</li> <li>•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누적100개소), 농수산물·중기 홈쇼핑 개국(6월)</li> <li>• 농촌관광 자원간 연계 강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li> </ul>
‘15년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 구축(3월)</li> <li>•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운영(6월)</li> <li>• 농촌관광 컨소시엄 육성(8개소, 4억원)</li> <li>•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7월)</li> </ul>



- **(‘14년 평가)** 농식품부는 농업과 2·3차산업을 융합한 **6차산업화 촉진**으로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지난해 6차산업 경영체 평균 매출액이 약 11% 증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2배 이상 증가(32개 → 71)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6차산업 관련 정책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였고, 6차산업 주체의 기술·경영능력·관료가 부족하였다.
  - 올해는 지역주체 중심의 자발적 6차산업화 확산과 함께 경영체 수준에 맞는 현장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농식품가공) 6차산업 창업자 수를 ‘14년 대비 약 10%**(‘14 : 396명 → ‘15 : 435) 늘린다.
  -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관리(D/B화)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충**(30개소)하여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6차산업화 전문펀드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투자를 확대한다.
  -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9월)를 구축하여 6차산업 경영체·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6차산업지구**(기존 3개, 신규 6개)를 조성하여 지역농업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 **농지제도를 합리화**(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허용)하고 **산림규제를 완화**(사유 휴양림 조성시 산지전용신고 의제)하는 등 산업융복합을 위한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 **(유통)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3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 원거리 소비자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Pos-Mall 활성화와 함께 ICT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운영하고,

-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 및 택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판로를 다양화한다.

○ 로컬푸드 직매장('15 : 100개소)과 꾸러미 사업을 확대하고,

- 공공기관·대기업 등 비농업계와 함께하는 상생 직거래 장터 (10개소 내외) 개설 지원 등 직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 (농촌관광)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여 체험마을 이용자수를 11백만 명으로 늘린다.

\* ('11) 692만명 → ('12) 884 → ('13) 1,052 → ('14.11월말) 930

○ 농업유산 등 지역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하여 음식관광 코스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8개소)한다.

○ 도시민의 수요에 맞추어 승마장(15개소), 휴양림·치유의 숲(11개소)을 늘려가고, 농촌관광 등급제(350개소) 확대 및 농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농촌관광의 품질을 높여 나간다.

## ② 첨단화·규모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보급면적 755ha(누적) 달성</li> <li>• 쌀 공동경영 면적을 40천ha으로 확대('14년 대비 25%↑)</li> <li>• 친환경 농산물 만족도 65점으로 증가('13: 60.9)</li> </ul>
핵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팜 보급 확대 및 농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강화</li> <li>• 창조마을(ICT활용 행복한 농촌마을) 표준모델 정립(미래부 등 협업)</li> <li>• 들녘경영체 수준별 차등지원방안 마련(4월), 지역맞춤형 모델 개발(6월)</li> <li>• 스마트팜 맵 활용·인공위성 이용 작황 예측시스템 구축</li> </ul>
'15년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대상을 양돈 → 양계까지 확대</li> <li>• 들녘경영체 진입요건(농지집단화 및 RPC 연계의무) 완화</li> <li>•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50ha→400)</li> <li>• 유통단계 GAP 인증제도 신설, 도축장 '순회감독제' 도입</li> </ul>

□ (**14년 평가**) 농식품부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ICT 융복합 확산, 공동경영체 활성화**를 통한 **첨단화·규모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ICT 융복합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쌀 들녘경영체 등 공동영농이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ICT시설 딸기 조수입(0.5ha 기준) : 71백만원 → 93

\*\* 들녘경영체 수 및 경영 면적 : ('13) 132개소(25천ha) → ('14) 158(32)

- 시설 노후화 및 간이 비닐하우스가 많아 ICT 확산에 한계가 있었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수준과 운용능력도 낮은 수준이다.

○ 올해는 경영체 DB를 기초로 전업농·중소농 등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강화하여 **첨단화·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전업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한다.

□ (**첨단화**) ICT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스마트한 농업·농촌**을 만든다.

○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축사시설 현대화와 함께 **첨단 스마트팜을 755ha**까지 늘리는 한편,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에 양계를 추가(기존: 양돈)한다.

- ICT 융복합 **실습형 교육농장**(15 : 8개소)과 **권역별지원센터**(15 : 4개소)를 늘려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ICT 모델을 개발(농진청)한다.

○ ICT 융복합을 **농업·농촌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유통망·에너지·스마트 러닝·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 **스마트팜맵**을 경작확인·재해보험 등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주요 작물의 작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규모화·조직화)** 지난해 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513%)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 공동경영 면적을 40천ha(14 : 32천ha)까지 늘린다.**
  - 농가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들녘경영체 진입요건**(농지집단화·RPC 연계의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50ha → 400)한다.
  -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체계\*** 구축(4월) 및 **지역특성에 따른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모델\*\*** 개발(6월) 등을 통해 **들녘경영체 운영을 내실화**한다.
    - \* (예시) 예비단계 : 컨설팅, 기초장비 지원(현재수준) → 심화단계 : 농기계 사업, 기반정비 사업 등 우선지원
    - \*\* 쌀 전문 생산형, 이모작형, 조사료-축산 결합형, 6차산업형 등
  - 밭작물의 경우 한중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 밭기반 정비, 밭 기계화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한층 강화**한다.
  -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난해 40만원/ha에서 **50만원/ha으로 인상**한다.
  - **밭직불금**은 품목제한(기존 : 26개 품목)을 폐지하여 **모든 밭작물에 지급**(신규품목 25만원/ha, 기존품목 40만원/ha)하고, 지목상의 밭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밭**에도 지원한다.

- 양파, 콩, 포도에 대해 수입보장보험\*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 등의 경영위험에 대비하여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을 일정수준 보장하는 보험상품

### ③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농업인력 중개 20만명</li> <li>• 전문농업인(강소농, 후계농, 마이스터) 7만명 교육</li> <li>• 개발기술 사업화율 35% 달성('14: 30)</li> </ul>
핵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교육 중심으로 농고·농대 교육과정 개편</li> <li>• ICT 등 첨단기술교육 강화 및 해외선진기술 습득 지원</li> <li>• SNS 활용 실시간 현장문제 해결 스마트 학습조직 확산</li> <li>• 농업분야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등 창·취업 지원</li> </ul>
'15년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주산지에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 설치(토마토 대학)</li> </ul>

□ ('14년평가) 농식품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지난 해 한농대 졸업생 소득이 향상\*되고,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이 상승하는('12: 75.4 → '14: 76.1)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 농업인 평균 3,452만원, 도시근로자 5,527, 한농대졸업생 6,814

- 농업인 교육과정이 단기 체험 위주로 운영되어 영농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었으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영농인력 수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하였다.

-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젊은 인재가 농업분야에 창·취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인력중개시스템도 정비한다.

□ **(교육·훈련)** 농업을 전공한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하여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 타 단과대와 협력하여 첨단기술·영어·경영 과목을 중점 교육하고 기업 인턴십·해외연수 등으로 견문 확대

○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 올해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첨단농장 관리기술** 중심의 단기(3개월) 집중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육묘, 재배방식, 병충해 진단·방제 등 기본교육 강의 → (토마토 대학) ICT 설비 제어기술, 재배환경 실시간 진단·활용 관련 이론과 현장중심 실습

○ 현장의 문제를 전문가·선도농 등 품목별 멘토와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학습조직(20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창업보육)**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창·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 확대, 2030세대 농지지원(2,300ha)** 등을 추진한다.

○ **인턴십, 농업마이스터, 식품명인** 등 현장과 연계한 도제식교육을 강화하고, **청년·새터민·제대군인** 등을 위한 유형별 영농교육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창업보육센터(5월)** 및 **창조경제타운(미래부 협업)** 등과 연계하여 기술력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 **농산물종합가공센터(30개소)**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창업 지원 거점으로 활용한다.

- 연구개발 기업에 연구기관의 **기자재·실험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후 컨설팅·시제품 제작·양산화·판매 등을 **창업단계부터 성장·성숙단계까지 원스톱 지원**할 예정이다.

- (인력수급) 도시 유희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농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중개시스템을 개선한다.
  - 단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시·군 단위 인력 중개(158개 시군, 연간 20만명)로 연령별·계절별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광역단위 인력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인력수요 전망에 따른 안정적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④ FTA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활용, 신시장 개척을 통해 농식품 수출 77억불 달성</li> <li>• FTA 체결국 수출비중 40%로 확대</li> <li>•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례 20건으로 확산('14: 14건)</li> </ul>
핵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시장별 특화전략 지원, 검역 등 비관세 장벽 해소</li> <li>• 농수산식품 특화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지원(산업부 협업)</li> <li>• 해외 온라인 쇼핑몰·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li> <li>•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도화</li> </ul>
'15년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등 FTA 체결국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li> <li>• 할랄식품시장, 온라인 마켓 등에 대한 공세적 시장 개척</li> <li>• 농식품 수출기업 중심의 통합적 애로해소 지원</li> </ul>

- ('14년평가) 지난 해 농식품 수출이 61.9억불을 기록하는 등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입국의 위생, 검역, 원산지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올해는 FTA 체결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할랄식품·온라인 마켓 등 거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애로해소와 함께 농업과 기업간 상생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고품질 전략) 농식품부는 FTA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對중국 수출전략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규모화·전문화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수출상대국의 검역 및 수출여건 등을 감안하여 **Global GAP 인증도** 추진한다.
    - **GAP(10%)·HACCP(37%) 인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고품질 안전농식품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 GAP 인증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 분석된 필지는 **토양·용수분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 '**2중-check 시스템** (민간인증기관+농관원)'을 구축(1월)할 예정이다.
- (애로해소) 농식품부는 수출농가·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애로해소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액 77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 서류 간소화(2월)**를 추진한다.
    - \* 온라인을 통해 FTA 체결국별 원산지 기준 확인·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등 편의 제고
  - **검역·위생기준 등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일본·미국 등 10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수출자 등록·라벨 등록 등 통관 지원도 확대('15: 4.9억원)하고,
-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식품 시장을 심층 조사**(동향, 인증 기준, 유망품목 등)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R&D·인증 지원** (인증비용 90% 지원)등도 **강화**한다.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컨설팅**도 실시한다.

\* 한국 농식품 판매관 기개설 : 中 ‘1호점’('13.10), 中 ‘알리바바’('14.10) 등

□ **(상생협력)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자본 및 해외 유통망 활용을 강화한다.

\* 롯데마트 사례 : 국내 업체 중 최대 규모의 해외매장 운영(중국 103개소 등) → 한국식품 Zone 구성·운영('11.11), 중국 매장 내 ‘국산 양파’ 판매('14.11)

○ 대한상의 내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별·분야별 상생협력 로드쇼**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1월부터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하여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공유한다.

- 상생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농촌 사회공헌 인증제 등 검토)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 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 건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30개 지구(1,200가구) 시행</li> <li>• 연금보험료 수혜자 311천명으로 확대</li> <li>•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 14천호로 확대</li> </ul>
핵심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육성</li> <li>• 체감형 복지 인프라 확대(농촌형 교통모델, 행복버스 등)</li> <li>•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 등 고령농 복지서비스 확충</li> </ul>
'15년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추진</li> <li>•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14: 85만원 → '15: 91)</li> <li>•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합리적 조정(70% → 80수준)</li> <li>• 농지연금 가입 대상자 소유농지 면적 기준(현행 3ha) 폐지</li> </ul>

□ (**'14년평가**) 농식품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FTA 확대에 소외되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 해에는 농촌 특화형 서비스 확대에 농촌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되고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 복지·문화·환경·안전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12) 만족도 36% → ('14) 41      \*\* ('12) 27천호 → ('13) 32.4

○ 올해는 젊은 층 등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충과 영세고령농 생활안정에 집중한다.

□ **(귀농·귀촌) 인력·기술·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4천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20지구**로('14 : 15) 늘리고,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대학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을 10개 학교에 개설하고, '귀농인의 집'·채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실시한다.

\*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요건 : 2,000㎡ 이상 → 660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설계, 6차산업화 공모전을 개최(8월)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도 추진한다.

□ **(정주여건)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농촌 서비스 전달 거점인 **중심지 선도지구**를 **육성\***하고, 슬레이트 철거 등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1,200여 가구)를 실시한다.

\* 중심지 선도지구 육성 : ('15) 15개 지구 → ('17) 54개 지구(누적)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형 교통모델**(19개) 등 **체감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30세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보육·교육·문화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공동아이돌봄센터(34개소) 및 주말돌봄방(15개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교육부), 작은 영화관·도서관 지원(문화부) 등

□ (생활안정)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11천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영세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각각 17천, 15천 가구로 확대하고, 공동  
생활홈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충(75개소 → 146(누계))할 계획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14 : 85만원 → '15 : 91)하고,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 추진한다.

\* 담보농지 감정 평가율 합리적 조정(70% → 80 수준) 및 소유농지  
면적기준(현행 3ha) 폐지

= 이동필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제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 2015년 업무계획



농업,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다!

경제  
영역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2015년 업무 계획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I. 2014년 농정 평가 .....	79
II. 2015년 정책여건 및 농정방향 .....	87
III.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95
1. 글로벌 경쟁력 제고	
(1) 들녘주산지 중심 규모화·조직화 .....	99
(2) ICT 융복합 확산 .....	104
(3) 전문인력 양성 .....	109
2. 농식품산업의 융복합 촉진	
(1) 농업의 6차산업화 .....	117
(2)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126
(3)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	134
3. 수출확대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 수출 확대기업과 상생협력 .....	145
(2)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155
(3)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162
4.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1) 정주여건 개선 .....	177
(2) 농촌주민 복지 증진 .....	182
(3) 소득 및 경영 안정 .....	185
IV. 2015년 현안업무 추진계획 .....	191
1.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	193
2. 쌀 관세화 대응 철저 .....	197
3. 가축질병 대응 강화 .....	203
V. 일하는 방식의 전환 .....	211



## I. 2014년 농정 평가

1. '14년 농정과제
2. 주요 농정성과
3. 미흡한 점



# 1. '14년 농정과제

□ (중장기 농정방향) 국정과제 실천 및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 농정 로드맵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3~17)」 수립(13)

\* 정부 출범 초기 농정철학 부재 및 농정방향 상실 등에 대한 비판 제기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농정비전으로 설정

- 고령화, 양극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설정

○ 경쟁력, 소득, 복지의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



□ ('14년 농정과제) 박근혜정부 1년차 성과를 바탕으로 2년차 성과 확산 및 쉼관세화·한중FTA 등 현안해소를 위해 3대전략·9대과제를 선정, 속도감있는 농정 추진

1 년 차 성 과	☆ 박근혜정부 농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양호 53%, 보통 13%
	☆ '13년 농가소득이 전년(31백만원) 대비 11.3% 상승(34백만원), 19년 만에 최고(통계청)
	☆ '13년 주요성과: 5대 채소류 가격변동 완화, 쌀 풍작 및 가격안정, 한우 돼지고기 가격안정, 재해보험 확대, 농지연금 가입증가, 직거래인프라 확충 등

○ 경영체DB구축을 통한 비정상외 정상화, 지역과 경영체의 자조·자립과 책임성 제고, 역량결집 및 협업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농업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수급·유통 개선
① 6차산업화	④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	⑦ 안전 농식품 안정적 공급
② ICT·BT융복합 첨단산업화	⑤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	⑧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③ 개방화 대응 및 수출확대	⑥ 체감형 농촌 복지 서비스 향상	⑨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개발

## 2. 주요 농정성과

### ① 위기 극복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마련

□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쌀 관세화 결정(7월), WTO 통보(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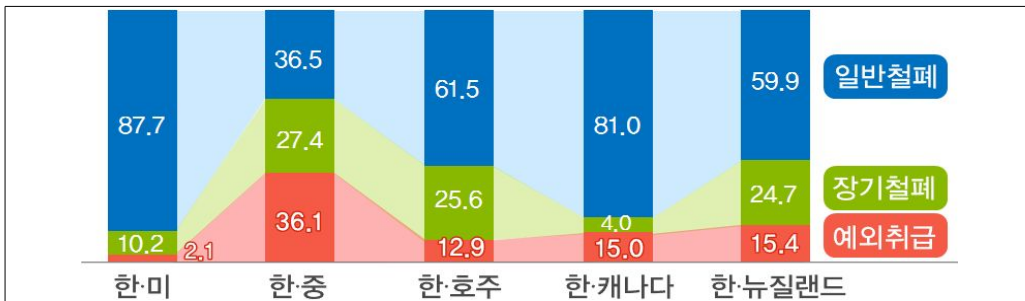
☆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최대 농정과제인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달**  
 \*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농해수위·산업위 등 9차례 국회 보고

- 주요 농업인 단체가 **정부입장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쌀 관세화가 큰 갈등 없이 마무리
- 쌀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 안정,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쌀 소비 확대,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9월)

□ **한중 및 영연방 FTA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 한미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타결**

\* 타결 시기: 호주('13.12), 캐나다('14.3), 중국('14.11), 뉴질랜드('14.11), 베트남('14.12)

- 국가별·품목별로 **협정제외(쌀), 양허제외, 저율관세(TRQ), 계절관세, 부분감축, 농업세이프가드(ASG, 영연방)** 등 다양한 **예외수단 확보**



-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계는 **한중 FTA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 한중 FTA 등 협상과정에서 약 180회의 전문가회의·설명회 등 개최

□ **FTA 보완대책**을 넘어 한중 FTA 이후 전면적 개방화에 대비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대도약 기반 마련

\* 영연방대책(2.1조원 추가 지원, '14.9),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토론회('14.11)

## ② 농업의 6차산업화 및 ICT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 6차산업화 성공사례 확산에 따른 부가가치·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 창업자가 전년 대비 8.8% 증가하고, 6차산업 예비인증자의 매출액도 전년대비 11.2% 증가

☆ 예산 사과와인은 6차산업화 추진 이전 사과생산 만으로 연 8천만원 매출을 올렸으나, 6차산업 추진으로 연 6.1억원 매출 달성(사과3.5억원, 와인 1.3, 체험 1.3)

☆ 여수 거문도해풍숙 영농조합법인 고용인원은 '12년 17명에서 27명('14)으로 증가

□ 들녘경영체, ICT융복합으로 생산성·품질 향상 및 첨단화 촉진

○ 5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158개 육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ICT 융복합 모델 개발(13종) 및 1,280농가 보급

\* 들녘경영체(생산비 7.1% ↓), ICT융복합모델(시설원예: 노동비 20% ↓, 생산성 30% ↑, 양돈 : MSY 3.2두 ↑)

## ③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엔화가치 하락, 비관세장벽 강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식품 수출('14)은 국가전체 증가율(2.4%) 보다 높은 8.1% 증가(61.9억불)

○ 중국 권역별 수출전략 등 정보제공(KOTRA/aT, 3월), 검역협상 타결('14 : 12건) 및 수출보험·통관 지원 등 현장애로 해소

□ 대한상의회 MOU('14.8)체결 및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설치('14.9)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14건) 등 농업과 기업의 협력 기반 구축

## ④ 농가소득 안정 및 체감형 복지 향상

□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3 : 80만원/ha → '14 : 90) 및 논 이모작(식량·사료) 작물에 직불금 신규 지급(40만원/ha)

□ 재해보험 확대('12 : 51품목 → '14 : 59) 및 재해지원 제도 개선

\* 보상기준 표준가격 인상(특정5종 6.4% ↑, 벼 5.6% ↑), 자기부담비율 다양화(70·80% → 60·70·80·85), 최저 가입면적 기준 완화, 가입기간 연장 등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21개 항목), 재해지원 절차 간소화, 재해 농가 복구의무 폐지 등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 \* 농경지유실, 과수재배시설, 농약대 등 평균 19.5% 인상('14)

□ 영세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배려농정** 확대

- **공동생활홈**(35개소), **공동급식시설**(26개소), **작은목욕탕**(14개소) 등 3,000여명 수혜
  - \* 경로당 등 가사도우미 확대(14 : 16백개소), 65세 이상 1인 가구 지원(2월)
- 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시범사업** 시행(13개소)
- **농지연금**(2,927명 → 3,963) 및 **연금보험 가입자 증가**(290천명 → 317천명)

**⑥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로컬푸드 등 신유통확산**

□ 양파는 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 급락세를 방어하고, 배추, 마늘, 무 등도 조기에 **평년수준을 회복**하거나 **가격안정구간 진입**

\* 양파 : (1월) 760원/kg → (3월) 558 → (6월) 430 → (9월) 548

□ 축산물은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민관공동 상시 수급관리 및 자율감축, 소비촉진 등으로 **한우, 돼지가격 등이 평년수준 상회**

\* 한우 큰수소('13 : 502만원/600kg → '14 : 541), 돼지('13 : 30만원/110kg → '14 : 40)

□ 직거래 인프라 확충으로 **신유통경로**를 통한 거래액이 전년대비 27.9% 증가(6.5조원)하면서 **유통비용 절감액**(6,200억원)이 47.6% 증가

**⑥ 스마트 농정 체계 구축으로 농정성과 확산 기반 마련**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1,891마을 참여) 추진으로 자조자립 정신 제고

□ **농업경영체 DB 구축 및 관련 정보 연계**를 통해 **스마트농정 기반 구축**

- **경영체 DB 일체갱신**으로 경영주 인적사항, 농지면적, 판매금액, 소득, 보조금 지원현황, 면세유 배정량 등 93개 정보 DB 구축
- **경영체 DB와 농림사업 연계·통합** 및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된 보조지원 시설(87천건) DB화

□ **지역단위 농발계획 수립**(14개 시·도, 163개 시·군·구) 추진으로 지역중심 농정추진 기반 구축



### 3. 미흡한 점

#### ①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 사례 지속

-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보조금 유용 등 부정수급 사례 증가
  - \* 부정수급 적발현황(총액대비) : ('11)645백만원(0.01%) → ('12)3,725(0.05) → ('13)5,785(0.1)
- 보조금 편중 및 부적격대상자 선정으로 재정 투융자 효과 저하

#### ② 가축질병 발생 및 수급불안 등 현안해소 미흡

- 지속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 및 구제역 발생
  - 예방접종 등 체계적인 사전예방시스템 작동 미흡 및 농가·계열화 사업자 등 현장 방역주체의 자율적 책임 방역의식 부족
- 민간 자율적 수급관리 역량 부족으로 농산물 수급불안 발생
  - '14년 초부터 지속된 채소류(양파, 배추 등)의 동시다발적 공급과잉 등 이례적 상황에서 정부중심 수급대책의 한계 노출
  - 우유는 생산감축 및 소비촉진 노력에도 잉여량 증가
    - \* 분유 재고량 : (평년) 4.3천톤 → ('13.12) 7.3 → ('14.3) 14.3 → (14.10) 15.8

#### ③ 공감대 부족 등으로 일부 정책의 성과 확산 미흡

- 농식품 R&D와 정책간 연계성이 낮아 현장 활용도가 저조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인식부족으로 가입률 정체
- 6차산업화, 전통주산업,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관련 분야 규제로 농업농촌경제 활성화 제약
  - 규제 합리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등 적극적 노력 부족



## Ⅱ. 2015년 정책여건 및 농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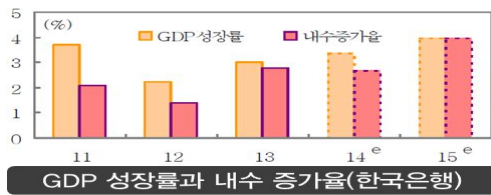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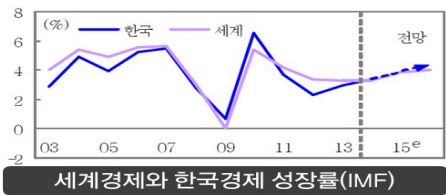
1. 정책여건
2. 농정방향
3. 추진체제도



# 1. 정책여건

## 가 국내외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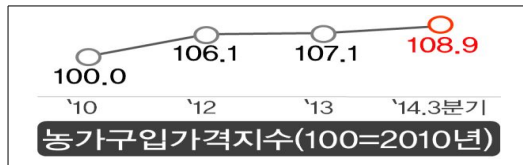
- '15년 세계경제는 '14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2014년도와 비슷하게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가능성 상존



- 국내경제는 올해 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금리인하, 내수활성화로 전년보다 호전되고, 고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호조세로 전환 전망

## 나 농가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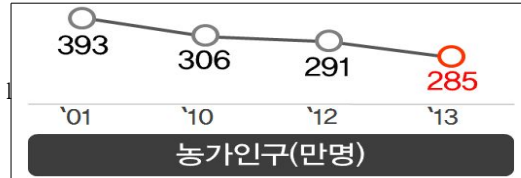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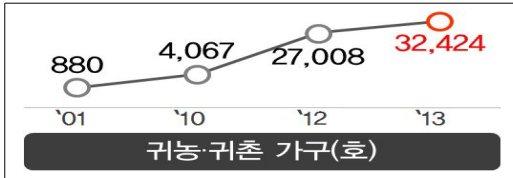
- 쌀 관세화 시행, FTA체결(영연방, 중국, 베트남) 확대 등 개방화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증가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발효시 농가 경영압박 전망
  - AI 및 구제역 추가 발생 가능성 상존으로 축산농가 등 어려움 예상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이나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가능성 존재



- 기상호조로 옥수수, 콩의 생산량이 역대 최대('14/'1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 전망
  - \* 국제곡물 선물가격(전분기 대비) : '14년 4/4분기  $\Delta$ 9.1%, '15년 1/4분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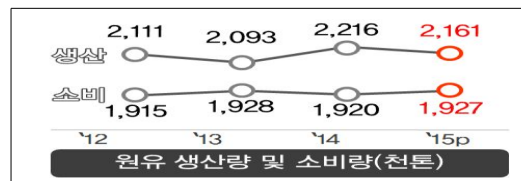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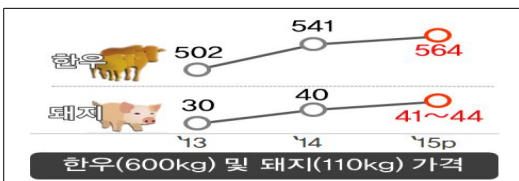
## 다 농촌경제 전망

- 농업 취업자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한편, 농가 경제활동이 다각화되어 농외소득 활동이 증가할 전망
  - \* 농림어업 취업자수 : ('08) 1,569천명 → ('13) 1,426 → ('18p) 1,355
-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농촌에서도 인구 유입량이 유출량을 초과하는 사회적 인구감소 반전 사례 발생
- 귀농·귀촌 등 외부 인구 유입은 농촌 활력창출 요인이 될 전망



## 라 농축산물 수급 및 수출

- 농축산물 수급은 품목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쌀은 연이은 풍작과 소비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며, 주요 농작물 생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해 공급압력은 줄어들 전망
- '15년도 축산물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되며, 우유는 가임 암소수 증가, 시유 소비정체로 잉여량 발생 예상



- 국가 전체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금리인상, 중국 성장둔화, 일본 엔저현상은 수출 위험 요인

## 2. 2015년 농정방향

### 가 기본방향

- 전면적 개방화 체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의 위기에 대응하여 **3년의 농정혁신을 통해 30년의 성장**을 견인
  -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 농정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방안**(14.11)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실천
  - 지난해 말 타결된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과의 FTA대책 수립을 통해 농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 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 선정

- **(전략1) 전면적 개방화 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식품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
  - **들녘단위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품질향상, **ICT융복합**을 통한 생산성·안전성 제고 및 **과학·기술농업 선도 주체** 육성
    - \* ①들녘·주산지 중심 규모화·조직화 ②ICT융복합 확산 ③전문인력 양성
- **(전략2)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 **지역친화형 로컬푸드 확산** 및 **농촌관광 품질 향상**
    - \* ④6차산업화, ⑤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⑥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 **(전략3)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수출시장 개척과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신시장 창출, **농자재·신소재** 등 미래 전략상품 개발 추진
    - \* ⑦농식품 수출확대·기업과 상생협력, ⑧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⑨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전략4)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고령농 배려** 및 **소득·경영안정 장치 확충** 등
    - \* ⑩정주여건 개선, ⑪농촌주민 복지 증진, ⑫소득 및 경영 안정

## 다 FTA 등 개방화 대책 수립

### FTA 등 철저한 개방화 대책으로 정책 주동력 확보 및 농정신뢰 회복

- 개방화 및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이 농가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책부담으로 작용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주동력을 확보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개방화대책 수립 필요
- FTA 체결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별·품목별 대책을 수립
  -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밭 농업 중심 기반정비, 기계화, 인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수립
    - 직불제 확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농가경영 불안요인 최소화
  - 국회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충실하게 검토

## 라 스마트 농정 정착화

### 스마트 농정을 통해 농정 체감성과 확산

- 박근혜정부 3년차 체감성과를 확산하여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농정의 정착화를 추진
- 금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 농정 및 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 경영체DB, 지역단위 농발계획 등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여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사례 해소
  -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은 전면 개선
  - 관련부처, 산하기관, 도시 등 외부와의 협업 활성화



### 3. 추진체계도

**추진 목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 추진

**중점 추진과제**

- 글로벌 경쟁력 제고**
- ① 들녘·주산지 중심 규모화·조직화
  - ② ICT 융복합 확산
  - ③ 전문인력 양성

- 농식품산업의 융복합 촉진**
- ④ 농업의 6차산업화
  - 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⑥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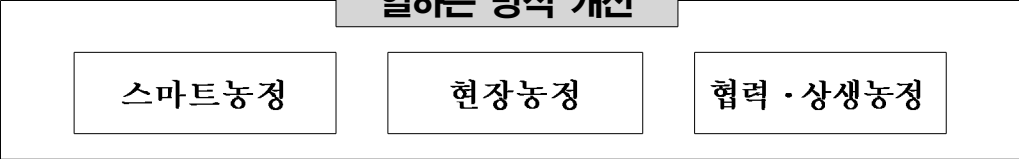
- 수출확대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 ⑦ 농식품 수출확대·기업 상생협력
  - ⑧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⑨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 ⑩ 정주여건 개선
  - ⑪ 농촌주민 복지 증진
  - ⑫ 소득 및 경영 안정

**당면 현안**

- ① FTA 대책 추진
- ② 쌀 관세화 대응 철저
- ③ 가축질병 대응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Ⅲ.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글로벌 경쟁력 제고

1. 들녘·주산지 중심 규모화·조직화
2. ICT 융복합 확산
3. 전문인력 양성

② 농식품산업의  
융복합 촉진

4. 농업의 6차산업화
5.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6.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③ 수출확대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7. 농식품 수출확대·기업과 상생협력
8.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9.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④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10. 정주여건 개선
11. 농촌주민 복지 증진
12. 소득 및 경영안정



## **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1. 들녘·주산지 중심 규모화·조직화**
- 2. ICT 융복합 확산**
- 3. 전문인력 양성**



# 1. 들녘·주산지 중심 규모화·조직화

[국정과제 33-3]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 농업 선진국에 비해 영농 규모가 영세하여 농업 경쟁력 확보에 불리한 조건
  - 소규모 농가단위 경영으로는 농자재·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에 한계
    - \* 1인당 경지면적('11) : 한국 0.6ha, 프랑스 15.9, 미국 32.3, 호주 55.3
    - \* 쌀 농자재 비용(천원/10a) : ('11) 98 → ('12) 99 → ('13) 101
-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규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필요
  - 쌀 들녘경영체를 '17년까지 500개소(290천ha, 쌀 재배면적의 36%) 육성하여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발전 견인
    - \* 영농법인 중심의 규모화된 공동경영체(200ha 수준) 및 RPC(234개) 중심의 공동영농·계약재배 단지 확대
  - 밭 공동경영체를 주산지 중심으로 '17년에 40개소(46천ha)로 확대하여 생산-유통-수급조절의 주체로 육성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쌀 들녘경영체 조직 및 공동경작면적이 크게 증가
  - \* ('09) 12개소(1,786ha) → ('13) 132(25,026) → ('14) 158(31,968, 평균 200ha)
- 40개 들녘경영체 조사 결과('14.12), 노동비를 중심으로 생산비가 전국 평균 대비 7.1%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 \* 직접생산비 : 전국평균 440,323원/10a, 들녘경영체 409,162

## 나 미흡한 점

- 들녘경영체 개념 및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조직화·규모화를 저해하는 규제\* 존재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직불제 상한이 50ha에 불과하고, 들녘경영체 참여농가가 농지 이용권을 법인에 이전하는 것도 예외적으로만 인정

- 들녘경영체 운영이 공동 육묘·방제 수준에 그쳐 단일영농계획 수립 등 공동경영 심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 벼 단일 품목 경영체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소득증대형 지역 공동 영농체로의 발전은 미미

- 밭농업은 영세소농이 많고, 다품목·소량 생산 및 개별 생산자 중심 시장 출하로 조직화, 공동경영체 육성에 애로

\* 밭작물 재배규모별 비율 : 0.5ha미만(39.8%), 0.5~1(24), 1~1.5(12.5), 1.5~(22.7)

\*\* 밭작물별 호당 재배면적('13) : 노지채소 0.12ha, 과수 0.55, 식량작물 0.11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쌀 들녘경영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 쌀 들녘경영체 : ('13) 132개소 (25천ha) → ('15) 200(40)

- ◆ 쌀 공동경영체 지원조건 완화·규제개선, 밭공동경영체 모델 정립 및 지원체계 구축

## 가 정책 추진여건

- 쌀 관세화 시행 등으로 우리 쌀의 입지 약화 우려

-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화·규모화 가속화 필요

\* '15년은 쌀 관세화 시행 첫 해로 농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쌀 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한중 FTA 타결로 발작물 중심으로 농가경영 위축 우려
  - 공동육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수급조절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나 | 쌀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화 · 고품질화**

**신규 들녘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들녘경영체 선정요건 완화 및 지원장비 확대(1월)
  - 분산된 농지도 공동영농 가능시 들녘경영체에 참여 허용 및 일정 규모 이상 도정시설 보유시 **RPC 연계 의무 면제**
  - 지원장비를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 3종에서 퇴비 살포기 등 **다른 종류의 공동 영농장비까지 확대**
    - \* 교육 · 컨설팅 80개소(14 : 59개소), 시설 · 장비 35개소(14 : 20개소) 지원

**들녘경영체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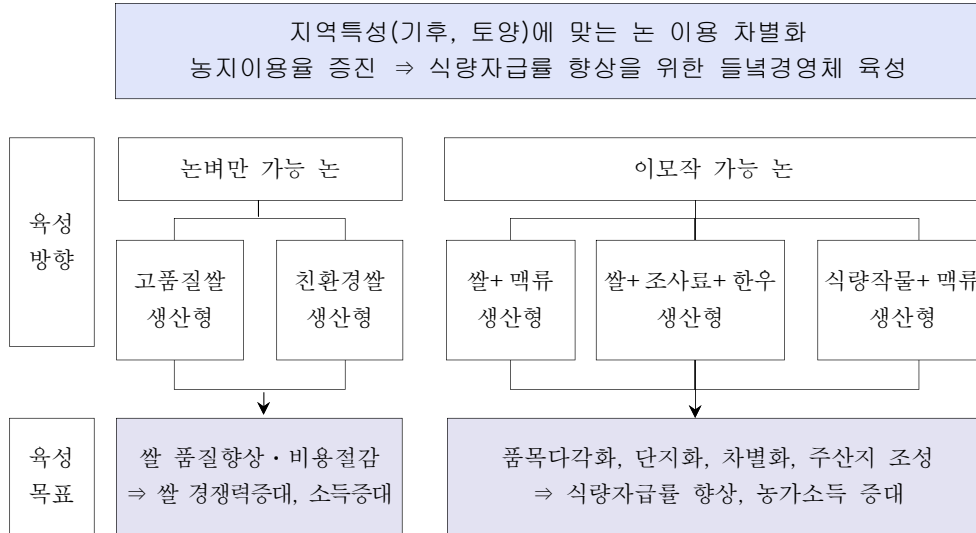
- 들녘경영체 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예비단계와 심화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체계 마련 및 사업지침 개정(4월)

**< 단계별 지원체계(예시) >**

	예비단계	심화단계
공동경영 수준	○ 일부 농작업 공동 수행 (방제, 육묘 등)	○ 단일영농계획 수립 · 시행 (작목, 품종, 영농일정, 재배방법 등) ○ 잉여 노동력 활용 등
지원 방안	○ 교육 · 컨설팅, 기본 시설 · 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 농기계 · 농지은행사업 · 재해보험 · 생산기반사업 우대 장비 추가 지원 등

- 예비단계 경영체 및 고령·중소농 참여가 많은 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핵심리더 양성 교육과정 운영**(5월~)

- 쌀과 맥류 등 이모작형, 조사료 생산과 가축사육 결합형, 대규모 간척지 쌀 전문 생산형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모델 개발·확산
- 지역별·조건별 적용 가능 모델 및 운영 표준안 마련·보급(6월), 모델별 적용 실태조사 및 모델 보완(12월)



**들녘경영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들녘경영체 지원 기관 협력체계 및 들녘경영체간 네트워크 구축
  -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진청, 농협, 들녘경영체, RPC,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애로사항 해결시스템 구축
  - ‘들녘경영체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국단위 들녘경영체 공식 협회(사단법인) 발족(8월)
-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 들녘경영체의 개념, 자격, 지정,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월 국회제출)
  -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ha→400로 확대하여 규모화 및 경영개선 유도(1월)

## 다 | **밭 공동경영체를 통한 규모화 · 품질제고**

**주요 품목 중심으로 밭 공동경영체 육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양파, 대파, 당근) 중심으로 우선 추진 후 여타 품목(배추, 무, 마늘, 사과, 배 등)으로 확대
  - 품목별 적용 가능 사례를 유형화하고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경영체의 규모, 기능 등 모델 정립

**공동경영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先 조직화 後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경영기반 구축 필요사업 우선 지원
  - 노동력 절감을 위해 공동 경영체에 임대 농기계 책임 운영권(3개소)을 부여하고, 노후 관수시설 · 지주시설 · 비가림시설 등 현대화(1개소)
  - 공정육묘장(4개소)을 설치하여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공동선별 · 공동출하 및 GAP(5개소) 인증 확대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컨설팅지원팀을 구성 · 운영(3월)하여 경영체 진단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15 : 30백만원)

**밭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거점 APC 등과 연계하여 유통효율성 제고 및 수급조절 체계화
  - 지자체 산지유통종합계획에 공동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유통계열화
    -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로 조합공동사업법인 · 연합사업단, 시군유통회사 등 농산물 통합마케팅을 대행하는 조직
  - 자율적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관측정보 제공,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지원, 재배면적 조정 관련 협의체 구축
-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성을 고려한 재배기술 표준화 및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공동경영체의 기술지도 전담인력 지정

### 1 추진배경



- 해외 농업 선진국들은 ICT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ICT 활용은 아직 미약
  - 재배여건이 불량한 **비닐온실**과 10년이상 **노후화된 온실**이 대부분(90%)을 차지하여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에 한계**
    - \* 전체시설면적(53천ha) 중 유리온실은 1%(587ha), 비닐온실은 99%(52천ha)
    - \* 생산성(한국 vs 和) : 파프리카 19톤/10a(64%) vs 30, 양돈 MSY 16.7두(66%) vs 25
- 우리나라의 첨단 시설재배 및 사육기술과 세계 최고 ICT 기반을 융복합하면 **효율성과 新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농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농업·농촌을 스마트화하기 위해 ICT 융복합 확산 필요**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원격·자동 환경제어를 통해 **최적 생육관리**가 가능한 **ICT 융복합 스마트 온실** 및 **축사의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성공사례 창출**

<ICT 융복합 온실 및 축사 사례>

스마트 온실(담양, 딸기)	지능형 양돈관리(장수,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습도 등 수집된 정보를 분석 재배작물의 최적성장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의 온습도 환경관리와 CO<sub>2</sub> 양액공급 등 생장관리 최적화 등 복합환경관리</li> <li>- 노동력 절감(20%), 생산성 증가(30%) 등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와 자동급이기 등을 제어하는 지능형 양돈 사양관리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체별 사료급여 음수관리 등 사양관리 CCTV·화재센서 등을 활용한 환경제어 위험관리</li> <li>- MSY : (전) 15.2두 → (후) 18.4</li> </ul>

## 나 미흡한 점

### □ ICT 융복합 첨단시설의 현장 확산이 느리게 진행

- ICT를 적용한 첨단농업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필수적이거나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한 실정

\* (사례) ICT 융복합 사업에 딸기재배 109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시설여건이 양호한 33농가만 지원

- 지자체, 농가 등의 ICT에 대한 인식 미흡, 전업농가의 ICT 융복합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이 ICT의 전면적 확산을 저해

### □ 주요기술의 국산화 및 표준화 등 ICT 융복합을 위한 산업기반 취약

- 관련 ICT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ICT 시설 보급, 사용법 교육,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농가의 ICT 활용능력도 낮음

\* 국산 주요 복합환경제어기 생산·판매 기업 직원수 : 10여명 내외

\*\* 프리바(네덜란드)의 경우 시설설치 전단계부터 데이터 기반의 재배기술 컨설팅까지 일관 지원

- 농업기자재 등 농업중심 기업체와 IT중심 기업간의 협력체계 미흡

\* 확산사업 참여업체 제품·부품(센서, 제어기 등) 상호 호환성 부족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ICT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현대화와 첨단 스마트 팜 확산

- ICT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원예시설을 현대화('15 : 25%)하고, 첨단 스마트팜을 755ha로 확대

\* 현대화/첨단온실(누계) : ('13) 10,500ha/345ha → ('15) 13,200/755

- 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을 양돈에서 양계까지 확대

### ◆ ICT 융복합 지원을 생산분야 중심에서 농업·농촌 전분야로 확대

## 가 정책 추진여건

-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원예·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에 대한 관심 증가

\* ICT 적용 희망농가('13, 농정원) : 원예 43%, 양돈 41%

- 개방 확대에 의한 불안심리, 농산물 저가격 기조\*, 시설비용 등으로 농가의 ICT 시설 도입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토마토 가격(도매가격) : ('10) 3.1천원/kg → ('13) 2.9 → ('14) 2.5

## 나 ICT 융복합 스마트 팜 확대 보급

**원예·축산농가 등에 스마트 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시설원예는 개발된 모델의 현장확산에 주력하고, 기존사업과 연계, ICT 융복합 농장을 정착하여 과학적인 첨단·정밀농업 실현

-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시 자동개폐·온습도·양액관리 시설 등 ICT 융복합을 포함하여 지원('15 : 1,150ha)하고, 지원대상에 육묘장 추가

- 수출·고소득 품목(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중심으로 ICT 적용이 가능한 온실 대상 **첨단 스마트 온실 보급 가속화**

- 원예전문단지 중심으로 복합환경제어기능 탑재 첨단 스마트 온실 보급

- \* 첨단온실 신축 : 20ha, 첨단 스마트 온실(복합환경제어/원격환경관리) : 330ha

- 축산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양돈 등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면서 양계 및 소 등으로 대상 확대

- \* ('14) 양돈 30호, 59억원 → ('15) 양돈·양계 120호, 89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5 : 2,768억원) 및 금리 인하(3% → 2)

## 스마트 팜 농가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 ICT 활용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2월~)

- 농가의 ICT 융복합 적용 최적화를 위해 ICT 시설도입 단계별 (사전-설치-확인)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14 : 8억원 → '15 : 9)
- 현장에서 체험하고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습형 교육농장 확대\*  
\* ICT 교육농장(누계) : ('14) 3개소 → ('15) 8(원예 7, 축산 1) / 교육인원 : 800농가
- 현장지도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권역별지원센터 설치·운영  
\* 권역별 지원센터(누계) : ('14) 1개소(전남 농업기술원) → ('15) 4(충남·전북·경남 추가)

### □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성·운영(1월~)하고 현장 수요기반 애로기술해결 R&D 추진

- 한국형 최적 재배환경모델 및 환경조절 기술개발(농촌진흥청, 12월)  
- 농촌진흥청 주관 산·학·연 합동으로 품목별 최적 생장 알고리즘 개발연구('14 : 20억원 → '15 : 30)

### □ ICT 융복합 조기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소개 등 홍보 강화

- 권역별(경기, 충청, 전라, 경상) 사업내용 관련기업 제품 설명회 개최(1월) 및 우수 현장사례집 및 시설원예 환경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월)

## 다 ICT 융복합을 농식품·농정 전문야로 확대

## ICT기술을 적용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농업현장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 원격감시 및 로컬푸드 사업을 융복합한 창조마을을 건설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 농촌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 ICT와 농촌의 유통망·에너지·스마트러닝·문화 등을 융합하는 창조마을 표준모델 개발

- 농촌관광형, 첨단농업형, 수출중심형, 도시교류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필요한 ICT 기술을 적용한 표준모델 마련

- 사업단 공모(1월), 표준모델(안) 마련(5월), 의견수렴 및 보완(8월)

□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실증을 거쳐 본격적 확산 추진

- 유형별 1~2개소 대상 시범사업 및 현장실증 실시(15.하)

\* 전문가, 학계,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증 점검단 운영

- 실증결과 분석을 거쳐 본 사업 확산 방안 마련

- 미래부, 산업부 등과 연계, 농업 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하여 추진

\* 비타민프로젝트(미래부), 에너지자립(산업부), 정보화마을(행자부), 원격의료상담(복지부) 등

**ICT융복합을 농정 전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농식품 전반에 ICT 융복합 선순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

- ICT 융복합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한 민간기업, 관련기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구축(5월)

- ICT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창출 R&D 프로젝트 추진(15.하 예타신청)

□ 과학 농정을 위한 ICT 기반의 통합정보체계 구축

- 위성·항공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3개도(경북·경남·제주) **농경지 구획** (논, 밭, 과수원 등) **전자지도** 작성('14 : 3개도 → '15 : 6)

- 전자지도에 농업경영체·통계·행정정보 융합,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체계 구축 등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 기반 마련



#### 1 추진배경

- 농업 인력 고령화\*로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능력을 갖추고 개방 확대에 대응할 정예인력 확보에 어려움 예상

\*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 ('11) 48.6% → ('12) 51.3 → ('13) 53.5

- FTA 등 개방 확대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바이오 매스, 기능성 식품소재 등으로 농업의 외연 확장 추세

- 6차산업화 등에 따라 농고·농대 교육과정을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분야 위주로 재설계하여 젊고 역량있는 인력 육성 필요

\* 농고/농대 농업분야 창·취업률 : ('13) 17.1% / 34.3% → ('14) 18.3 / 34.3

-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ICT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농업법인·선도농가 실습 확대, 진로탐색·자격증 취득 강좌 제공 등 농업계 학교교육과 농업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 장·단기 현장실습교육 참여인원 : ('13) 6,669명 → ('14) 7,026명 (5.3% ↑)

- 한농대 졸업생은 영농종사율이 86.3%에 이르고,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을 시현(일반농가의 2배 수준)하면서 성공사례 창출

\* 소득('13) : 한농대 졸업생 6,814만원, 도시근로자 5,527, 농가평균 3,452

□ 현장의 제안을 수렴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농업인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도 및 활용가능성 제고**

○ 6차산업·융복합(16개, 20%), 창업경영(15개, 19%) 등 주요 농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농업인 역량 향상

\* '14년 공모과정(80개, 15,000여명 참여) : 농촌개발 17, 6차산업 융복합 16, 창업·경영 15, 친환경농축산 11, 유통·마케팅 8, 기획공모 13

□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농업기술 전파, 확산**

\* ('13) 181명(시설원예 120, 양돈 61) → ('14) 209명(시설원예 118, 양돈 91)

\*\*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현업적용도 / 공모교육 현업적용도 : 4.23 / 4.1

**나 미흡한 점**

□ 학교에서 실습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영농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습득은 미진

○ 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보다 **이벤트성 현장체험이 다수**

○ 실습교육을 위해 전국에 **대표 현장실습장(WPL)**을 지정하였으나, **단기 체험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술교육에는 한계

\* '14년 운영된 124개 WPL 실습과정 평균 교육시간은 39시간(5일)

□ 농업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농업여건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

○ 과목·교육내용 등 교육과정 설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ICT 활용도 제고, 수출 확대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설 미흡

\* (예시) 시설원예 ICT 교육의 경우, 시설제어·데이터분석·양액처방 등에 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나 실제 교육내용은 기초이해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해외농업전문가 초청 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 농업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선진 기술 관련 국내 전문가 부족

### 3

##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전문지식과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
  - 핵심인력(강소농, 후계농, 마이스터 등) : ('13) 5만명 → ('15) 7 → ('17) 12
- ◆ 실습교육 중심 농고·농대 교육과정 개편,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확대 및 ICT 등 첨단전문기술 교육강화

### 가 정책추진 여건

-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부문 취업자는 지속 감소하여 지역 및 농가의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가중 전망
  - 농고·농대가 유능한 농산업 인력 배출의 산실이 되도록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농고·농대생 및 귀농인 등의 취창업 지원 필요
    -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04) 29.3% → ('13) 37.3(국가 전체: 12.2) → ('23, p) 44
    - \*\* 농림어업 취업자 수 : ('04) 1,825천명 → ('12) 1,528 → ('13) 1,520
- ICT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등 성과사례 확산에 따라 농업인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
  - 농업 현장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첨단기술교육 강화 필요
    - \* ICT 활용 첨단기술 제어교육 : ('13) 2과정 206명 → ('14) 3과정, 592명

### 나 농업교육 강화

#### 농고·농대 교육과정을 실습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농업계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습·첨단기술 교육 강화
  -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 영농승계가 가능한 학생 중심으로 농업법인 실습 등 전문교과 비중 확대(70%수준)
    - 학과별 교육과정안을 마련('15 상.)하고, 초·중등교육법령 등 관련 법령·지침 개정('15 하.) 등을 거쳐 개교('17.3)

○ **농대는 졸업 후 곧바로 농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농대 재학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능력 함양에 초점을 둔 '영농창업 특별 교육과정\*(안)' 마련(6월) 및 지원학교 공모, 선정(10월)

\* 타 단과대와 협력하여 첨단기술·영어·경영 과목을 중점 교육하고 기업 인턴십·해외연수 등으로 견문 확대

□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대 재학생 및 농업인 선진기술 공동 실습장 설치 추진**

○ 공동실습장 설치·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6월) 등

**현장변화에 맞추어 ICT 등 첨단기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품목별 주산지에 품목특화 전문교육과정 설치, 운영**

○ '15년에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첨단시설 제어, 데이터분석, 토양 및 양분관리 등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15.하)

\* (기존) 육묘, 재배방식, 병충해 진단·방제 등 기본교육 강의 → (토마토 대학) ICT 설비 제어기술, 재배환경 실시간 진단·활용 관련 이론과 현장중심 실습

○ 단기(3개월) 집중과정으로 운영하되 **수료 후에도 SNS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조직으로 발전시켜 농업인간 지속적인 정보공유 유도**

※ SNS 활용 사례(Naver Band 활용 품목별 실시간 컨설팅)



○ 키위 재배 농가가 잎 주변부가 변해가는 현상을 SNS를 통해 문의 → 마그네슘 결핍이며, 환기와 물을 자주 주라는 전문가 컨설팅이 10분 만에 등록되어 애로사항 해소

□ **초청 교육과 연계한 해외교육기관 방문연수 실시('15.하) 및 해외 선진 기술 관련 국내 전문성 제고('15 예산 : 3.2억원)**

- **초청교육(4~5일)은 환경제어 등 현장으로 해결** 중심으로 운영하고, **해외교육기관 방문연수(2주내외)**를 통해 체계적인 **선진기술 습득 지원**  
\* 초청교육 200명(10기, 각 20명), 방문연수 40명(4기, 각 10명)
- 초청교육에 **품목대학 교수진 등 국내전문가를 우선 참여시켜**, 국내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선진기술력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 **SNS를 활용하여 전문가·선도농가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현장에로를 해소하고, 신기술 전파**
- 생산량이 많고, 재배가 까다로운 품목 중심으로 **SNS 실시간 컨설팅 실시 및 대상품목 확대('14 : 6개 품목 → '15 : 20)**  
\* 품목별 멘토(전문가·선도농 등)를 중심으로 2,300명에게 컨설팅 제공('14)

**다 농업분야 취창업 지원 강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위한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후계농 선정시 시·군의 농업계 학교 졸업자 및 청년(40세 미만) 추천 비율상향('13 : 20% → '14 : 30)**
- **청년후계농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후계농자금 지원대상에 포함(10월)**  
\* 후계농 육성사업 : 18세이상 50세미만인 자 중에서 일정자격 갖춘 자를 선정하여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금리 2%)  
\* 후계농 선정 : ('13) 1,849명 → ('14) 1,861 → ('15) 1,800
- **선도농가 실습 신청자격을 귀농인에서 청년까지 확대하여(농진청 협업) 영농실습기회(식품명인·마이스터 농장 등) 제공 및 젊은 인력 유입촉진 ('15년 농업인턴 : 517명)**
- **2030세대, 6차산업 희망자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8개 도)를 실습교육장으로 활용(4월)**

- 대학생 귀농 특별교육과정 설치\*(3월) 및 젊은 창업농 등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2030세대 농지지원\*\*

\* 대학생 특별 교육과정 : ('14) 4개 대학 → ('15) 10개

\*\* 2030세대 농지지원 실적 및 계획 : ('14) 2,282ha → ('15) 2,300

- 도시 유희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농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중개시스템 체계화**

-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연간 20만명 중개) 및 중장기 인력 풀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 인력정보시스템 구축**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신규마을 조성('15 : 20지구) 및 '귀농인의 집'·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등 종합 지원을 통해 **40대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4천호로 확대**

-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농촌건축·6차산업 공모전 개최(8월)**

- 귀농귀촌종합센터를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방**

\* 시·군상담의 날 확대 : (현행) 12개 시·군일 → (확대) 4개 시·군일

- 귀농귀촌 교육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획일적 귀농귀촌 교육을 축소하고 다양해진 귀농귀촌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화교육 확대**

- 귀농기초, 귀농중급, 귀농심화 등 단계별로 교육과정 세분화(1월)
- 2030세대, 6차산업 희망자, 체대군인, 퇴직경찰,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대상을 직업군, 연령 등에 따라 유형화(3월)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역거점 귀농귀촌센터로 활용

- 체류형 장기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참가자 대상 단기교육 및 정보 제공 기능을 병행하는 **도 단위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 육성(4월)**

-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민간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실습교육장으로 활용(4월)**

## **② 농식품산업의 융복합 촉진**

- 1. 농업의 6차산업화**
- 2.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3.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 1. 농업의 6차산업화

[국정과제 12-1]

## 1 추진배경

< VIP 지시 사항 >

◇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공·유통·판매·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 □ '06년 이후 최근까지 농가소득이 3천만원 수준에서 정체

\* 농가소득(근로가구 대비) : ('00)23백만원(80.5%) → ('10)32(66.8) → ('13)35(62.5)

### ○ 농업 취업자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농가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 필요

\* 농림어업 취업자수 : ('08) 1,569천명 → ('13) 1,426 → ('18p) 1,355

\*\* 농가비중(3ha이상 / 0.5ha미만) : ('00) 6.25% / 32.8% → ('12) 8.6 / 42.2

### □ 중소농(0.5~1.0ha) 중심으로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농촌 경제 활동 다각화로 농외소득이 증가

\* '03~'13년간 농업소득 평균 변화율 : -0.52%

\*\* 농외소득 : ('95) 6,931천원 → ('05) 9,884 → ('10) 12,946 → ('13) 15,705

### ○ 6차산업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농외소득원 창출 정책을 구체화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 집중지원으로 6차산업 창업자가 전년대비 8.8% 증가('13 : 364명 → '14 : 396)

\* 국가전체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10~'13) : 2.8%

### ○ 45개 기술지원반 운영(57회), 전문인력 양성(378명) 및 창업교육 실시(73백명)

### □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14: 379개소) 선정, 현장애로 해소·판로 확대 등을 통해 경영체별 매출액 전년대비 11.2%\* 증가

\* 예비인증 사업자 매출액 : ('13) 평균 747백만원 → ('14) 831

□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추진으로 **관광객과 매출 증대 효과 달성**

○ 코레일과 협업하여 체험마을과 연계한 **으뜸촌 기차여행 9코스**<sup>\*</sup> (신규), **전통식품명인과 연계한 관광상품 10코스**<sup>\*\*</sup> (계속) 운영

\* 으뜸촌 기차여행코스('14.11~12월 운영) 관광객수/매출액 : 1,039명/5,500만원

\*\* 전통식품연계코스 관광객수/매출액 : ('13) 1,310명/24,600만원 → ('14) 3,500/65,880

○ **찾아가는 양조장**('13: 2개소 → '14: 8) 선정 등 **지역특화상품 개발**

\* 신평양조장 '12년 대비 방문객 150% 증가('12 : 4,800명 → '13 : 12,000), 매출액 30% 증가

□ **1·2등급 농촌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증가(86.17점)**

\* '12년 72점, '14년 목표 80점 (격년 조사)

## 나 미흡한 점

□ '14년에는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 지원 예산 및 지자체 관심 부족 등으로 **농업인 대상 실질적 지원 서비스 실적 저조**<sup>\*</sup>

\* 예) 센터별로 정책설명회(3~4회) 혹은 일부 경영체(3~5개소) 컨설팅에 그침

○ 6차산업경영체의 애로해소를 지원할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 필요**

□ 정책 확산 초기 단계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6차산업 관련 정책**(제조·가공·외식·관광 등)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

○ 우수외식업지구, 농가맛집 등 외식관련 사업 추진 이후 **프랜차이즈화** 혹은 **지역적 클러스터화**를 위한 정책 연계 미흡

□ 성공사례 창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차원의 6차산업화 구조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 농촌 관광자원의 **연계형 프로그램 부족** 및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재방문율이 낮으며** **관광객 유입에도 한계**

\* 농촌체험마을 방문지역에 대한 재방문 의향률 : ('11) 81.5% → ('14) 72.7

○ 증가하는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등의 **적극적 노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 3

###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매출액 증가율 12% 달성

- ('14) 11.2% → ('15) 12 → ('17) 13

#### ◆ 농촌체험마을 평균 방문객수 증가율 4.2% 달성

- ('13) 3.6% → ('15) 4.2 → ('17) 4.5

#### ◆ 6차산업 주체·지역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농촌관광 품질·서비스 제고를 통한 지역의 6차산업화 추진

### 가 정책 추진여건

- 성공사례 창출 등에 의한 6차산업 인지도 향상('13 : 83.6% → '14 : 96)으로 농업경영체의 6차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 거문도 해풍속 영농조합법인 사례 】

- 썩재배(43ha) 및 가공품(추출액, 떡, 분말 등) 생산 경영체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중 농식품부 지원으로 NS홈쇼핑에서 35분만에 완판(76백만원) 기록('14.10.26)

-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을 통해 체계적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완료

- 내·외국인 관광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농촌문화 등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대

\* ('04) 인바운드 582만명, 아웃바운드 883 → ('13) 1,125(107.2%↑), 1,364(183.6↑)

- 특히 우리 전통문화·음식 등에 대한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 한국 방문 선택 고려 요인 : (1위) 쇼핑 66%, (2위) 한식 탐방 44%

### 나 6차산업화 주체 육성

#### 6차산업 핵심주체를 위한 지역중심 밀착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창업 희망 농업인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정책 연계 등의 지원 강화

- 예비창업자는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를 활용, 시제품 생산·창업 코칭 등을 지원받도록 하여 6차산업 인증 사업자로 육성

\*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 : ('14) 22개소(신규6) → ('15) 30개소(신규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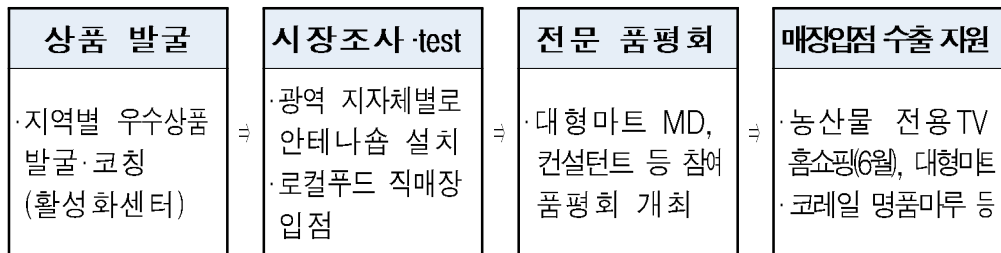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밀착관리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체계적 지원

- **경영체별 관리카드**(경영상태·애로사항 등) DB구축, 맞춤형 상담 및 코칭 제공

- 지원센터가 경영체와 전문가 매칭하여 현장코칭 추진(경영체당 연 4회, 회당 500천원)

\* 농업인이 간편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6월)

- 우수제품을 발굴, 시장조사부터 전문매장 입점·수출 지원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판로 지원체계 구축



- 일정 수준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의 리모델링 및 보안을 지원하는 **복합농장 구성**(30개소, 15억원)

(사례) <일본 모쿠모쿠 농장>

- '83년부터 돼지고기 생산(1차), '87년 수제햄 생산(2차)을 추진했으나 경영 애로
- '89년 소시지 생산 체험교실(3차)을 개시하면서 연간 3~4만명이 내방하고 '95년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모쿠모쿠 농원' 개설
  - 파머스마켓, 천연온천, 빵·파스타·쌀과자 생산, 농원축제 등 추진
- '08년 연간 50만명 이상 방문, 매출액 43억엔, 고용 600여명 달성

## 연계와 협력을 통해 6차산업 주체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 지역별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를 구축, 6차산업 경영체와의 연계를 통해 시설과 자금 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설치된 제조·가공시설의 설치 현황 및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6차산업 창업자의 시설 및 자금 이용과 연계
    - \* 정책자금 융자(2.0%, '15년 300억원 규모) 및 6차산업 펀드(100억원) 지원
- 타 부처 관련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경영체 운영의 시너지효과 창출
  - 소규모 경영체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마케팅, 융합컨설팅, 판로지원으로 견실화
    - \* HIT500(중소기업 참신한제품 선정하여 히트상품화) 선정, 나들가게(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기청의 컨설팅 지원) 입점, 1인창조기업(맞춤형 마케팅지원) 지정 등


## 다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6차산업지구를 지역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 6차산업화 지구(기존 3개소, 신규 6)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정책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클러스터로 조기 정착 도모
- 기존 지구(하동, 영동, 순창)는 컨설팅 지원, 정책사업과 연계한 인프라 투자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지역단위 6차산업의 모델화
  - \* (컨설팅) 창업·사업화 교육, 품질관리, 경영, 1·2·3차 주체간 연계 등 (모니터링) 연차별 사업추진 상황 점검, 수출정보 제공, 시장조사·판로지원 등 (인프라 투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기존 시설지원 사업과 연계

- 지구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연계하여 민간 투자유치 추진**

**(사례) 순창군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이전	조성 이후
소규모 장류업체 (42개) 집적화, 지역농업 연계는 미미	⇒ 민박·음식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체류형 음식·체험 관광을 활성화 하고 지역농업과의 연계 강화

- **신규 지구는 사업기간 확대(단년→3년) 취지에 맞게 집적화 정도 및 장기발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대상자 조기 선정(3월)**
  - **공동인프라 조성(직매장·홍보관·체험장 등) 및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지역 제조업체·대형 유통업체 등과 연계)에 집중**
    - \* '15년 6개소 지정(개소당 15억원 지원)
  - **선정지구를 지역특구·농공단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각 지구별로 적용되는 규제특례 확대적용**
    -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식품표시기준 완화, 도로통행 제한, 농지의 위탁 경영·임대·사용,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
  - **중앙 자문단 컨설팅, 지구별 전담 전문가('Family doctor') 매칭 등을 통해 지구별 청사진 조기 마련**
    - \* 마케팅, 품질관리, 유통, 디자인 등 6차산업 현장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구성, 지구별 사업기간(3년)동안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등 모니터링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현장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를 통해 6차산업 현장애로 해소**
  -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시설 조례·규칙 제정 확산 및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등 현장규제 지속 발굴, 개선**
    - \* 시설기준 완화 조례·규칙 제정 지자체 : ('14)20개 → ('15 목표) 50

- 농지법령을 개정\*(12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6차산업화를 차질없이 뒷받침

\* (예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 등

## 라 농촌관광 활성화

###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 농촌의 전원(田園), 생태 가치를 활용한 관광 자원 발굴 확대
    - 승마장 및 체험 확대, 승마전문인력 양성 등 대중화 여건 조성
    - 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확대하고, 산림 내 캠핑·레포츠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 관광 활성화
      - 산림 내에 독립적인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 레포츠 관련 시설 설치 기준 마련(2월)
- \* 현재 자연휴양림의 부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50억원 이상 소요

### 관계기관 협업으로 지역간, 관광자원간 연계를 이루겠습니다.

- 코레일·농진청·산림청 등과 협업으로 철도인프라와 농촌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확대('14 : 9종 → '15 : 15)
  - 농촌관광 자원\* 기초조사를 거쳐 상품화가능 자원 선정(1~3월), 상품화를 위한 서비스 응대 교육·컨설팅 실시 및 지자체 참여 유도
    - \* 마을, 농가맛집, 양조장, 농촌민박, 자연휴양림, 체험목장, 6차현장 등
  - 코레일과의 협업으로 연계상품을 운영하여(4월~연중) 코스별로 특산품 개발(도시락 등) 및 음식역사 등을 활용한 판매지원

(사례) 으뜸촌 기차여행 코스



▶ 전북 완주 안덕마을 코스

용산역 출발 → 전주 한옥마을 → 안덕마을 (체험)  
→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용산역

▶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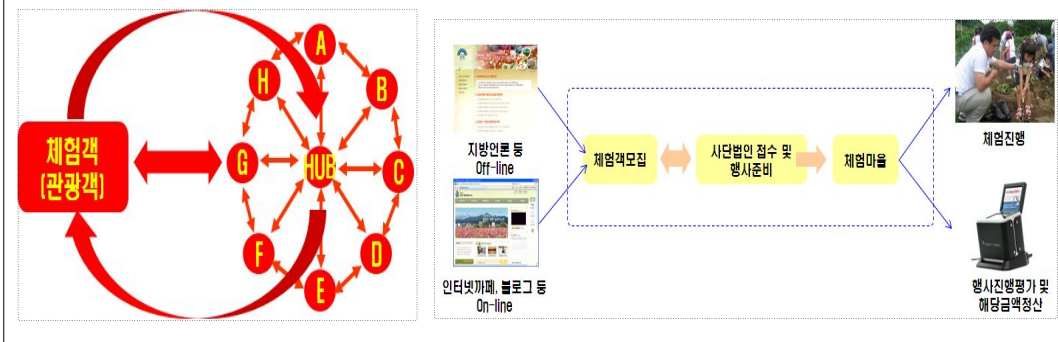
용산역 출발 → 알프스마을 (체험, 중식) → 예산 사과와인(찾아가는 양조장) → 수덕사 → 용산역

□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공동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2~3월, 8개소, 4억원)

\* 체험마을·농가맛집·관광농원·농촌민박 등이 참여한 기획·운영협력체

○ 우수 컨소시엄은 **사업실적 평가**(일자리, 매출액 등)를 통해 2년차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품질화 유도**

(컨소시엄 구성·운영 사례) : (사)양평농촌나드리사업단



**농촌관광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모바일 중심의 정보이용 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로 농촌관광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농촌체험마을·농가민박·농가맛집 등 공공분야의 **농촌관광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확산되도록 **소비자 참여형 정보제공 확대**



- 농촌관광앱 창작 경진대회 개최(4~10월)를 개최하고 국내 주요 여행사, 네이버 등 민간 포털업체와 연계하여 홍보 추진
- 국내 한식당 정보, 한국음식 75선 등 모바일 웹 개발(한식재단)

#### □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추진

- 주요 국내 민간여행사(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등을 통한 **맞춤형 상품개발 촉진 및 농촌관광 예약서비스 확대**(28개 상품 → 40)
  - \* 모두투어 사이트에 28개 농촌관광 상품 탑재('14.5~11월), 매출액 15,722천원
- 외국인 관광객의 농촌관광 유치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관광 전문업체\* 대상 **관광설명회** 개최, **팩투어단 유치** 등 추진
  - 한국 방문 의향을 반영한 관광상품 개발(중국인대상 /쇼핑,드라마 촬영지 등) 및 국내 중국 전담여행사('14.12 기준 191개) 대상 홍보
  - 외신기자 및 중국 전담여행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팩투어 진행

### 농촌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 다시 찾는 농촌관광이 되도록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 체험마을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및 지역별 서비스 교육 추진
  - \* 등급평가 개수 : ('14) 300개소 → ('15) 350(갱신 150, 신규 200)
  - 등급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등급 마을 홍보, 연계상품 개발, 마을사무장 평가 등에서 우대
  - 시·도 주관으로 농촌관광 운영자 대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화, 경영마인드 및 고객 응대서비스 교육 등을 운영
- 민박 조식제공 허용과 연계, 전체 민박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및 서비스·안전기준 마련**(7월)

## 2.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국정과제 12-3)

### 1 추진배경

- 농약·비료 사용량을 줄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웰빙·안심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에 특화된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
  - 토양·수질 등 농업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 축산강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연이은 FTA 타결에 따른 개방 확대와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소비수준 고급화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뛰어넘는 친환경·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 분뇨, 악취 등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농업계 내·외부의 개선 의견이 많은 상황**
  - 사육환경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외 요구 증가**
    - \* (OIE) '05년에 12개분야(운송, 도축 등)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회원국에 기준준수 권고, (EU)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금지('12) 돼지스톨 사육금지('13) 등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유통·소비채널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여건 강화**
  - 친환경농업 전문 단지·지구조성 확대 및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생산기반 지속 확충**
    - \* 단지/지구 인증면적 비율(%) : ('12) 24/59 → ('13) 25/62 → ('14p) 26/64

○ 친환경농업 인증관리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기반 구축

\* 부정인증시 인증기관 지정취소·벌칙 규정 신설 및 자격증 소지·교육 이수 의무부과 등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마련

□ 축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수립('14.1)

○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적 축산 기반 조성

\*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누적), 분뇨자원화율 : ('13) 106개소, 89.2% → ('14p) 116, 89.7

○ 시범농장('14년 9개소) 및 규제완화\*를 통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기반 마련

\* 초지내 체험시설 등 설치 허용, 산지방목 허용면적 확대(3ha → 5) 및 신고제 전환 등

□ 부처 협업(환경부·국토부)으로 무허가축사(약 45%)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마련('14.11)

\* 건폐율 개선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13.5) 및 가축분뇨법 개정('14.3) 등

\*\* 가축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 지붕재료 규제 완화 등

## 나 미흡한 점

□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잇따른 부실 인증, 취약한 생산기반 등으로 확산에 애로

○ 그간 성장위주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친환경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부실인증으로 신뢰 저하 우려

\* 소비자 만족도 : ('12) 67.8점 → ('13) 60.9 → ('14) 61.6

○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기술적 어려움, 판매처 미비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판매에 어려움

□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 분뇨 관리가 미흡하고, 악취 민원은 지속 증가\*

\* 악취 민원 : ('05) 4,302건 → ('13) 9,914건(연평균 15% 증가)

□ 친환경축산직불금이 소득감소분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 축산물 유통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여 친환경 축산 활성화에 한계

\* 유기기준 소득감소대비 직불금 지급액 수준 : 한우 69%, 육계 55, 우유 74 등

## 3

##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친환경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 소비자 만족도 : ('13) 60.9점 → ('14) 61.6 → ('15) 65

## ◆ 사육환경 개선 및 분뇨·약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 : ('13) 11.9% → ('15) 14.5 → ('17) 17.2

## 가 정책 추진여건

- 소비패턴의 고급화, 환경·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
  -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전분야의 정책 내실화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
  - 미국·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협정을 적극 활용, 유기가공 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내 육류시장은 단백질 공급 차원을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소비자 중심 구조로 전환
  - 육류 소비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
    - \* 1인당 육류 소비량 : ('05) 32.1kg → ('09) 36.8 → ('11) 40.4 → ('13) 42.7
  - 유기·동물복지 식품, 로컬푸드 등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도 확산 추세
  - 향후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산과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
    - 분뇨, 약취 등으로 축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 증가 예상

## 나 친환경농업 재도약 여건 조성

**제대로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유통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인증관리 강화

- 인증과정 ‘2중-check 시스템(민간인증기관+농관원)’ 구축(1월) 및 인증기관 등급제 시범도입(9월) 등을 통해 부실인증 사전 차단
- 친환경농산물 및 자재(‘14 : 782점 → ‘15 : 전품목, 1,235) 품질검사 확대

### □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수확 후 관리 강화

- 수확·선별 등의 과정에 위생관리 요소\*를 도입하여 안전성 제고  
\* 자재·시설 청결 관리, 작업 전후 청결 유지, 위생관리 상황 기록·관리 등
- 유통조사 강화(‘14: 1회 → ‘15: 2) 및 점검실적·부적합사례 공개 강화

**친환경농업 지속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 직불제 개편 및 기술지원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적극 유도

-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5 → 8년)하고, 품목군별 재배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검토
-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 활용, 친환경 실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잡초 관리 등 재배기술 개발·보급(18억원)
- 저농약인증 폐지(‘16)에 대비, 유기재배 매뉴얼 개발·보급 및 “자주인증”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저농약 인증 농가의 관행농 회귀 예방

## 차별화된 유통·소비채널을 확충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기반 확충 및 소비처 발굴

#### ○ 생협·직거래·로컬푸드 매장 등 유통·판매 채널 다양화

\* 소비자 판매장 확충('14: 4개소 → '15: 10),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14: 300억원 → '15: 400) 등

#### ○ 유통기업-친환경 단지 연계, 생산부터 판매까지 지원하는 유기농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처로 활용

#### ○ 세계 유기농엑스포(충북 괴산, 9월) 및 친환경 6차산업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유기제품 인식 제고

### □ 가공·체험 등과 연계되는 친환경 6차산업형 모델 발굴

#### ○ 미국·EU와 동등성협정 활용, 해외시장 조사, 유망품목 발굴, 보존·가공 R&D 기술지원(18억원) 등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2월)

#### ○ 경관·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 단지 내 체험·관광시설 지원 확대

\* (현행) 학습장, 원두막 등으로 제한 → (개선) 농가맛집,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지원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환경과 정책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확충

#### ○ 토양·수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환경지표 마련(9월) 및 정책사업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10월)

#### ○ 농업환경지표 목표수준 달성을 위한 투입재 보조, 직불제, 교육, 규제 등 관련 정책 조정·정비 추진

#### ○ 농업인 참여형 농업환경관리를 위한 친환경단체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운동 추진

## 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및 악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설 확충 및 사업 내실화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14 : 108개·8개(누적) → ‘15 : 118·9)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1월~)
    - \* 설치용량 기준 완화(70톤 → 30톤 이상), 사업부지 인허가 완료 후 사업대상자 확정 등
  - 민간 전문가 중심의 효율적인 분뇨 관리를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운영**(3월) 및 **축산환경컨설팅트 육성**
- 분뇨처리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추진 및 우수 자원화 조직체 **인센티브 확대**
  - \* (‘16) 공동자원화시설 → (‘17년) 액비유통센터
  - 우수 자원화조직체 평가 시 비료생산업 등록 여부를 반영하고, 인센티브 운영자금(개소당 20억원 한도, 2%) 지원(‘15~)
-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15 : 35개소) 및 악취컨설팅 추진(6~9월)
-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의 근절을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점검**(3월~)
- **통합형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단** 구성·운영(‘14~‘17, 60억원)을 통해 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신공법 및 농가 보급기술 집중 개발
  - \* ICT 융합 규격액비 생산기술 개발, 악취 기준별 매뉴얼 설정, 질소·인 회수 기술개발

### 친환경 축산 관련 인증제를 확대하고 직불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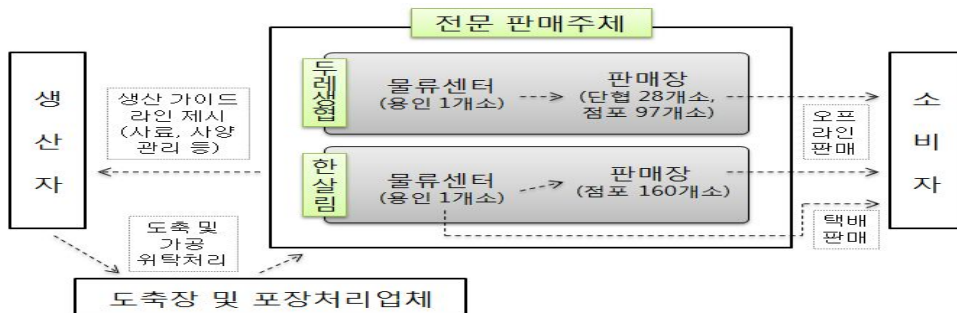
- 동물복지 인증대상 **축종 확대**(산란계·돼지·육계 → 한·육우·젓소·염소 추가, 12월)
  - **현행 ‘농장’ 인증을 ‘축산물’ 인증으로 전환**하여 사육에서 도축·판매 전 과정에 걸친 동물복지 인증시스템 확립(12월)

- 농가소득 감소분을 감안하여 **친환경축산 직불금 지원 내실화** 추진
  - 유기축산물 직불금 농가당 지원한도(2천만원/호 → 3) **상향** 및 지급기간(3년→5년) **연장**(‘15~)
  - 동물복지 직불금은 농가소득 감소 및 생산성 회복기간 등에 대한 연구용역(‘14~‘15) 후 직불금 지원 방안 마련

**친환경 축산물에 특화된 유통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생산자(농협 등)-판매자(생협 등) 간 협의체를 구성(2월)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판매 정보 공유 및 유통 애로사항 발굴 보완(연중)

<전문 판매주체를 통한 친환경축산물 공급체계 예시>



- 농가 참여 확대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축산 페스티벌** 개최(‘15. 상) 및 **친환경축산 대상 시상**(‘15.하)

**산지생태 축산 등 친환경적 사육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시범농장 확대** 및 **규제개선** 추진
  - 산지생태축산 **선정 농장**(‘14년 9개소, 13억원)에 대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시범농장을 추가 선정(‘15년 50억원)
  - 초지 조성, 운영방안 등 산지축산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1월)
  - 산림청 협업으로 요존 국유림 내 **가축방목**(국유림법, 6월) 및 **가축방목 임야** 내 **다년생 목초 종자 파종**(산지관리법, 6월) 허용 추진



□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시범사업 추진계획**\*('13~'17, 3개소)에 따라 기반조성(8월), 참여농가 모집 및 축사시설 등 설치(8월~)

\* 마스터플랜 수립(~'14), 기반조성('15), 개별사업지원('15~'16), 평가('16~)

□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종별 축사시설 가이드라인 마련**('15)

○ 장기적으로 모든 농가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 마련('16 연구용역)

### **시설현대화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친환경 사육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15 : 2,768억원) **내실화**를 통한 사육시설 개선 촉진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추진**(연중)

\* 이동형 양봉농가 카라반 지원, 동물복지 축산농가 지원, 곤충사육사 지원 등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설을 보완할 경우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사업신청 관련 절차 완화 및 사업 집행시기 개선(기존 : 3월 선정·5월 교부 → 개선 : 1월·2월) 등을 통해 집행을 제고 등 사업 활성화 유도

□ **범 부처 무허가축사 개선방안**('13.2) **후속조치**\* 및 무허가축사 축산농가(약 45%)의 적법화 이행 지원

\* 가금 분뇨처리시설 면제, 소·말 운동장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3월)

○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무허가의 원인·사례별 개선이 가능하도록 교육·홍보 추진(연중, 환경부·국토부 협업)

○ 여·야·정 FTA 협의체의 합의('14.11)에 따른 **추가적인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시행을 위한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15.상)

\* 가축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완화(시가표준액 50%이내 → 40%), 축사 지붕 재료 완화, 무허가축사 농가와 위탁 사육시 계열화업체 벌칙 적용 유예 등

### 3.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

[국정과제 34]

#### 1 추진배경

< VIP 지시 사항 >

◇ 농산물 생산량이 너무 많거나 적게 되어 수급이 안 맞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대응하는것이 중요함. 생산자들을 조직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파종단계에서부터 수급이 맞도록 노력할 것.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 (신유통경로 확대) 유통경로간 경쟁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산과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필요
  - 로컬푸드 및 ICT를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경로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유통비용을 최소화
- (도매시장 효율화) 가격진폭 완화를 위해 경매 중심의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추진
- (수급안정)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자 소득 안정 및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
  - 정부 주도에서 탈피, 생산자단체·지자체의 수급조절 역량 강화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신유통비중('13 : 10.9% → '14 : 14.6) 및 유통비용절감액('13 : 4,291억원 → '14p : 6,200) 증가
  - '로컬푸드 직매장' 전국적 확산('12 : 3개소 → '14 : 71) 및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확대('12 : 16,820억원 → '14p : 30,768)
  - aT 사이버거래소('09~)는 거래액 2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B2B 추진을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14년 정가·수의매매 비중 13.5% 달성(전년 대비 3.6%p 증가)

## 나 미흡한 점

### [직거래 등 신유통경로 확대]

- 통합마케팅 조직의 판매·관리 역량이 미흡하여 여전히 농가 개별 출하가 많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개별 성공 사례 확산에 치중
  - 한국형 로컬푸드 모델 확립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기반 미흡
- 한정된 형태의 직거래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기에 한계
  - 오프라인 직거래는 지리적 제약으로 제한된 생산자·소비자만 참여
  - 개별 온라인 쇼핑몰은 차별화된 아이템이 부족하여 농산물 사이버 쇼핑의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의 종합몰(오픈마켓 등)을 통해 거래(92.7%)

### [도매시장 효율화]

- 정가수의매매는 산지 및 시장 여건의 미성숙과 시장 참여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정착이 느리게 진행
  - 안정적 농산물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정가·수의매매 추진 필요성에 대한 유통주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농산물 수급안정]

- 관측정보와 산지의 생산량 조절 연계성, 생산자 단체 및 지자체의 사전적·자율적 생산·수급안정 노력 미흡
  - 공급과잉 우려시 농업관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알리고 있으나, 실제 재배면적 조정으로 이행은 미흡
  - 수급대책을 중앙정부에 의존,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미흡
-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호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인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수급조절매뉴얼로 대응하는데 한계
  - 농산물의 특성상 이상기상 발생시 예측 및 대응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가격안정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

◆ 직거래 인프라 확충 및 ICT 활용 등 새로운 직거래 발굴·확산, 사이버거래(B2B) 확대 등을 통해 신유통비중을 16%까지 확대

\* 신유통경로 비중 : ('13) 10.9% → ('15) 16 → ('17) 20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15%까지 확대

\* 정가수의매매 비중 : ('13) 9.9% → ('15) 15 → ('17) 20

◆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성을 10% 수준으로 안정

\* 5대 채소 가격변동율 목표 : ('11~'13평균) 16.4% → ('15) 14.5 → ('17) 10.6

## 가 정책 추진여건

□ 사회구조·소비성향 변화로 로컬푸드에 기반한 직거래 수요 증가

○ 소비자들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농촌관광 등이 농산물 구입 등과 연계되면서 로컬푸드 발전의 기반 형성

\* 주부대상 설문조사('13, 상공회의소) : 수입식품에 대해 57.8%가 불안하다고 답변

- '로컬푸드 직매장'이 직거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 로컬푸드 직매장 수 : ('12) 3개소 → ('13) 32 → ('14) 71

□ 수급은 '14년 풍작의 영향이 '1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기상여건 및 면적 증감에 따라 변동전망

○ 경기의 완만한 회복, 민간소비 증가,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은 가격하락 상황을 해소하는데 다소 긍정적

\* 경제성장률(%) : ('11) 3.7 → ('12) 2.3 → ('13) 3.0 → ('14p) 3.4 → ('15p) 3.5

\* 민간소비 상승률(%) : ('14) 1.7 → ('15p) 2.3

○ 채소는 배추 등 월동채소와 대파 등을 중심으로 공급과잉 우려

○ 다만 이상기상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지난해 가격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비자의 물가체감도가 높을 가능성

## 나 직거래 등 신유통 확산

### 직거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12: 3개소 → '15: 100)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직거래형 로컬푸드 판매망 지속 확충
  - 직매장 시설 지원(매장별 150백만원, 국고보조 30%) 및 제철꾸러미사업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교류행사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내실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직매장 개설지원(35개소), 기존 직매장 컨설팅(3개소) 제공 및 농업인 보수교육 실시(30개소)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하위법령 마련·시행(11월)
- 생산자 조직화, 유통과정 통합관리체계 구축, 직거래 농산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특성화된 로컬푸드 공급기반 구축
  - 중소농 협동조합 구성 및 로컬푸드 추진 지자체 대상 농촌공동체 회사 지원('15 : 12억원) 등을 통해 생산자 조직화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 로컬푸드 거점으로 활용,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배송, 판매까지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
    - \* ICT를 접목한 스마트 로컬푸드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출하·판매 등 모든 과정 효율적 관리
- 기업·공공기관, 전통시장 등과 협력을 통한 상생 직거래 추진
  - 공공기관·대기업 등 비농업계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10개소 내외)
    - 기존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상생형 직거래장터' 분야 신설 및 지원(시설 및 홍보비용) 추진(선정 : 3월)
    - \* 기업·공공기관 상생형, 전통시장 협력형, 주산지형 등

- 생필품 및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협력형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5개소 내외)

\* 목포 산정농공단지의 신중양시장의 경우 공산물만 취급, 부안 곰소 첫갈 단지의 경우 수산물만 취급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병행 가능

-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 및 택배사업 활성화**

**ICT를 융복합한 직거래 모델을 보급하겠습니다.**

- **ICT 기술 및 최신 유통트렌드와 직거래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사물인터넷, 큐레이션커머스 등과 융·복합한 새로운 직거래 유형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

- 4개 분야(안)\* 별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멘토링 지원

\* 사물인터넷, 큐레이션커머스, 직거래맵, 엔터테인먼트 결합

- **중소상인의 농산물 온라인 B2B 참여 확대 및 내실화**

- **사이버거래소 및 포스몰(Pos-Mall) 구매업체에 직공급할 수 있는 지역농협 등 산지 유통조직 발굴·참여 확대 추진**

- 지역농협 및 산지 농업법인 등이 농가 계약재배 및 위탁 상품만 등록하도록 하여 중간 식자재 업체 상품 등록을 제한

- 지역농협의 포스몰 참여 확대 및 협력을 통한 물류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농협과 MOU 체결

- **소상공인·산지농업인 포스몰 활용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산지·소상공인 대상 홍보 실시(6월)**

## 다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을 통해 도매시장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

- 정가·수의매매 자금지원 확대(도매시장법인 매수 자금 등) 및 예약거래시스템 이용 촉진,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교육·홍보 강화
  - 내실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중점품목 집중관리 및 사전 예약형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모화된 산지와 연계한 우수 사례 발굴·공유
- **경매사 자격시험제도 개편안**(시험과목, 주기 등)을 수립(10월)하고, 도매시장별 경매사 역량강화 방안 마련 의무화

### □ 도매시장 운영·물류 효율화를 위한 평가 개선 및 투자 확대

- **도매시장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부진 도매시장에 대한 외부 경영진단 및 외부기관 위탁 관리 강화
  - 평가 지표·방법·활용 등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보완**(11월)하고, 부진 지방도매시장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화 추진
- **시설현대화**를 통해 저온창고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최소출하단위 설정**으로 하역기계화 유도
  - **가락 도매시장(2단계)·천안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수원 도매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5)
  - 저온창고 신규 지원(2개소) 및 '15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지 추가 선정, 거점시장의 최소출하단위 설정 품목 확대
  - 수도권 거점 도매시장(서울·가락·강서 등)에서 최소출하단위 운영

### □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조직을 설립·운영하여 거래 안정성 제고

- **강서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의 대금정산조직을 통한 대금정산 의무화(조례 개정)

## 라 | 농산물 수급안정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사전적 생산조절을 유도하겠습니다.**

- **(관측정교화) 파종 단계부터 관측정보가 농업인 및 소비자의 실제 생산·소비 조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측 기능 강화**
  - **신뢰성 높은 관측정보 제공으로 사전 생산조절 및 실행력 강화**
    - **GIS 직황운영 시스템** USN 기반 **생육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5년, 10개소), 위성(항공) 영상이용 **5대채소 작황예측 기술개발**
      - \* 재배면적 산정 알고리즘 개발(‘14~‘15) → 영상기반 면적 산정 및 단수예측(‘15~‘16)
    - **파종단계**에서 과부족이 예상될 경우 **적정면적 재배 유도**
      - \*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를 월보, 문자, 현장 Road-show 등을 개최하여 전파
  - **관측센터와 유관기관 간 생육, 가격 등 수급정보 공유**
    - 농경연, 농진청,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 **정보공유로 수급분석 강화**
      - \* 농진청(생육상황 조사결과, 병해충 정보 등), 통계청(통계 신속제공, 표본농가 추출 등), 농관원(경영체 조사결과 등), 농협·aT(계약재배, 비축자료 등)
- **(관측정보 확산) 농업관측 정보에 대한 농가 가독성 향상과 실천 필요성 전파를 위해 확산경로 다양화**
  - **농진청 농사정보지와 교육과정에 관측정보 포함(1월~)**
    - 기술정보지에 농업관측 내용 게재, 교육 프로그램에 관측과목 신설
      - \* 품목별 기술교육,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정(1,038천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 **농업전망대회를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지방대회로 개편(1월)**

**생산자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자율수급조절) 생산자 조직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체계적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유통인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자율적이고 사전적인 수급대책 결정·추진

- 품목별 협의체는 재배의향 및 면적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적정 면적수준을 유지하여 미래 수급불안 요인 해소

- 수급조절 역량향상을 위한 **연합판매시범사업** 실시(전체 생산량의 60% 취급)

□ (지자체 역량 강화) 가격 변동성과 지역 집중도가 높은 지역 특화 품목은 지자체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 지자체가 자체조성한 기금으로 산지폐기 등 선제적 대책 추진시 사업비의 일정비율 **정부자금 매칭** 지원('15 : 30억원, 신규)

○ 농진청(시·군 기술센터)의 **지도사업**을 농축산물 수급과 연계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가격변동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유통명령)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시행 여건 마련

○ 사업지침 개정('14.12) 및 수급·가격 요건 고시안 마련(4월)

\* 현저한 수급불안으로 인해 시장출하량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출하 제한

○ 유통명령 발령시 효율적 집행을 위한 품목조직 육성 등을 추진

□ (비축사업) 국내산 농산물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수급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 수매비축은 수급불안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 우선수매 등을 통해 정책 간 연계성 강화

- 공급과잉 시 가격하락 우려로 인해 정부보유물량은 기부 등 제한적 용도로 방출하는 바, 사업건전성 제고를 위해 민간을 통한 수매비축 검토

○ 수입비축의 경우, **절대 부족 품목**은 사전에 적정물량을 도입하여 조기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기타 품목은 **TRQ 운용** 및 **증량 최소화**



### **3 수출확대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 1. 농식품 수출확대·기업과 상생협력**
- 2.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3.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 1. 농식품 수출 확대·기업과 상생협력 [지시사항]

## 1 추진배경

□ 한·중 FTA 등 세계 52개국과의 FTA를 이용하여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등 개방화시대에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필요

< VIP 지시사항 >

◇ 우리 농업도 자신감을 갖고 해외 유망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함. FTA를 수출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등 FTA 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 검역 위생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농가의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함('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 규모화된 수출 선도조직 육성, 수출 지향형 지원, 비관세장벽 관련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 활성화 대책 추진 필요

□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계 내부만의 힘이 아닌, 기업 등 비농업계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해 역량 극대화할 필요

< VIP 지시사항 >

◇ 농업계와 기업의 협력이 지속 발전하려면 기업의 단순히 사회공헌활동 차원을 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함. ('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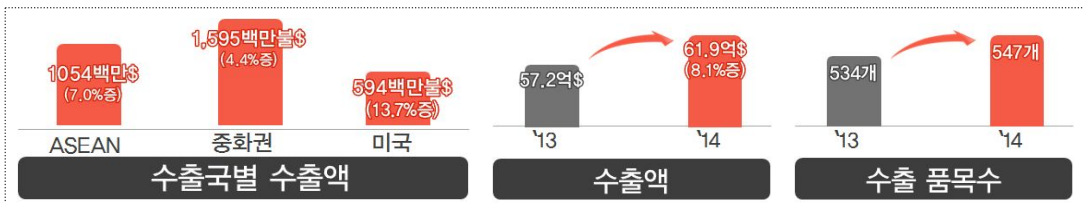
◇ 농민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농민과 기업이 윈윈하는 쪽으로 연계를 추진할 것. 기업이 기술 지원도 하고 민간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14.10.6,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

○ 식품제조·유통·수출 노하우를 가진 기업과 농업계간 선도적인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추진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농식품수출('14)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61.9억불로 동기간 국가 전체산업 수출액 증가율(2.4%) 보다 3.4배 높은 수준 기록



\* 수출액 : (신선농산물) 11.2억불(전년 동기대비 △4.9%), (가공식품) 50.6억불(11.4%↑)  
 \*\* 미국(13.7%), 일본(2.4%), 중화권(4.4%), ASEAN(7.0%), EU(7.8%) 등 수출 증가

□ **적극적 검역협상 추진을 통해 주요 수출유망 품목 검역이슈 해소**

- 베트남 가금육(3월), 필리핀 파프리카(3월), 미국 삼계탕(7월), 멕시코 배(7월), 호주 포도(8월), 칠레 버섯(11월) 등 12개 품목 검역협상 타결 등(14)

□ **농식품 수출 현장에로 해소 및 기업과의 상생으로 수출 확대**

- 범정부 차원의 수출 현장에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력 제고
  -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4회), 수출지원정보시스템(KATI) 지원, 완전보장형 환변동보험 도입(1월)
    - \* 환변동보험 지원실적 : ('12) 6업체/1백만원 → ('13) 39/284 → ('14.11월말) 55/765
- 기업들의 수출역량과 노하우를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 CJ(산청딸기: 470톤→700), 농심(수미칩 등 세계 80여개 국가 수출), 롯데마트 해외판매점에 우리 농식품 판매점 신설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6월), 분양(11월말)\* 등 식품수출 전문단지 조성 본격 추진**

- \* 국내외 103개 투자양해각서 체결(해외: 49), 기공식 개최(11.24, VIP 외 500여명 참석)
- \*\* 외국기업 투자(엘스프링, 햄튼 그레인 등 4개, 국내 4개 기업하림, 조은간장 등) 입주 신청(12/18)

□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및 상생 분위기 확산**

- 대한상의와의 MOU 체결(8.20) 및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9.15),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마련(10.15) 등
  - \* 대한상의, 농식품부, 농협, aT 직원으로 구성
- 농산물 가공·유통·수출·농자재·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MOU) 모델 발굴(14건)**

원료구매 (6건)	○ CJ('12: 7,700억원 → '14 9,000), SPC('13: 55,000t → '14: 63,000), 농심(감자, '13: 16,139t → '14: 17,300), 매일유업(고창군, '13: 22,480t → '14: 35,000) ○ SPC-익산시(9.26, 쌀 3000톤), SPC-의성군(10.22, 마늘, 연 100톤)
수출협력 (5건)	○ 아시아나 항공(11.10, 신선농산물 항공수출 시 25% 할인) ○ 롯데마트 (11.19, 해외 유통망 활용 농식품 판촉 확대) ○ 「하림-전북인삼농협」, 「차오마마-한국과수농협연합회」, 「햄튼그레인즈-한국 RPC연합회」(11.24,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예정기업 3개소)
공동출자 (2건)	○ 「아모레퍼시픽(장원)-한국차생산자연협회」 → 차 수출공동법인 설립 ○ 「CJ-제주콩농가-(주)바이오브리딩」 → 종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종자개발 (1건)	○ 「신세계푸드-농우바이오」(12.23, 수요자 맞춤형 가공적성 종자개발 및 보급 확산)
사회공헌	※ 경제4단체-한국농축산연합회 MOU 체결(11.20)

## 나 미흡한 점

- 엔저, 러시아의 EU 농산물 금수 등 **여건 악화**로 수출 목표 미달성
  - **엔화 가치 하락**으로 對日 수출물량 증가 대비 수출액 증기폭 저조
    - \* 대일 수출 실적('14.12월말 기준 전년대비) : 937.8천톤(5.5% ↑), 1,316.9백만불(2.4% ↑)
  -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하락\*** 및 對유럽 금수조치('14.8월)로 인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유럽 농식품과 우리 농식품간 경쟁 심화**
    - \* 루블/달러 환율 : ('12.12.31) 30.6 → ('13.12.31) 32.9 → ('14.12.31) 58.0
- 주요 수출국의 위생·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수출확대 애로
  - \* (중국) 라벨링 표시기준 강화('13.6) 및 수입유제품 검역조치 강화('14.5),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11.1) 이후 세부 시행규칙 제정중, (홍콩)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제정·시행('14.8)
-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의 지속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3

###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FTA를 활용, 중국·할랄식품 등 거대시장 적극 공략 추진

- 농식품 수출액 : ('14) 61.9억불 → ('15) 77 → ('17) 100

#### ◆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체계화 및 가공·유통·수출 등 농식품산업 전분야로 확산

- 상생협력 사례(누적 건수) : ('14) 14건 → ('15) 20 → ('17) 30

## 가 정책 추진여건

- 중국 등 FTA\* 확대, 중국·ASEAN 중심 한류 확산, 이슬람 할랄 시장의 부상 등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여건 조성**
  - \* '14년 타결된 FTA : 호주(4월), 캐나다(9월), 중국·뉴질랜드(11월), 베트남(12월)
- 중국내 고품질 웰빙 식품 선호 및 유아관련 시장 성장\*, 일본 원전사태 등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 증대**
  - \* 중국 유아관련 시장전망 : ('13) 2,575억위안(약 50.9조원) → ('15) 3,716 → ('17) 5,186

○ ASEAN,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시장 부상('12년, 1조달러 → '18년, 1.6조달러 전망)

\* 할랄(Halal) : 아랍어로 '신이 허용한 것'이란 의미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약 18억명 추정)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총칭함

□ **엔화 가치 지속 하락**, 러시아의 對유럽 금수조치 지속, 검역 등 비관세장벽 강화, 미 서부 항만 노동자 태업 등 **부정적 요인 산재**

○ 對일본 주력 수출품인 김치·화훼·파프리카 등의 수출 부진 지속 예상

○ 미국 항만 하역지연으로 배·감귤 등 신선 농산물 수출 어려움 예상

○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강화 등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지속

□ 성공사례 도출 등 계기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 고조**

○ 농산물의 신수요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조망

## 나 농식품 수출확대

**FTA를 적극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FTA 활용 확대**를 위한 농식품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

○ GAP·친환경 농산물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14.11, 농관원·관세청 MOU)

○ 「**농수산물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14.11)」을 활용, 온라인을 통해 FTA 체결국별 원산지 기준 확인·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등 편이 제고

- 산업부와 협업하여 동 시스템 활용 관련 수출농가 및 업체 교육 지원

○ 베트남 등 최근 FTA 타결 국가의 '**농식품 분야 FTA 활용 방안**' 자료 배포(산업부·무역협회 협업)



□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의 기회로 활용**

- 대한상의·aT·KREI 등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1월), 중국 도시별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6월)
    - \* 중국 1선 도시(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 도시·국가 확대
  - 수출 전략상품은 aT·KOTRA·대한상의·기업의 역량을 활용, 맛·포장 등 **현지화 관련 종합 컨설팅 지원** 추진(1월)
  - 對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된 **제2파프리카 5개 품목**(유자차·유제품·버섯·인삼·화훼)을 **수출 선도조직으로 우선 지정**
    - \* 기 수출 선도조직으로 지정된 버섯과 화훼는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자차·유제품·인삼은 품목별 자율협의체인 수출협의회를 수출 선도조직으로 개편
  - 버섯·인삼·화훼부문 **對중국 수출 연구사업단**('14.6~'17.6월, 90억원)과 수출 선도조직을 연계, 현장 애로기술·마케팅 전략 등에 해법 제시
  - 주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추진
    - \*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 中 '1호점'('13.10), 中 '알리바바'('14.10) 등
  - 온라인 입점 희망 수출업체 대상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 및 입점 절차·브랜드 마케팅 전략 관련 교육, 컨설팅 실시(연중)
  -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바이어 및 MD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0월)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을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외국어 상품 페이지 및 홍보자료 제작 지원(3월)
- 한국 농식품의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유명 백화점에 '한국 프리미엄 농식품 전문 판매관'** 개설(2월) 및 확대
- 중국 **청도 수출 물류기지**(1월)를 중심으로 중국내 **광역 물류망 구축**
  - 국산 농식품 전용 현지 창고(상온·냉장·냉동), 사무공간 지원을 위한 '**청도 물류기지 입주 설명회**' 개최(상시)
  -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내 7개 **해외공동물류센터\***와의 연계 **배송망 구축**
    - \* 현지 물류업체와 협약을 통해 창고 이용료 할인 적용 및 해당 이용료의 80% 지원('14: 40개 업체)

- 중국 주요 항만 보세창구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물류 인프라로 활용하도록 中 시정부와 협의
- 對중국 수출시 중국 국영 CCIC(중국검험인증집단)를 통해 수출자 등록·라벨등록 등 통관 지원 확대('14 : 1억원 → '15 : 4.9)

**할랄·아세안 등 新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전세계 할랄식품 시장 동향·수출 유망품목·타 국가 인증 사례 등 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 할랄시장 분석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예 : 사회과학적 연구 - KREI/ 인문학적 연구 - 한국할랄산업연구원), 체계적 연구 추진
  - 할랄시장 심층 조사 추진(해외시장 정보조사 사업 활용)
    - \* 할랄식품 시장 현황('13.6), 중동지역 할랄시장 진출전략('14.9) 발간·배포
- 각 국별 할랄기준에 부합하는 할랄식품 개발 및 할랄 인증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한국식품연구원이 할랄 식품개발·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센터로 지정 추진(2월)
  - 할랄 인증비용 지원(정부보조 90%), 국내·외 할랄인증 기관 간 동등성 확대\* 및 인증개선기간 연장\*\* 등 수출업체 인증 지원 강화
    - \* 인도네시아 MUI와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간 동등성 추진중(서류심사 완료,'14.10)
    - \*\* 말레이시아 JAKIM과 한국이슬람중앙회간 인증 갱신기간 연장 합의('14.11)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내 할랄 전용 생산·물류단지 조성 검토
  - \* (사례) : (말레이시아) 30여ha의 할랄 전용 공단 설립(JAKIM 산하 할랄개발공사 주도)
  - 한식연 등을 통해 할랄 전문 R&D 기반 구축, 말레이시아 인증기관 (JAKIM)과의 업무협약\* 및 국내·외 할랄 식품기업 유치 추진
    -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는 할랄시장의 중간 유통지로 성장 중, 중동 할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동남아를 활용하기 위해 할랄인증 등 협력 필요

- 중장기적으로 할랄식품 수출 확대에 대비, **할랄 식품 수출을 위한 독자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검토**(예: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 **결혼이민자 등을 위해 동남아 등 현지에 농식품판매장 개설 검토**

**민관 협업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수출 현장과의 소통 강화,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확대 개편**

-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 「**시·도 수출개척협의회**」·「**수출농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전방위적 수출 애로사항 해소

□ **검역·위생기준 등 각 국별 비관세 장벽에 대응, 범부처 대응 강화**

-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를 구성(3월), 각 국의 위생·검역·식품기준 변경 대응 체계 구축
- 주요 수출국(일본, 미국 등 10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기준을 조사, 국내 기준과 비교 제공('11년부터 매년 DB 갱신)
- **日 사전등록제\* 품목 확대**로 일본 통관절차 간소화('14 : 62개 제품 → '15 : 150)  
\* 안전성 검사 의무주기 완화(1년→3) 및 비용절감을 통한 통관시간 단축(50%)

□ **수출 유관 기업·시설\*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조성 추진('17년 본격 가동)**

- \* 식품 제조·수출업체, 물류·유통업체, 식품 기능성·안전성 연구소, 패키징 지원센터, 인증기관 등
- 국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6월) 등 지원 강화

**한류 등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우리 농식품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 **국가별 식품·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홍보·판촉 추진**

- (중화권·아세안) 한류 문화와 연계하여 여성·고소득층 등을 겨냥한 **K-FOOD FAIR 개최**(5개국, 6회)로 우리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  
\* 중국시안(5월), 충칭(7월), 베트남 호치민(6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9월), 홍콩(10월), 태국 방콕(11월)

- 국내 관광객 대상 청와대 사랑채, 인사동(전통주 갤러리), 공항 등에 한국식품 홍보·판매관 운영을 통해 한국식품 소비층 확대

○ (중동 등 할랄시장) 현지 소비자 체험행사·박람회·안테나숍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식문화 차이\* 해소 추진

\* (예시) 중동 지역에선 젤리(jelly) 형태인 유자차를 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 미국 내 글루텐프리(gluten free) 등 건강식에 대한 선호 증가에 대응,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활용 홍보 활동 강화

○ (일본) 대형 유통업체 공급벤더 개최 박람회 참가를 중심으로 신제품 홍보 등을 통한 시장확대에 주력

□ 한식세계화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국산 식재료 수출확대

○ 밀라노 엑스포('15.5~10) 등 각종 국제 행사시 한식 체험·시식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

○ 해외 한식당과 국내 조리 전문가와의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한식 레시피 보급, 한식당 조리사 교육 등을 통해 국산 식재료 활용 유도

\* (사례) 「중국 권금성(현지인 한식당) - 해전대학교 협약」

○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2월)

\*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협의체 제시 과제(인력양성, 정보제공, 법률지원, 홍보 등) 중심

## 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지속적인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사례 확산 추진('14: 14건 → '15: 20)

○ 중앙과 지역을 연계한 상생협력 로드쇼 개최(분기별 1회)

○ 지속적인 상생협력 수요조사, 설명회 등으로 **협력대상 발굴, 확대\***

\* (현행) 추진본부·관련 협회 간담회 →(개선) 관심 기업 ↔ 지자체, 관련 농협, 농업인단체 등

#### □ 상생협력 추진 시스템 강화(대한상의 협업)

○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1월~)하여 경영 노하우와 기술 역량 등 전파·공유

\* 대한상의 중소기업경영자문단(대기업 퇴직 전문가)에 농식품 특별반 신설

#### □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농업계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경연대회’** 개최(6월) 및 포상·홍보 강화

○ 컨설팅·수출마케팅·R&D·상품설명회 등 농식품 사업 우선 지원 검토

- 농식품 지원사업 및 동반성장위원회 등 타 부처(산업부·중기청) 사업과의 연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상생협력기업 인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

\* 농식품 분야 상생협력에 대한 목적·유형·인센티브 지원 방안 법제화 검토

**품종개발, 가공, 유통, 소비 등 전분야로 상생협력을 확산하겠습니다.**

#### □ 상생협력 기업의 MOU 이행 점검 및 성과 창출 유도

○ 대한상의 상생협력 추진본부 중심으로 **상생협약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애로해소, 우수사례 발굴 등 추진(1월~)

○ 상생협약을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가공적성 및 품종개발 활성화\*** 유도

\* (사례) 「농우바이오-신세계푸드」는 가공적성용 종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4.12.23)

- 생산자-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이 연계된 **품목별 상생협력 협의체 구축(3월)**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젝트 시범모델’ 발굴(2개 품목)

\* (우리밀 사례) 농식품부-지자체-진흥청(밀 전문가)-식품기업(핵심수요처) 등

## □ 참여 기업의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촉진 및 취약계층 지원 협력 유도

### ○ 농업계와 기업간 「농산물 상생마케팅」 확대 등 동반성장 모델<sup>\*\*</sup> 발굴·확산

- \* 농협 상생마케팅 사업 : 기업이 일정액을 후원하여 농산물 포장에 기업의 광고 내용을 부착하고, 소비자는 후원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
- \* (SK 자연이랑) 오창 농협과 친환경 농산물 구매계약 체결, 직원 명절 선물용과 사내 구내식당용, 취약계층 지원용 등으로 사용('05 : 7억원 → '13: 95억원)

## □ 대형마트,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15 : 6건)

### ○ 기업의 유통망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식품 업체 유통·판로 지원

- \* (롯데마트 사례) 국내 최대규모 해외매장 운영(중국 103개소, 인도네시아 38, 베트남 8) → 한국식품 Zone 구성·운영('11.11), 중국 매장 내 '국산 양파' 판매('14.11)

### ○ 온라인·홈쇼핑 업계와 협력하여 농식품 판매 및 체험서비스 연계 상생협력 유도

- \* (예시) 티켓몬스터(농산물+가공식품 + 체험·관광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판매)  
↔ 지자체(충남도) + 신지식인협회 등 관련 협회

## 농업과 기업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무역이득공유제(국회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여 신뢰관계 형성

### ○ 국회 계류중인 「FTA 특별법」의 실현가능성과 대안<sup>\*</sup>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14.12.~'15.3)

- \* FTA 수혜기업에 세금 부과하는 방식,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 방식 등 다양한 대안 검토

### ○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의 구체화·현실화를 위한 관계 부처(산자부·기재부) 협의 추진

## 2.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1 추진배경

- 소득·생활 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산물 수입 확대에 따라 먹거리 불안 가중
  -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입산과 차별화할 필요
    - \* 국내 소비자의 96.4%가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게 여기고, 48.4% 가격과 상관없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11, KREI)
-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危害 요소를 차단하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공급시스템 마련 필요
  - 농산물 GAP\* 인증면적을 '17년까지 농산물의 30%로 확대('14 : 3.5%)
    - \* GAP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출하 각 단계별로 농약·미생물·중금속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06 도입)
  - 전업농 HACCP\*\* 인증률을 '17년까지 55%로 상향('14 : 31%)
    - \* HACCP : 가축 사육부터 도축·가공·포장·판매까지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98 도입)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HACCP 인증 농가 증가
  - GAP 인증 농가에 대한 36개 정책사업 지원 우대('14.1) 및 인증 절차 통합·단순화\*('14.9~) 등을 통해 농가의 GAP 참여 촉진 유도
    - \*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 신청을 하면 통합처리 되도록 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12 → 3종)하여 인증기간 단축(126 → 42일)

○ HACCP 희망농가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14 : 475개소) **농장 HACCP 인증비율\* 지속 증가**

\* 전업농 HACCP 인증률 : ('12) 21% → ('13) 27.8 → ('14.11) 31

□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농축산물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등 안전성 감시·관리가 높은 수준에 도달**

\* 농산물 / 축산물 부적합률 : ('10) 2.2% / 0.15 → ('12) 1.5 / 0.21 → ('14.9) 1.4 / 0.18

\* 국가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비율('11) : 한국 1.8%, 미국 3.6, 유럽 1.6, 영국 2.9

□ 친환경농업 전문 단지·지구 조성 확대 및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지속 확충**

\* 단지/지구 인증면적 비율(%) : ('12) 24/59 → ('13) 25/62 → ('14p) 26/64

## 나 미흡한 점

□ EU, 미국 등에서 농산물 안전성 관리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GAP**는 그간의 노력에도 **확산**('14 : 재배면적 대비 3.5% 수준)이 **더디게 진행**

○ 인증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 대량 수요처 부족, GAP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 등이 농가 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

□ **HACCP** 인증 농가는 증가했으나 인증 이후 전문인력·기술부족 등으로 **인증 반납 및 부적합 사례 등 지속 발생**

\* 인증반납 / 부적합 : ('12) 196개소 / 177 → ('13) 257 / 162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GAP·HACCP 확대**

- GAP 인증면적 (%) : ('13) 3.5% → ('15) 10 → ('17) 30

- 전업농 HACCP 인증률 : ('13) 28% → ('15) 37 → ('17) 55

◆ 학교급식·도축장 등 소비자 관심분야·취약분야 **안전성 검사 강화**

◆ **친환경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 가 정책 추진여건

- 한중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식품 증가가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 수입산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친환경·안전 농식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제고 필요
  -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 호르몬 등 새로운 위해요소 등장 등에 따라 고품질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추세
    - GAP·HACCP 인증을 확산·내실화하고, 급식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안전·위생을 집중 관리할 필요
- \*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11, KREI) : 안전성(41%) > 신선도(35) > 가격(7.8)

## 나 GAP 확산을 통한 사전적 안전관리 강화

**GAP에 대한 농업인 인식전환과 함께 인증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GAP 참여 촉진을 위해 농업인 인식 전환 및 GAP 인증절차 개선 추진
  - 농업인이 GAP 제도를 쉽게 실천하도록 '농업환경 개선 운동' 전개
    -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을 수립(5월), 개인 위생관리, 영농기록 생활화 및 마을환경 개선 등 단계별 이행계획 구체화

### < 단계별 실천 계획(예시) >

1단계('15) <기본 조성>	2단계('15~'17) <개인위생 강화 및 환경개선>	3단계('18~'19) <영농기록 생활화 및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환경 개선 5년 계획 수립('15.상)</li> <li>· 시군별 "GAP 확산 운동본부" 구축('15.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업시 손씻기, 장화 세척 생활화, 작업장내 취사 금지 등 매뉴얼 보급</li> <li>· 소규모 수확 후 처리시설 지원</li> <li>·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공동 퇴비장 및 상시 폐기물 처리장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기반 영농일지 개발 보급</li> <li>· 수확 후 처리시설 지원 확대</li> <li>·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공동 퇴비장 및 상시 폐기물 처리장 마련</li> </ul>

- 중앙단위(농식품부, 농관원, 농진청 등) 및 시군단위(기술센터, 농협, 마을 지도자)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 구성(10월)
- 농장 보급용 간이 화장실 지원, 수확 후 관리 중 위생에 취약한 품목(깻잎, 딸기 등) 대상으로 소규모 수확 후 처리시설 등 지원
  - \*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30억원) 및 GAP 생산여건 조성사업(7.5억원)
-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GAP 신속 인증절차 도입**(10월) 및 **토양·용수 성분분석서 제출 의무 완화**(12월)
  - **작물별 중요 안전관리 포인트를 매뉴얼로 제공**(농진청, '15~)하고, **해당 매뉴얼만 이행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구비서류 간소화
    - \* 기존 :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별로 안전관리 방안을 작성해야 인증
  - **토양은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용수는 농업용수 확인증을 통해** 적합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성분 분석 제출서 면제**
    - \*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의 기존 정보를 활용, 서류 미제출 가능 필지 및 동일 용수원을 사용하는 농경지 정보 체계 구축('15~)

## GAP 적용 농산물의 유통·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 유통업체 중심 GAP 취급 확대 및 대량수요처 발굴

- **대형 유통업체의 GAP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MOU 체결 및 「상생협의회」** 구성(1월~)
  - \* GAP 취급물량에 따른 홍보비('15 : 3억원) 등 차등 지원
- **유통단계 GAP 인증제도를 신설하여** 유통업체의 GAP 관심 제고
  - \* (기존) 생산자 인증 → (개선) 생산자, 유통업자 인증
-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GAP 농산물 이용 확대 촉진**
  - **GAP 농산물 급식 시범학교 운영** 및 지자체 조례반영을 통해 100인 이상 단체급식에 **GAP 농산물 우선 사용 유도**
  - 국방부의 **군납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GAP 농산물 우대 적용반영**(9월, 국방부 협업)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GAP 캐릭터 제작·보급(7월) 및 GAP 한글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우수관리 → 안전관리, 12월)
- 단계적으로 GAP를 확산하여 중장기적으로 GAP 인증을 의무화하고, 수출단지 중심으로 Global GAP 확대
  -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특화단지를 조성('15 : 30억원)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규모화된 지역부터 GAP 의무실시 확대('18~)
    - 장기적으로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 '15년부터 지정되는 수출전문단지는 수출 상대국의 검역 및 수출여건 등을 감안, '17년까지 Global GAP 인증 추진
    - 수출전문단지 관리지침에 글로벌 GAP 인증요건을 신설하고, 인증 비용 및 기술컨설팅 집중 지원('15 : 25백만원)

## 다 축산분야 HACCP인증 확대

**HACCP 내실화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HACCP 컨설팅을 인증 희망농가('15 : 495개소) 뿐만 아니라 인증 이후 사후관리 평가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도 지원('15 : 355개소)
  - HACCP 확산과 동시에 지속적인 HACCP 인증·실천을 유도
- 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운용실태 평가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 등) 등 관리 강화
  - 도축장/집유장 평가계획 수립(5월/9월), 평가(6-9월/10-11월), 결과 및 조치(11월/1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
  -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확대\*에 따라 도축 검사원 적정배치(포유류 50명, 가금류 39명)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도축검사 실시
    - \*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 '14.7.1(일 8만수 초과 도계장, 8개소), '15.1.1(5~8만수, 11개소), '16.1.1(5만수 미만, 42개소)

## 라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생산부터 농축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월) 등 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 농가 재조사 예고제 도입 및 토양 중금속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 연구용역('15.1, 완료) 후, 토양 중금속 오염지도 작성 및 저감화 방안 마련
- 농약판매량, 병충해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쌀 안전성 조사 강화('15, 연중)  
- 전국 RPC 쌀 안전성 조사('14년산: 2~6월 1,000건 '15년산: 11~12월 250건)

#### □ 기준 위반농가 검사 확대('14 : 27천건 → '15 : 28) 및 검사대상 조정\* 등 식육 잔류물질검사('15 : 100천건) 내실화

- \* 잔류허용기준 신설 물질(2종) 및 오염 우려 농약(15종)은 검사대상에 추가, 위해도가 낮은 물질은 제외(17종)
-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육 부산물(내장, 머리 등) 관리 강화  
\* 위생관리매뉴얼 개발('14.12) → 현장 자율적용('15) → 도축장 평가에 반영('16~)
- 도축장 위생 실태를 중앙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기점검(반기 1회)하는 “순회감독제” 도입(7월)

### 학교급식 등 국민 관심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학교급식 등 소비자 관심분야 중점 관리 추진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조사는 소비지 및 유통단계에서 계약재배 농가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전환\*, 부적합품의 사전 차단 강화  
\* ('14) 학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 ('15)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 □ 농산물 중금속, 방사능 조사를 확대('14 : 5천건 → '15 : 5.1)하고, 중금속 성분조사 강화(납, 카드뮴 → 비소 성분 추가)

- 친환경 농산물은(쌀, 엽채류 등) 사용빈도가 높거나 위해도가 높은 320개 농약성분 이외 의심 농약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연중)

바른 식생활,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가정·학교·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생활교육 확산

- (가정)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 밥상의 날'로 지정(3월)하고, 아침밥 먹기 범국민 운동 추진
- (학교) 영유아·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식생활지도\* 및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확대 운영 등 실천·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 강화
  - \*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텃밭교육 교재(3천부) 및 텃밭상자(1천개) 보급 확대
  - \*\* 식습관교육 시범학교: ('14) 94개소 → ('15) 130
- (지역) 식생활교육기관·우수 농어촌체험공간 지정\* 및 대형 유통업체·농협 등과 연계하여 도시민 식생활교육\*\* 실시
  - \* 식생활교육기관: ('14) 56개→('15) 70, 우수체험공간: ('14) 160개→('15) 200
  - \*\* 롯데마트, 홈플러스 '문화교실'과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5.상)
- 농업·농촌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 \* 65세 이상, 남성, 1인가구, 군인, 결혼전 여성,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 바른 식생활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기반 강화

-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15~'19)」 수립(2월)
  - 가정·학교·지역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 \* 평가기획단('14.7~) 구성·운영,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공청회(1월)
- '공동 식생활지침' 및 '식생활 모형' 마련('15.하)
  - 전통 식생활 기반 한국형 식생활 실천지침 및 모델 구축
- 「바른밥상, 밝은 100세」 대표 캠페인 및 5대 실천과제\* 홍보(연중)
  - \* ①텃밭가꾸기, ②채소·과일 균형 섭취, ③음식물쓰레기 줄이기, ④아침밥 먹기, ⑤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 3.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정과제 12-2)

#### 1 추진배경

□ 식품산업은 '12년 약 152조원 매출로 연평균 6.8%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

\* 국내 농산물 공급액('11: 50.9조원) 중 식품·외식분야가 약 62.3% 차지

○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비율은 국내외 가격차, 공급 불안 등으로 31.2%('13년 기준 1,480만톤 중 462만톤)에 불과

○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 식품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토지·노동력 중심의 전통농업은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 및 미래성장산업으로의 발전에 한계

○ 과학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농업을 첨단 산업화하고, 종자·생명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

○ R&D 투자 기술의 현장 확산 미흡, 종자산업 기반 미약, 생명 자원은 규제로 인해 활용률이 낮은 문제 해소 필요

\* 농식품 기술 이전율 32.4%, 기술 사업화율(29.8%) \*\* 국내 종자시장 규모 : 4억\$(세계시장 1%)

\*\* 농업 생명자원 : 23만점 보유(세계 6위), 농업 유전자원 보급률 : 11%(미국 25%)

#### < VIP 지시 사항 >

◇ 우리 농업도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농업에 과학기술ICT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여갈 것. ('14.12.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종자생산은 정말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품종보호, 유전자원 공유 등 기업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14.11.19, 농업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

◇ 농축산 분야 개발된 유망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초기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14.2.24, 우리부 업무보고)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식품정책) 「국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 수립('14.3)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 비율(%) : ('12) 29.7 → ('13) 31.2 → ('22) 39.7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등 7대분야 35개 과제 추진

\* 10-10 프로젝트 :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산 원료로 대체

○ '한식정책발전방안('14.1)'과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2월)',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협의회 구성(4월) 등을 통해 한식 및 외식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술수준) 농식품 분야 R&D 투자 확대로 기술수준 향상



□ (종자개발) 새로운 품종개발로 로열티 지불액 절감 및 수출기반 마련

○ 종자로열티 26억원 절감 : ('13) 162억원 → ('14) 136

○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해외시장 분석(제도·동향 분석 21개국, 시장조사 10개국) 및 유용 육종자원 수집(238점) 확대

□ (생명자원) 갈색거저리('14.7), 흰점박이 꽃무지('14.9)를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하여, 식용곤충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시장 확대

## 나 미흡한 점

- 국산 농산물의 식품원료 사용 비율('13: 31.2%)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 미흡

\* 기업들은 국내외 가격차, 공급 불안정, 가공적성 등 이유로 국산 농산물 사용 회피

- 주요 가공식품 품목별 국산 농산물 원료 실태, 수입산 원료 농산물의 국산 대체가능성, 가공적성수요 등에 대한 체계적 실태 파악\* 미흡

\* (현행) 국산 원료 사용량은 조사(원료소비실태조사)가 되고 있으나, 품목별 원인 분석 미흡

-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미흡

(사례) 농업폐기물로부터 바이오매스 전처리·당화 공정 시스템을 개발, 연구실 내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산물 수집에 드는 비용 등으로 보급되지 못함

- 기술개발 투자시 사전에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고려 필요

- 종자주권 확보, 수출 등 新시장 창출을 위한 체질 개선 시급

- 글로벌 품종의 육종기술, 분자육종 미흡, 전문 종자업체 소수에 불과

\* 종자업 등록업체 1,368개('13) 중 10인 이상 종자업체는 27개(2%)

- 육묘시장은 확대 중이나, 육묘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미비로 인한 불량 묘 유통 우려

\* 시장규모 : ('10) 1,870억원 → ('13) 2,420 \*\* 육묘업체 수: ('97) 50개 → ('14) 292

- 육묘업은 신고·등록·허가 대상이 아니고 열악한 시설에서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분쟁해결 장치도 미흡

\* 육묘업체 분쟁 발생 추이(농진청): ('10) 19건 → ('11) 18 → ('12) 22 → ('13) 23

- BT 등 바이오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미흡\*

- 중장기 로드맵 마련, 상품화 R&D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필요

\* BT 등 바이오 신기술은 연구개발 활용이 초기단계이고 산업화 기반시설 구축도 미약



◆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및 국산 농축산물 원료 사용 확대**

-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 비율(%) : ('14) 31.2 → ('15) 31.7 → ('17) 34.7

◆ **R&D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농업 벤처 생태계 구축 및 종자 수출 확대**

- 종자수출액 : ('14) 40백만 달러 → ('15) 53 → ('17) 120

◆ **R&D 사업화 역량 강화, 농업 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품종 개발, 종자삼각벨트 구축 등 종자산업 기반 확충**

**가 정책 추진여건**

□ **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농식품 시장에서의 국내산과 수입산간 경쟁 심화**

○ 기능성 및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및 가공적성 개발 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 강화 필요

□ **창의적 아이디어, ICT·BT와 농업 간 융복합을 통해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R&D에 대한 수요 확대**

○ R&D 투자시스템을 실용화·사업화 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애로 조기 해소와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체감성과 제고 필요

□ **세계 종자시장 규모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생명자원 확보 경쟁 심화**

○ 골든시드 프로젝트 본격화, 효율적 육종기반의 구축 및 국내 종자업체 수출지원 등으로 종자강국 진입 토대 마련 필요

## 나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 □ 식품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15.6), 식품기업 등 제공 추진

- 농업경영체 등록 D/B 및 진흥청의 영양정보 등을 활용, 산지별·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등 원료 농산물 정보를 생산·공급  
- 농산물의 가공적성 및 영양·기능성 등 유용 정보 추가 연계('15.12~'16)

### □ 가공식품의 국산 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

- 가공식품 원재료 사용 실태 조사 및 수입산 원료의 국산 대체가능성 분석(8월) 등을 통해 국산 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10월)
- 농협 가공공장, 산지유통시설, 기존 소재업체 등과 연계, 국산농산물의 식품 소재화 연구\* 확대('14: 20억원 → '15: 40) 및 가공 지원 추진('15.신규: 9억원)

\* (사례) 국산 농산물 이용 분말소재, 고부가 기능성 소재, 수출전략 Sauce 소재 등

### □ 전통식품·전통주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 촉진

- 전통주 홍보·체험을 위한 전통주갤러리 운영(2월, 문화부 협업), 전통주 및 국산와인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 추진
- 김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 수입김치 유통·소비 관련 통계 구축, 국가별 식문화 조사를 통한 레시피 개발, 김치 이용 가공식품 제조 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생산단지 조성 등
- 식품명인 활성화 및 상품화 지원, 식품명인의 기능 전수 지원 개선 등을 위한 식품명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6월)

- **식품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R&D, 통계 등 인프라 확충**
  - **국책연구기관·지자체·대학·기업연구소 등과 식품 R&D 협업체계 구축,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식품 R&D 중장기 방안\* 마련(1월)**
    - \* 국산대체 및 가공적성 연구, 식품소재 개발, 국가별 수출전략 상품 및 K-Sauce 개발 등
  - **농진청, 한식연, 농기평, 민간 식품연구소 등을 연계한 식품 R&D 협업체계 구축(3월, 분기별 1회) 및 결과물의 성과관리 체계 강화**
  - **가공식품 국산 원료 실태, 식품 소비량, 주종별 기본 통계 등 식품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식품 통계·정보 체계화 방안\* 마련(3월)**
    - \* 식품 통계의 활용방안,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국내산 농산물 공급 기능 구축 및 국내산 농산물 상품화 R&D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농업경영체 등록 DB 기반을 활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국산 원료 정보체계 구축('15.12) 및 품질안전·패키징분야 임시연구소 구축·운영('15.3)

**한식·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 **한식의 국내 기반 정비 및 해외확산을 통한 한식 진흥**
  - **한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문화로서의 '한식' 가치 재정립**
    - \*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플랜 수립(3월), 등재 목록 구체화를 위한 과제연구 등
  - **한식 홍보영상·요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 확충, 문화적·역사적 원형과 전통 자료 DB화·자원화 추진**
    - \* 해방이후 한식 변화상 조사·자원화, 사찰음식 중심 건강 한식 레시피 보급(11월), 한식사진 공모전(9월) 등
  - **국내 한식 전문인력 교육 과정 및 대상자 범위 확대, 교육 이수생 취업 연계 지원**

- 국내 한식 셰프 대상 재교육 및 음식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관광통역 안내사, 사찰음식 등) 개발 및 시범 운영**
- 상시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교육생 대상 교육만족도, 경영변화 자료 등을 DB화하여 사후관리
- \* 국내 한식셰프 해외 유명 요리대회 참가지원 등 지원범위 다양화 추진

## □ 외식-농업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확대('14: 신규 4개 → '15: 6개) 및 외식업지구의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지침 개선**(2월)
  -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대비 **대규모 우수 외식업지구 조성계획 수립**(8월)
- 외식-농업계 연계 '식재료 산지 페어' 참여대상 다양화(6차산업화 인증 사업자, 마이스터 등 우수 농업인 등)로 우수 농식품 판로 확대
- **지역 농산물과 외식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
  - \* 최근 외식기업과 농업인들의 협력을 통한 한식부페 개설 증가(CJ 계절밥상-벤처농업 대학, 신세계 올반-장안농장, 이랜드 자연별곡 등)
  - 식재료 총서 및 전국지도 보급 등을 통한 생산자와 업체간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외식업계의 식재료 유통현황 조사**를 통해 국산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 모색
  - 중장기적인 시계열 통계 구축을 위한 표본설계 후 본 사업 실시('15)

**음식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 음식자원을 관광·체험과 연계된 향토음식 투어 상품화

- **전통주·향토음식·체험마을** 등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15: 10코스)
  - \* 전국 지역 축제 및 5일시장 등 장터 연계 관광코스 개발 및 전통시장 음식 맵 보급
  - 찾아가는 양조장('14: 10개소 → '15: 18),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 확대('14: 10개소 → '15: 13) 등 음식관광 자원 확충

○ 궁중\*·사찰·향토·종가음식 등 **음식자원 발굴** 등을 통해 음식문화 보급\*\*

\* 사찰음식 교육, 연구 등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사)금단전통음식연구원 설립('14.12)

\*\* 궁중음식 레시피 국·영문본 제작(2월), 음식관광 해설과정 교육(5월), 사직대제·종묘 등 의례음식 복원(10월), 사찰음식 레시피 개발(11월), 종가음식 사업화 연구 등

□ **외식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우수 셰프·음식점 발굴·홍보를 통한 미식문화 조성으로 음식문화 관광 활성화 유도**

○ 외식 서비스 현장 및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통한 외식 서비스 수준 향상

\* 전문가, 관련 협회,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 도입 확산 유도

○ 국산 식재료 활용과 미식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셰프 및 음식점 발굴·홍보

\* 프랑스의 농사공로상(식생활 문화 발전 및 공헌), 일본 농림수산성의 요리 마스터즈 표창제도(농업과 음식의 연계에 기여한 요리사를 표창) 등

□ **한식에 대한 국내외 웰빙 이미지 확산 등 홍보 강화**

○ 국내외 국제행사 등과 연계, 한식의 역사, 조리과정, 시식 등 홍보

- 세계적 스타 셰프 초청 식재료 투어 및 국내 유명 셰프 해외 요리 대회 지원, 광복 70주년 연계, 한식사랑 한식위크 축제 등

\* 마드리드 퓨전(2월), IDB 연차 총회(3월), 밀라노 엑스포(5월~10월), 서울 고메 등

- 한·아세안 정상회의 영부인 오찬 행사('14.12.12) 백서 발간 및 국제행사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한식의 체계적 홍보 추진

○ **한식과 IT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한식정보 제공

- 국내 한식당 정보, 한국음식 75선, 한식 주제 게임 등 모바일 웹 개발

## 나 과학기술로 창조농업 혁신 선도

R&D 성과 확산을 위한 전주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 기획 단계부터 실용화·사업화를 고려하는 R&D 시스템 도입

- 품목별 협(의)회·연구회 대상 현장 설명회 정례화(분기 1회)

\* 현장 기술수요에 대한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운영('14.2~)

-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바로 사업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기업 간 R-I 듀오 시스템(기업 가상연구소) 구축(3월)

\* 도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의 포장을 기업 실험공간으로 활용, 중소기업 매칭비율 인하(25% → 10), 기술가치평가 실시 의무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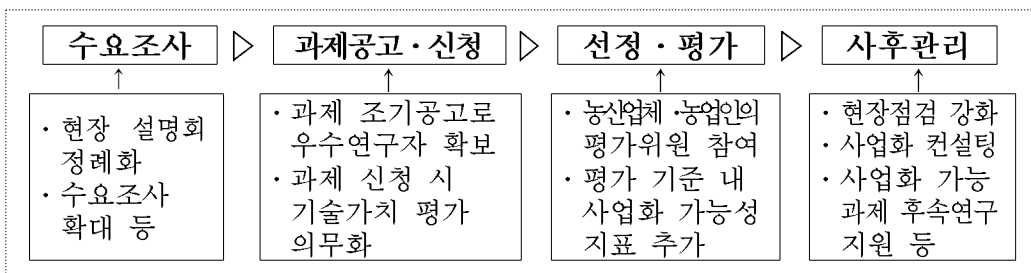
- 과제 선정시 투자전문가(펀드), 벤처기업인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제안된 과제의 실용화·사업화 가능성 평가\*(3월)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3월)

- R&D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연구비 횡령·유용시 제재 부과금\*(1월) 및 R&D 클린 신고제\*\* 도입(3월) 등

\*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 부과, \*\* 부정집행 확인 시 집행비의 30%이내 신고자 포상

#### < R&D 사업화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안) >



### □ R&D부터 산업화까지 일관 지원하는 종합프로젝트 추진

- 지역특화 품목의 산업화를 위한 지역 농산업 육성 Project 확대\*(3월)

\* ('14) 시설원예 중심 시범사업 → ('15) 축산, 곤충, 약용작물 등 농업 전반

- R&D 계획, 추진상황 및 홍보계획 점검 정례화 등 **종합조정 기능 강화**
  - **농식품부(실용화 연구)와 양청(기초원천)의 역할을 정립**하고 성장동력 과제를 선정, **기초→실용화 일관 연구·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
- **가축질병** 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다부처 공동 R&D 추진**(15.하)

□ **7대 농정 현안과제 해결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분기별 실적점검)

- **모델 개발을 3년→2년 이내로 단축**, 조기 현장적용 및 보완 추진
- **반기별로 계량적 성과목표를 제시**토록 하여 사업단별 책임성 제고
- **제도화 필요 과제\***는 **조기에 준비**하여 시행토록 실적지표 조정
  - \* 예시 : 가축분뇨 자원화 모델의 악취저감 매뉴얼, 고품질 액비기준 도입 등

□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과제 발굴 등 정책개발 강화**

- **대농(첨단화), 중소농(6차산업화), 벤처(창업 지원)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 「**창조농업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2월)
  - 세종(ICT 융복합), 충북(BT) 등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전략 마련**
- **농업 외부의 집단지성을 포함, 창조농업 협의체**를 구축하여 **선도 과제 발굴 및 범부처 협의체\* 상정**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농업분야 벤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창업단계) 지식재산권 컨설팅 확대**(14 : 40건 → 15 : 60), **특허출원료 지원**(14 : 100건 → 15 : 120) 및 **벤처 인증\*(중기청) 컨설팅 신규 지원**
  - \* 벤처인증 혜택(중기청) : 법인세 등 감면, 자금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등
- **정부지원 R&D로 얻어진 특허, 시제품 등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비 지원**(14 : 58억원 → 15 : 70)

□ (성장단계) 창업자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전문펀드 투자유치, 지재권 담보대출 등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술금융 토대 마련

\* 농식품 R&D 전문 펀드, 애그로씨드 펀드(각 100억원)

○ 기술가치 평가 인력풀을 확대(300명→500)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전문투자자 등의 선정비율을 30%이상으로 상향 조정

□ (성숙단계) 시제품 제작 최대 1억원 지원('14 : 42건→ '15 : 50) 및 농협 테스트판매 지원('14 : 15개 품목→ '15 : 20) 등 판로 뒷받침

○ 상품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양산화 공정개발비용(19억원) 및 양산시설 지원(업체당 10억원 이내, 융자)

□ (지원체계) 농식품 벤처 및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 농식품부·유관기관 TF를 운영(1월)하여 종합대책 마련(2월)

- 기술금융 지원 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정책수요자 참여 제고 등 농식품 산업 벤처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설치(5월), 창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지원

## 다 종자산업의 전략산업화

**종자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품종개발) 골든시드 프로젝트 품종개발 본격화 및 시장개척 추진

○ 품종개발('14 : 42건 → '15 : 65) 및 고추, 배추, 무, 벼 등 수출 품목 현지 적응성 시험 확대(10여 개국)

\* GSP 수출액 : ('14) 300만\$ → ('15 목표) 680



- 국내 취약 품목 중점 개발(파프리카 4품종, 토마토(대과) 1품종)
- \* 하나알 2호(파프리카) 중국 처녀수출, Zodiac(토마토) 터키 품종등록 등 성과('14)

○ 「로열티 대응사업단」을 통해 수입대체 품종 개발 확대

- \* ('14) 6작목 53품종 → ('15) 난, 장미, 국화, 딸기 등 8작목 56품종
- \*\* 국산품종 보급 확대에 따른 로열티 지불액('14 : 136억원 → '15 : 133)

□ (수출지원) 신품종의 수출시장 교두보 마련 및 판촉 확대

- 신품종 현지적응성 분석 및 홍보를 위한 해외시범포·전시포 확대
- \* ('14) 3개 지역(중국·인도·인나) / 73개 품종 → ('15) 4개 지역(베트남 추가) / 100개 품종 이상
- 종자수출협의회를 활용한 국내종자업체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 \* 종자국제회의 총회 참가 수출상담 및 홍보 부스 운영(2회, 5·11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23개 회원사별 2회, 6~11월)

□ (기반구축) 종자산업 성장·발전을 위한 일관 지원 시스템 확립

- 종자삼각벨트(민·연·관 상설협의체 구성, '15.하)구축\*을 통해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마련
- \* 산업기반(김제 민간육종단지) - 육종소재(정읍 방사선육종센터) - R&BD(전주 농진청)
- 우수종묘 생산, 안정적 공급,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종자산업법 개정, 12월)
  - 종묘업 등록제도와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대상에 육묘업체 포함
  - 신규 종자업체 진입·투자 촉진을 위한 종자업 시설기준 완화(9월)
  - \* 장비/포장의 임차사용 허용 : (현행) 채소·식량/과수 → (변경) 모든 작물
- 민간 및 지자체 자체보증 여건 조성으로 식량작물 민간종자시장 활성화
  - 감자·옥수수 종자는 국가보증에서 자체보증 대상으로 전환('15.~)
  - \* 원활한 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종자원에서 종자관리사 교육 및 자격관리

## 라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新시장 창출

###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 □ 농업과 곤충,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융복합 강화로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 곤충산업 시장규모 ('11)1,680억원 → ('15)2,980 / 미생물산업 시장규모 : ('12)4,720 → ('16)5,249

#### ○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식품원료 대상 추가('15.12)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조리법·분말화 기술 본격 개발

\* 식품원료 대상 곤충 : ('13) 3종 → ('14) 5 → ('15) 7

#### ○ 미생물농약·비료·사료첨가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 상품화 연구, 기술보급 등을 위해 지역별 센터 건립('14 : 1개소 → '15 : 3)

#### ○ 유용 생명자원의 상품화 연구 및 기술보급 등을 위해 지역별 생명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 미생물센터(3개소), 곤충센터(4), 양잠산물종합단지(2), 천연색소센터(2)

#### □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3월)

○ 종자, 곤충, 양잠, 미생물, 신소재 등의 가치 창출 및 이용 확대 방안

○ 범부처 R&D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벤처육성 등 민간 역량 강화

#### □ 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 발효('14.10) 대응

○ 생명자원을 시험·연구용 외 상업적 이용 허용(농수산생명자원법 개정 6월) 등 규제 개선으로 국내 생명자원의 활용도 제고

○ 육종가, 연구자 등 국내외 수요자의 생명자원 접근·활용 체계 구축

-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 내 영문 DB 구축 등 지원 시스템을 마련(12월)하고 나고야 의정서 관련 가이드라인 및 유의사항 제공

○ 생명자원 통합 DB(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확충으로 특성평가, 특허정보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 생명자원 정보 DB 6만점, 국내외 특허 DB 4만건 확대

## **4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1. 정주여건 개선**
- 2. 농촌주민 복지 증진**
- 3. 소득 및 경영 안정**



## 1 추진배경

- **농촌 정주환경이 취약하고 읍·면 중심지의 서비스 거점 기능 약화**
  - 노후·불량 주택 등 농촌의 **낙후된 주거여건** 등에 대한 개선요구 증대
    - \*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10) : 읍 12.7%, 면 27.0%(전국 평균 9.7%)
    - \*\* 슬레이트 주택 비율('13) : 농촌 17.88%(도시 1.67%)
  - 과소화마을 증가에 따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서 중심지(읍·면 소재지)의 중요성 증가**
    - \* 농촌 지역 20호 미만 마을(비율) : ('05) 2,048개(5.7%) → ('10) 3,091(8.5)
- **보육·보건·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농간 생활격차가 여전**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필요**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 모델을 정립**하고, 읍·면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방식 개편
  - 슬레이트 개량, 단열 등 노후·불량 주택 개선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마을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리모델링 시범사업, 4개지구)
    - \* 주택 177동 개량, 빈집 99개소 정비 및 공동생활홈 5동 조성 등
  -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확산을 위해 **마을가꾸기(807개 마을) 추진** 및 **농촌마을 콘테스트 개최('14.11.6~7)**
    - \* 현장포럼('14 : 350개 마을)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14 : 9개소) 운영 등

- 인프라 구축 위주의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개편하고, **중심지 선도(시범)지구** 지정

\* 복지·문화·경제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배후마을과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읍·면과 주변 마을이 관련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거점으로 육성

□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 취약지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는 농촌형 교통 모델 시범사업** 추진('14: 13개소)으로 **생활여건 개선**

\* 교통서비스 만족도 48.3점 ↑(운행 前 39.9 → 後 88.2, '14.12 충남발전연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업인 특례\*** 확대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차감대상 직불금 항목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범 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15~'19) 수립(12월)**

- 삶의 질 위원회(위원장: 총리)를 거쳐 18개 부처 합동 보건복지·교육·정주여건·일자리·안전 등 7대분야 추진계획 마련(46.5조원 규모)

**나 미흡한 점**

- 현장 애로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마을정주환경 개선사업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고, 읍·면 중심지 거점 기능이 미약**

\* 지자체 개선요청사항 : 주민·지자체 부담완화, 짧은 사업 기간(2년), 획일적 총사업비(마을규모 미고려) 등

-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존재

**3 '15년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 ◆ **읍·면을 농촌 경제·문화·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취약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확대**
  - 농촌 중심지 육성(선도지구) : ('15) 15개 → ('17) 54(누적)
- ◆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과 농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농촌 삶의 질 향상

## 가 정책 추진여건

- 경제발전 및 소득상승에 따라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 지속 증대
  - 조속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지자체의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할 필요
- 소규모 마을 증가 및 귀농귀촌자 등 농촌주민 구성 다양화
  - 농촌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달체계 구축 필요

## 나 주거여건 개선 및 중심지 활성화

### 농촌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주거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 개량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추진(대상선정 : 3월)
  - '15년 30개 내외 지구 선정(1,200여 주택 개량)을 시작으로 지속 확대
  - 지자체·주민의 사업 부담을 완화\*하고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지원
    - \*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부담 완화  
(지자체) 사업 기간 확대(2→3년),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
- 신규 마을 조성을 어렵게 하는 입지 제한 및 조합설립 요건은 완화\*히되, “농촌다움” 유지를 위해 경관 등의 조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원
  - \* (입지제한) 농림지역 50% 이내 → 자투리 농지 활용 시 미적용  
(조합설립) 20명 이상 → 소규모 마을 조성이 가능토록 5명 이상으로 완화
- 전매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신규마을조성 내실화
  - \* 입주자주도형 신규 마을의 전매제한 적용시점 등 명확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읍·면 중심지를 농촌 지역 서비스 전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읍·면 중심지의 거점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 마을과 연계를 강화
  - 전문가 그룹(중앙계획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구체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주민 및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를 지속 추진

<중심지 선도지구 사례> 복지·경제·지역공동체 활동의 복합 중심지 기능 활성화

- 유희건물을 다문화가족, 노인, 청소년 복지서비스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배후마을에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전통시장을 리모델링,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여 배후마을 농업인의 판로 확대
- 장날 고령자 대상 한글학교 운영 및 농촌형 교통서비스 결합 등

## 다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

### 행복마을 콘테스트 등 지역역량 강화 지원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 참여 마을의 폭을 넓히고, 참여를 통해 주민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복마을 콘테스트**」 추진 방식 개선
  -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활동·성취도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 개선(2월)
    - \* (평가기간) 1개월 → 3개월 이상, (평가요소) 성과, 경관 등 외적 요소 → 참여, 노력 등 내적 요소, (평가방법) 사례발표 위주 → 현장점검을 통한 과정평가 위주
  - 콘테스트 준비·참여과정에서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행복마을 콘테스트 개편 방안** 마련(10월)
-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방식 다양화
  - 성과가 검증된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지역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사례 발표대회 개최(6월)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젊은 층 및 농촌에 특화된 복지 서비스 확대**로 주민 체감도 제고
  - (보육)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공동아이돌봄센터('15 : 34개소) 지원 및 농번기 주말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주말돌봄방('15 : 15개소) 사업추진
    - **맞벌이 여성농업인도 어린이집 입소나 아이돌봄 사업의 우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맞벌이 증명 방법 개선**(1월)
      - \* 맞벌이 증명서류에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추가
  - (보건)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질환 예방 교육**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확대**('15 : 8개소)
    - \* 질환 유발 농작업 환경 및 예방운동 등을 수록한 교육교재와 동영상 제작·배포
  - (교통)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중심으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확대('14 : 13개소 → '15 : 19)하고, **유형별 가이드북** 마련·제공(3월)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로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 기능 강화
  - 의료 검진,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15 : 50회)
-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제도 합리화**
  - 대부분 농어업인은 현행대로 28%를 지원하되, 고소득 농어업인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 지원 및 지원 배제 추진(7월)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5.7, 복지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범부처 협업 활성화를 통한 **제3차 삶의 질 향상 대책**('15~'19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 추진체계 개편**
  - 교육·복지 등 분과위·특위를 신설(6월)하고, 분야별 **국책연구원** 및 시·도발전연구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3월)
  - 농촌주민, 전문가, 지역대학,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3월)하여 정책성과 평가 및 피드백 강화

## 2. 농촌주민 복지 증진

[국정과제 52-1, 2]

### 1 추진배경

- 농촌 고령화 심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체감형 서비스 수요 증대** 전망
  - \* 고령화율(농가/전국) : ('01) 24.4%/7.6% → ('13) 37.3/12.2
  - \*\* 소득격차(농가/도시) : ('10) 74%(32,121/43,581천원) → ('13) 63(34,524/55,275)
-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 중 영농규모 0.5ha, 판매액 500만원 미만의 영세소농 비중이 45%, 55%로 다수를 차지해 **생활안정 수단 필요**
- 영세고령농의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후 생활 안정 관련 복지서비스 **확대로 체감도 제고** 추진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영세고령농의 **소득안정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료 50% 지원
    - \* 기준소득금액/월 지원금액 : ('12) 79만원/최대 35,550원 → ('14) 85 / 38,250
  - 농어업인 **부양의무자에게도 농어업인 특례**를 적용하고, **소득 평가액 산정 시 차감대상 직불금 항목 확대('14)**
- 농촌 취약계층을 고려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사업 시행**으로 영세고령농 특성을 감안한 복지서비스 **확산** 계기 마련
  -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13 : 14백개소 → '14 : 16)하고,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1인가구 추가('14)**

○ 공동생활홈·공동급식시설·작은 목욕탕 등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작성**(‘14: 75개소)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확산 추세

\* 경남 공동거주시설, 전남 공동급식지원, 전북 작은목욕탕 사업 등

## 나 미흡한 점

□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착 미흡**

○ **농업인의 연금 가입률\*이 낮고, 수혜율도 저조**

\* 국민연금 가입률(‘13, 20~50대 가구 기준) : 농어촌 71.2%, 도시 82.1

○ **농지연금\***은 일부 제한적 가입요건(면적기준 등)이 활성화 저해

\* 신규가입 농가 : (‘12) 1,291호 → (‘13) 725 → (14) 1,036

□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 등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사업 운영모델 부재**

## 3 '15년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 **영세고령농 특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 생활안정 및 정책체감도 제고**

## 가 정책 추진여건

□ 개방확대로 인해 영세고령농은 보다 큰 소득·생활 불안에 노출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영세고령농 배려 강화 필요

□ 농가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수요 증대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농지연금 활성화 및 체감형 복지 서비스 내실화 필요

## 나 영세고령농 소득·복지지원 확대

### 영세고령농 등을 위한 배려농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제도 개선으로 영세고령농의 노후 생활안정 강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상향(1월) 및 농업인 대상 홍보 강화로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 \* 기준소득금액/월 지원금액 : ('14) 85만원 / 38,250원 → ('15) 91 / 40,950
  - 담보농지 감정 평가율 상향 등 농지연금 활성화 추진
    -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의 합리적 조정(70% → 80 수준) 및 소유농지 면적기준(현행 3ha 미만) 폐지, 가입 시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고
- 영세고령농의 주거·영양·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체감형 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및 확산 도모
  - 기존 공공 유희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동생활홈 등 고령농 공동생활시설 71개소\* 조성 추진(~12월)
    - \* 공동생활홈(35개소), 공동급식시설(20개소), 작은목욕탕(16개소)
  - '14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사업운영 모델을 개발(3월)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상반기)
- 질병·사고 농가의 영농활동 지속 및 경로당 등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영농도우미 지원 범위를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외 통원치료(암 질환)까지 확대(1월)하고, 대상 확대('14: 16천가구 → '15: 17)
  - 65세 이상 가구, 경로당 등 농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4: 10천가구 → '15: 15)

#### 1 추진배경

- 쌀 관세화, 영연방·중국·베트남과의 FTA 체결 등 개방 확대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증가로 **농업소득 불안 요인 증대**
  - 최근 2년간('13~'14) 농가판매가격 지수가 연속 하락
    - \* 농판지수 : ('10) 100 → ('11) 107.6 → ('12) 117.5 → ('13) 113.2 → ('14.3분기) 104.5
- 이상기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증가**
  - \* 여름철 폭우발생횟수(시간당 30mm이상) : ('90) 70회 → ('00) 82 → ('11) 133
- 농업·농촌 경제의 활력 창출기반을 다지고, **영농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촘촘한 소득안전망 마련 필요**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80만원/ha→ 90) 및 동계논 이모작 식량·사료 작물 직불금 신규도입(40만원/ha)
    - \* 쌀고정직불금 지원 확대 : ('13) 6,866억원(농가당 88만원) → ('14) 7,554(99)
-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선 및 재해 지원 제도 보완**
  -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13 : 56품목 → '14 : 59)하고, 상품개선협의회를 활성화('13 : 5회 → '14 : 14)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선\*
    - \* 보상기준 표준가격 인상(특정5종 6.4% ↑, 벼 5.6% ↑),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70·80% → 60·70·80·85), 최저 가입면적 기준 완화, 가입기간 연장 등

-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21개 항목), 재해지원 절차 간소화\*\*, 재해 농가 복구 의무 폐지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 완화

\* 농경지유실, 과수재배시설, 농약대 등 평균 19.5% 인상

\*\* (기존) 간접지원 항목별로 개별 신청 → (개선)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 □ 금융부담 완화, 에너지 절감 등으로 농가경제 안정에 기여

- 농지규모화사업 등 금리인하로 해당 농가당 연 96만원 이자비용 감소(총 321억원 절감)

- 지열냉난방시설, 고효율 냉난방 시설·자재 지원, 에너지절감사업단 운영 등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 면세유 사용량 중 난방유 비중 : ('05) 65% → ('10) 63 → ('13) 57

### 나 미흡한 점

#### □ 쌀·밭 직불금은 까다로운 지급요건으로 수혜대상이 제한적\*이며, 농산물 가격하락위험 관리장치 부족

\* 신규농 쌀 직불금은 2년이상 1만㎡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밭직불금은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만 해당

#### □ 농업재해보험은 지속적인 품목 확대,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가입률이 낮은 실정('14p : 16%)

- 제도 운용기간이 짧은 한계도 있으나, 보장수준 등 상품설계에 대한 불만, 농가의 보험료 부담 및 이해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100만원/ha로 조기 인상하고(당초 목표 : '17년), 밭고정직불을 신설하는 등 직불제 확충

◆ 농작물 재해보험 10만호, 15만ha 가입

\* 농가수/가입면적 : ('14) 8.9만호/13.4만ha → ('15) 10/15

## 가 정책 추진여건

□ 농가 소득은 '13년에 큰 폭(11.3%)으로 상승하였으나, FTA 등 개방확대와 경영비 증가 등으로 하락 위험성 상존

\* 농가소득 : ('06) 32,303천원 → ('10) 32,121 → ('12) 31,031 → ('13) 34,524

\*\* 농가/도시근로자 소득 : ('06) 78.2% → ('10) 66.8 → ('12) 57.6 → ('13) 62.5

□ 자연재해 위험 증대 및 재해보험금 지급사례 확산에 따라 농가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

\* 품목 : ('01) 5(농작물2 + 가축3) → ('10) 39(25+14) → ('12) 51(35+16) → ('14) 59(43+16)

가입농가수 : ('01) 12천호 → ('10) 62 → ('12) 86 → ('14) 88

## 나 촘촘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농업인 소득안정 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 (소득안전망 체계화) 받고정직불과 수입보장보험(밭작물 중심)을 도입하여 쌀 뿐만 아니라 밭에도 '소득안정 + 경영안정' 체계를 구축

\* 쌀 소득안전망 : 소득안정(고정직불), 경영안정(변동직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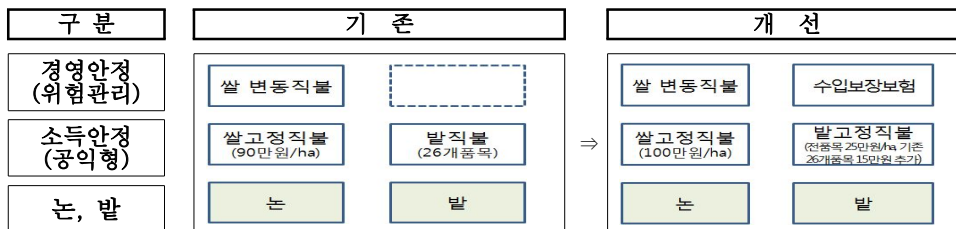
○ (밭직불) 대상농지의 지목과 품목 제한을 폐지하여 고정직불로 개선('14 : 26개 품목 → '15 : 전 품목, 25만원/ha)

○ (농업수입보장보험)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14개 시·군) 시범사업 실시

- 시장여건 변동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기상상황 변동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수준 (기준가격의 70%~80)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험 상품 도입

\* 수입보장보험 품목 : ('15) 3개 품목 → ('20) 10 → ('25) 15

< 소득안전망 체계화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쌀직불제)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및 신규진입 요건 완화**

- '15년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4 : 90만원/ha → '15 : 100)
-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 신규농 쌀 직불금 지급요건 개선방안 >**

	현행	개선
경작 기준	직불금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1만㎡ 이상 경작	직불금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
판매액 기준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밭직불제) 지원대상 및 이모작 직불 단가 인상(40만원/ha→50)**

- 밭고정직불 도입에 따른 대상면적 확대('14 : 323천ha → '15 : 619)로 지원예산 대폭 증가 ('14 : 1,292억원 → '15 : 1,813, 40.3% ↑)

**< 밭 직불금 개선 방안 >**

구분	기존 26개 품목 단가 (대상면적)	신규품목 단가 (대상면적)	이모작 직불 단가 (대상면적)
현행 (323천ha)	40만원/ha(97천ha)	-	40(226)
개선 (619천ha)	40(110)	25(358)	50(151)

\* 기존 26개 품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40만원 지급(고정직불 25 + 15만원 추가)

**다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재해보험 고도화**

**농업재해보험을 지속 보완하여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덜겠습니다.**

□ **(재해보험) 가입면적 확대 및 보험 인프라 지속 확충**

- 가입대상면적이 넓은 벼 등의 상품개선 등으로 15만ha 가입 유도
  - **(벼)** 도열병 보장, 85%보장형 상품개발, **(농업용시설)** 판매기간 확대(4개월→8), **(과수5종)** 봄동상해 보장수준 인상(50%→70) 등
-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보험 전담기구 본격 운영(1월~)**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분기별 1회)하여 상품개선에 반영 추진



- 신속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6월)
  - \* 손해평가사는 '15.12월부터 매년 1회 선발하여 '20년까지 2,000명 양성
-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종합위험방식 시범사업**(배 30곳, 단감 12, 사과 3) 실시(2월)
  - \* 보험 대상품목 : ('13) 56 → ('14) 59 → ('15) 62 → ('17) 69

**충실한 재해지원으로 농업인의 조속한 재기를 돕겠습니다.**

- **(재해지원)** 체계적 재해대응을 위해 재해지원제도와 재해보험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 재해지원과 재해보험의 체계적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3월)
-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수준 상향**(1월~, 1.1억원) 및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12월)
  - 영세농을 배려하기 위한 **영농규모별 보험금 차등적용 방안** 마련
  - 농업인안전보험 급여 외 간병·직업재활 급여금 등 수요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보급

**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경영비 절감 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덜겠습니다.**

- **(정책자금)** 시중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 감소
  - **3.2조원 금리인하**(6개사업\*)로 농가부담 336억원 경감
    - \*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귀농귀촌정책, 축산경영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 3%이상 정책자금 비중 : ('13) 57.7% → ('14) 51.0 → ('15) 38.0

- 시중 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간 용자조건 (금리·상환기간)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방안 마련

\*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변동금리 적용, 시행 중('14년 12월말 기준 3,779억원 지원, 연간 이자절감액 약 32억원)

□ **(농신보) 농업인의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하고, 기술 및 사업성 기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신보 제도 개선 추진**

- 위탁보증 한도 확대(3천만원→5), 무보증신용 한도 상향(1.5천만원→2) 및 보증서류 간소화 등 신용보증체계 개선

- 신용평가 시 사업성 비중이 확대되도록 사업성 평가모형\*('13.5월 개발) 리모델링 추진

- ('15~'16) 추가운용 및 리모델링 추진 → ('17) 사업성 평가 확대 적용

\* 신용보증 금액의 20%(최고 3억원) 이내에서 신용평가와 별도로 추가한도 부여

**농기계 임대사업, 에너지 절감 지원 등으로 경영비를 줄이겠습니다.**

□ **(농기계) 주산지별 특화 임대 사업소 확대('14 : 335개소 → '15 : 380) 및 권역별(안성, 군위, 장성)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으로 농작업 비용절감 추진**

- 일괄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 ('14) 벼 면적의 28% → ('15) 30

□ **(에너지 절감) 발전폐열 활용시설 및 저수열난방시설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시설 다양화**

- 발전소 온배수, 소각장 등의 폐열을 농업시설 냉난방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지원('15 : 77억원)

- 초기 투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새로운 냉난방시스템 보급** 추진

-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 공간은 적게 소요되는 지중저수열냉난방 설치비 지원(8.8억원/ha)

\* 지중열의 시설비는 지열의 63%, 설치공간은 21% 수준

## **IV. 2015년 현안업무 추진계획**

- 1.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 2. 쌀 관세화 대응 철저**
- 3. 가축질병 대응 강화**



# 1. 내실 있는 FTA 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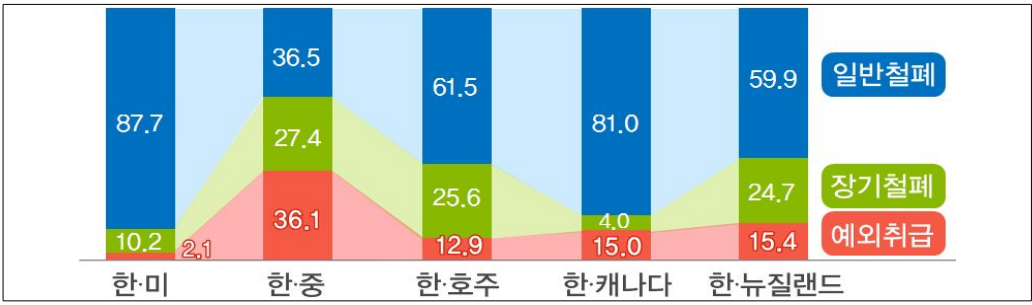
## 1 추진배경

- 최근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우리 농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 호주('13.12월), 캐나다('14.3월), 중국('14.11월), 뉴질랜드('14.11월), 베트남('14.12월)
- 개방화에 따른 저가 농산물 수입증가와 국내산 소비감소 등이 겹치면서 농가소득 감소 및 농업성장 정체 유발
  - \* 농축산물 수입 실적(백만불): ('10) 17,210 → ('13) 23,793
- 한중 FTA 체결로 개방화 완전 편입과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 농업의 기반붕괴에 대한 우려 확산
  - \* 중국과 농산물 가격차(국산/중국산, '13) : (참깨) 662%, (콩) 494, (팥) 789
  - \* 중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농업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농민신문, '14.11.7)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한·중 FTA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한미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타결, FTA 최대 현안이 큰 갈등 없이 마무리
- 협정제외(쌀),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등 다양한 예외수단 확보



- 진정성 있는 소통(약 180회)을 통해 현장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계는 한·중 FTA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나 미흡한 점

- 그 동안 마련한 FTA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농업계 불만 존재
  - 기존사업과 차별성 부족, FTA와 연관성 낮은 사업, 지원규모 과장 지적
- FTA 대책 이행 관련 논란 지속 및 사회적 합의 부족
  - 피해보전직불의 수입기여도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수입기여도 명문화 등을 위한 「FTA 특별법」 개정 절차 중단
    - \* 한우협회 소속 농가(4명)는 '13년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법에 근거 없는 수입 기여도를 적용하여 직불금이 축소 지급 되었다며, 미지급액 환급 소송 제기('14.4.22)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 마련 미흡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FTA 체결국에 대한 전략적 수출 확대

- 농식품 수출액 : ('14.) 61.9억불 → ('15) 77 → ('17) 100

### ◆ FTA 체결국 대상 국내대책 마련(국회 비준시 제출) 및 이행

- 국내 피해산업 대책 마련, 전략적 수출확대,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

## 가 정책 추진여건

- 중국·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증가 등을 우려하며 강도 높은 국내대책 마련 요구
  - 특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요구 증가
    - \* 한·호/캐나다 FTA 여·야·정 합의('14.11.13)에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방안 및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대안에 대해서 한중 FTA 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농업계의 우려가 크나,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대책 추진에 필요한 투융자 예산 확보에 어려움 예상
  -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체계를 구축, 한정된 예산의 집행 효율성 제고 및 평가·환류 시스템 강화 등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

## 나 철저한 FTA대책 수립

FTA체결국별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 (추진절차)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

(절차) ① 영향분석 → ② 대책 초안마련 → ③ 의견 수렴 및 협의 → ④ 농업인등 지원 위원회 → 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 ⑥ 대외경제장관회의 → ⑦ 국회비준 요청

- 농업인단체(전국단위, 품목별) 간담회, 국민공감위원회, 시도 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인 및 지자체 의견 수렴('14.12월~)
-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농업 포럼」에서 세부방안 논의('15.1월~)
- 한-중, 뉴질랜드, 베트남 FTA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동향 점검, 국회보고 등 후속 협정체결 절차에 대응

### □ (대책방향) 피해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 마련

국가명	국내대책 방향(안)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산지 중심으로 발농업 경쟁력 제고</li> <li>▶GAP 등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시장 개척</li> <li>▶식품산업 연계한 소비확대 등 국내 농산물 수요 창출</li> <li>▶발직불제 확대, 수입(收入)보장보험 도입 등 농가 안정</li> <li>▶인재육성, 정책자금 금리개선 검토, 무역이득공유 대안 마련</li> </u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원확대(6차 산업화) 및 우량 꿀벌종자 개량보급</li> <li>▶마늘·생강 등 발작물은 한중 FTA 대책에 포함</li> <li>▶동남아 수출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지원</li> <li>▶국산우유 소비기반 확대 및 신시장 개척 지원</li> <li>▶낙농분야 6차 산업화 지원 등 농가소득 향상</li> </ul>

□ (추진방식)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지역맞춤형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15년 시범사업)

\* '15년에 과수 및 채소분야, 식량분야, 축산 분야 등 12개 사업 시범 적용

○ 현행 개별사업지침 중심에서 분야별 지침 방식으로 통합(6월)

- 개별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공통사업지침 개발 및 유사사업 통·폐합

### FTA에 따른 피해보전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피해보전 내실화를 위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점검 및 제도개선

○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등 지원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시행기한은 각 FTA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 추진

○ '무역이득공유제도' 취지에 맞는 대안 마련(연구용역: '14.12~'15.3)

\* 수혜기업에 세금부과 방식,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자원 마련 방식 등 대안 검토

### FTA를 활용하여 공세적 수출전략을 전개하겠습니다.

□ 한중 FTA를 중심으로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대책 수립, 추진



## 2. 쌀 관세화 대응 철저

### 1 추진배경

- 지난 20년간('95~'14)의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고, '1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쌀 수입 가능
  - 쌀 관세율 513% 등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9월)하였고, WTO 회원국(이해관계국) 검증 대응 필요
- 관세화 이후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수입쌀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소득 안정,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농업계와의 소통과 설득을 통해 쌀 관세화 결정·발표('14.7.18)
  - 과거 조기 관세화 논의('04년, '09년)가 있었으나, '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여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쌀 산업 부담 가중
    - \* 쌀 의무수입물량(MMA) : ('95) 5.1만톤 → ('04) 20.5 → ('14) 40.9
  - '13년부터 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 농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20년간 지속된 농업계 현안을 마무리
- 관세율 513% 등 양허표 수정안 WTO 통보('14.9)
  - WTO 농업협정에 부합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 산정
  -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비하여 특별긴급관세(SSG) 적용
- 지속적인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14.9)
  - 농업인,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8~12월)하여 쌀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

## 나 미흡한 점

### □ 관세화 이후, 수입쌀 부정유통 증가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 가격의 60%인 반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가능성 상존

\* 부정유통 단속실적 : ('09) 36건 → ('11) 145건 → ('13) 317건 → ('14.11월) 286건

### □ 쌀 소비 지속 감소로 국내 쌀 산업 위축 및 수급불균형 심화

- 쌀 소비 홍보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하락 지속

\* 1인당 쌀 소비량 : ('11) 71.2kg(전년대비 △1.6) → ('12) 69.8(△1.4) → ('13) 67.2(△2.6)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국산 쌀 수요창출을 통한 쌀 산업 기반 확보

- 1인당 쌀 소비량(감소추세 완화) : ('13) 67.2kg → ('15) 65.3(추세 64.3) → ('17) 63.5(추세 61.3)
- 쌀 수급안정 및 곡물자급률 제고 : ('13p) 23.1% → ('17) 30%

### ◆ 쌀 관세화 시행, 쌀 TRQ 수입 제도 정비 및 수입쌀 관리 강화

- 사전세역심사제, 특별긴급관세,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금지
- 「쌀산업 발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WTO 검증에 적극 대응

## 가 정책 추진여건

### □ 관세율 513%, 쌀 산업 발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감소와 쌀 산업 지속가능성,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 소득안정, 생산기반 유지 등 쌀 산업 발전대책의 충실한 이행 필요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쌀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 □ WTO 검증절차에 따라 5개국이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 제기

- 기존 국별쿼터(CSQ) 보유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과 주요 쌀 수출국인 베트남 등 총 5개국이 WTO사무국에 이의를 제기

\* 관세율 산정방식 등을 중심으로 이의제기

## 나 쌀 관세화 시행에 대응한 국내 쌀 산업발전 도모

### 쌀 관세화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개정('14)에 따라 '15.1.1부터 관세율 513% 적용
-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특별긴급관세 신설**(기재부 협조)
  - 당해연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하거나, 당년도 수입량 누계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할 때 자동 발동
    - \* (가격 기준) '15년 쌀 수입가격이 145원/kg이하로 하락시 추가 관세부과
    - (물량 기준) '15년 수입량이 471,986톤 초과시 관세 684% 부과

### 수입쌀 부정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쌀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15.1.1일 시행, 관세청 협조)
  - \* 사전세액심사 : 농수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크거나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
  - \*\* 지정현황(35개) : 쌀, 양파, 당근 등 농수산물 26, 다이아몬드 등 개별소비품목 9
- 수입쌀의 적정 담보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매월 수입가격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15.1~, aT)
  - 쌀 전담 해외모니터(aT, 7개국 8명) 활용, 현지 가격정보 등 수집
  - \* 쌀이 담보기준가격 이하로 수입 신고될 시 사전세액 대상으로 선별
-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15. 하반기)
    -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

- 단속기관간 부정유통 **단속정보 공유, 합동단속 실시**(연 2회 이상)
  - 농관원-경찰청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위반사범 적발에 신속 대처하고, 수입쌀 취급 도소매업체(재포장 시설 보유 등) 현황DB 마련
- 쌀 유전자(DNA) 분석 가능 품종 확대('14 : 520\* → '15 : 535) 및 간이 진단키트 개발 등 부정유통 단속 효율성 제고
  - \* 분석 가능 품종(520개) : 국산 191, 중국산 297, 미국 12, 일본 10, 호주 8, 태국 2

**WTO 검증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 (검증대응) WTO에 통보한 관세율(513%)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
  -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산출된 점 등 WTO 원칙에 입각한 관세화 조치임을 강조
    - \* 정부합동대응단(농식품부, 산업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상대국 입장 분석 등 체계적 대응
  - 이의제기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관세율 산정방식의 타당성 등 적극 설명
    - \* 절차 : 이의제기국가와 검증시작 → 모든 이의제기 의사 철회 → WTO 사무총장 인증서 발급 → 우리나라 국내절차 완료 확인 공문 WTO 발송 → 양허표 효력 발생
- (DDA협상) 2013년 발리패키지 타결 이후 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수입국·개도국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수입국 그룹(G10) 및 개도국 그룹(G33)과의 공조를 통해 수출제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개도국 특별품목(SP) 등이 반영되도록 대응

**쌀 산업 발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농가소득)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90만원/ha → 100), **이모작 활성화** 및 영세·고령농 복지 등 **쌀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소득금액 인상('14 : 85만원 → '15 : 91) 및 경영이양직불금 신청 대상연령 확대(65~70세 → 65~74세)

□ **(경쟁력) 규모화·조직화, 비용 절감,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들녘경영체(평균 200ha)·전업농(6ha 이상) 육성으로 규모화·조직화
  -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용절감 기술 현장 실증·확산
    - \* 「식량작물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업단에서 전국 25개 지역 실증 과제 추진('14~'17)
    - \*\* 들녘경영체 육성계획 : ('14) 158개소, 32천ha → ('15) 200, 40
  -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 인상(3만원/3.3㎡ → 3.5)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3% → 1~2) 등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 \*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사업 : 3% → 2, 경영회생자금 3% → 1
- 국산 쌀 품질제고 및 차별화를 위해 유기지속직불금\* 도입('15.1월)
  - \* 친환경직불금 종료 후 유기농업 지속시 3년간 직불금 추가 지급(논 30만원/ha, 밭 60)
- 쌀 선도 경영체 교육·훈련 과정 신설('15년 11억원, 5천호)
- 생산자 주도의 산업 발전을 위한 쌀 자조금 도입방안 마련(6월)
  - 소비촉진 홍보, 수급조절, 생산·유통 개선, 교육·훈련(신기술 현장적용) 등을 통해 쌀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곡물자금률도 제고하겠습니다.**

□ **(쌀 소비·수출) 쌀 소비감소에 대응하여 소비자·현장 중심 홍보 강화, 신규 가공식품 개발, 수출 지원 확대 등 쌀 수요기반 확충**

- 학교급식과 연계한 미래세대 **식생활 교육 강화**<sup>\*</sup>(2월~) 및 소비 패턴에 맞춘 새로운 쌀 요리법 개발(디저트 등)을 위해 **'미리클 프로젝트'** 추진(5월)
  - \* 유치원, 초등학교가공식품 급식 지원 및 식생활 교육 : ('14) 30개교 → ('15) 60
  - \*\* 식생활 교육/ 쌀요리 교실 지원 : ('14) 30개교/ 48개교 → ('15) 60/ 100
- **쌀 및 가공제품 수출 지원**을 강화('15년 53억원, 신규)하고,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강화**('14 : 100억원 → '15 : 150)
  - \* 가공용 쌀(36천원/20kg) → 떡국떡(93) → 막걸리(140) → 전통떡(161) → 무균밥(283)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쌀 수출 전문경영체 5개소 300ha 육성**('15)
  - \* 전북(군산), 충남(보령, 당진), 경남(하동), 경북(안동) 등

#### □ (쌀 이외 식량작물) 국산 식량작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

- **밭 식량작물 계열화경영체**(~'14 : 49개소 → '15 : 56) **육성 등 조직화** 및 **유통시설 확충**<sup>\*</sup>으로 수확 후 품질관리체계 구축
  - \* 맥류건조·저장시설 : ('14) 21개소 → ('15) 26 / 콩 SPC : ('14) 2개소 → ('15) 3
-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일관기계화 생산집적화단지** 조성('15 : 4개소) 및 지자체-농협간 농기계 보유·임대 등을 공유, **생산 효율화** 도모
-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이모작직불금 인상**('14: 40만원/ha → '15: 50) 및 이모작 목적의 **단기 농지 임대차 허용**(3월)
- 밭 식량작물 TRQ 증량을 최소화하여 **국산 생산·수요확대 유도**
  - \* TRQ 운용 이익금을 활용한 국산콩 사용 확대 지원방안 검토

#### □ (조사료) 조사료 생산확대 및 농식품 부산물 활용 사료공급 촉진,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를 통해 사료곡물 대체

-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18천ha → 23) 및 **유통센터 설치 확대**(17개소 → 22)
- **산지축산 시범농장 20개소 추가 선정**('14년 9개소) 및 **규제 완화**<sup>\*</sup>
  - \* 요존 국유림 내 가축방목 허용, 임야에서의 목초 종자 파종행위 절차 간소화 등

### 3. 가축질병 대응 강화

#### 1 추진배경

- 질병에 취약한 가축사육환경, 방역의식 해이 및 방역 미흡 등으로 가축질병이 지속 발생, 농가 경영 및 축산물 공급기반 악화
  - (구제역) '14.7.24일부터 '15.1.8일까지 25건 발생, 약 50억원 재정소요 예상
    - \* 과거 발생사례 : ('00) 15건/2,725억원, ('02) 16/1,058, ('10/'11) 170/28,695
  - (AI) '14.1.16일부터 '15.1.8일까지 251건 발생, 약 1,414억원 재정소요 예상
    - \* 과거 발생사례 : ('03/'04)19건/874억원, ('06/'07)7/339, ('08)33/1,817, ('10/'11)53/807
-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 및 신속한 방역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 증가
  - 인수공통전염병(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및 신종 질병(에볼라, 웨스트나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우려 해소
  -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 발생시 조기근절 및 주요 질병 청정화를 통한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 확대

#### 2 지난해 농정 성과 및 미흡한 점

##### 가 성과

- ICT 기반 방역시스템(KAHIS) 및 방역체계 개선으로 가축질병 효율적 대응
  - ICT를 활용(KAHIS 및 GPS 차량관리)하여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대 설정 및 역회농장을 파악(2~3일 → 4시간)하고,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해당농가 소독, 이동제한 등 효율적 방역 실시

**<'14년 구제역·AI 방역 KAHIS 활용>**

- (사례1) '14.1월 AI 발생 시 주변 500미터 이내 살처분 대상농가 및 반경 3km 이내 방역조치 대상 농가를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한 방역조치 실시
- (사례2) '14.3.6 경기 안성 산란계농장 AI 발생 시, 차량GPS를 활용, 평택으로의 분양사실 미신고 발견으로 질병확산 방지 등 차단방역에 기여
- (사례3) '14.8.6 경남 합천 구제역 발생지역 거점소독장소의 GPS전광판 운영결과 설치 이후 차량소독건수가 증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남

**○ 구제역('11.4월)·AI('14.8월) 방역체계 개선에 따른 백신접종(구제역) 및 선별적 살처분으로 살처분 두수 감소, 재정소요 감소 등 효과**

**<'10.4월 및 '14.7월 구제역 발생상황 및 재정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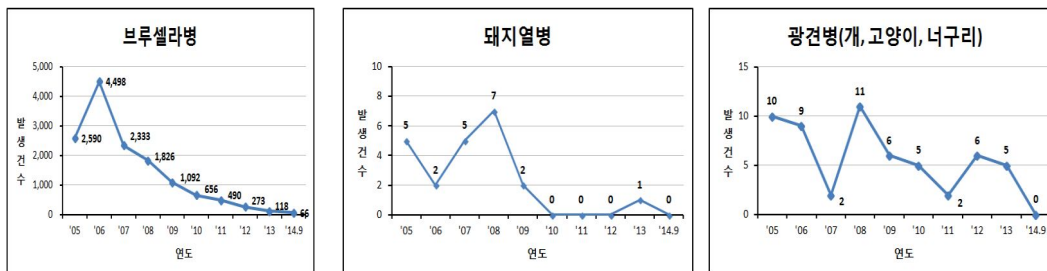
	지역	발생기간	건수	살처분	보상금
'10.4(A)	강화	29일간	11(소7, 돼지 4)	49,874두	637억원
'14.7(B)	의성	15일간	3(돼지)	2,009두	4억원
B/A				<b>4.0%</b>	<b>0.6%</b>

**□ 소해면상뇌증(BSE) 등 4개 주요 가축질병\*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 획득('14.5)**

\* BSE(위험무사국),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14.7.23일 상실), 기성우역 및 아프리카미역(청정국)

- 우리나라가 구제역, BSE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청정국이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역시스템으로 공인

**□ 국내 토착질병인 돼지열병, 브루셀라, 광견병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전체 질병의 발생율은 감소 추세**





## 나 미흡한 점

- AI는 예찰·소독 등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책임방역, 철새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등으로 추가발생 방지에 한계
  - \* '14.1.16일 전북 고창 발생(총 212농장), 9.29일 전남 영암 발생(41농장, 진행중)
- 구제역은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후 2개월만에 발생, 청정국 지위 상실
  - 발생농장 분석결과, 일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
    - 백신 접종요령에 따라 제대로 접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일부농가는 이상육 발생과 모돈의 유·사산을 우려하여 접종 기피
  - 지자체의 방역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실태 확인·점검 애로

## 3 '15년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 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질병발생 최소화
  - 철새 및 분변검사 : ('13) 4천수/3만점 → ('15) 5천수/5만점 → ('17) 6천수/6만점
  - 구제역 항체 형성률 : ('13) 소 97%/돼지 60% → ('15) 90/70 → ('17) 90/70
    - \*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항체형성을 최소기준(OIE) : 소 80% 이상
- ◆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등 현장방역 주체의 책임의식 제고

## 가 정책 추진여건

-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및 산지생태축산 등 사육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시설 등은 여전히 취약
  - \* 하우스형 축사비율 : 육용오리 68%, 종오리 33, 산란계 8, 종계 8 등
- 지난 구제역 발생('10/'11) 이후 상당기간 미발생, 농가 방역의식 약화
  - 일부 농가는 백신의 부작용 및 접종 어려움 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취약농가에 대한 백신 및 시술비 지원, 백신접종 관리강화 필요

□ 최근 겨울철새의 우리나라 유입이 증가(11월 중순부터 유입)되고, 전세계적으로 AI가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 가능성 상존

\* 미국(12.19, H5N8), 일본(4.16, 12.16 H5N8형), 독일(12.16 H5N8), 캐나다(12.10, H5N2), 네덜란드(11.29 H5N8), 인도(11.28, H5N1), 영국(11.14, H5N8), 러시아(9.30 H5N1)

**나 가축질병 방역 체계 개선**

**지역단위의 자율적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시·도 중심하에 시·군, 시·읍·면, 방역본부 및 공수의 등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역단위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추진

【 중앙과 지방의 방역 기능 역할분담(안) 】

구분	주요역할
농식품부	▶ 국가 방역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협조 및 지자체 지원·감독
검역본부	▶ 진단 및 역학분석 교육, 종합통제시스템(KAHIS) 구축 ▶ 지역별 지도·점검 등 지자체 방역 기술지원 총괄
지자체	▶ (시·도)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구축 및 책임방역 총괄 ▶ (시·군) 질병발생 사전예방, 초동대응 및 사후관리 등 현장 방역 ▶ (시·읍·면) 진단 및 역학조사 등 초동대응
방역본부	▶ 시료채취, 초동대응 및 DB 현행화 등 방역 지원업무

□ 방역조치에 따른 책임관리제도 도입 및 보상체계 개선

○ 전국의 계열업체(총 72개)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 마련, 책임방역을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2월)

\* 책임관리제도 미실시 계열화사업자는 가축계열화사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

○ 방역조치로 인한 보상은 현실화\*하고, 책임성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강화되도록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8월)

\* 친환경 축산 농가 등에 대해 실제가격 지원, AI 양성 농가 폐기사료 보상강화(40%→80)

\*\* 연속발생, 축산업 미허가, 차단방역기준 미준수 등 사항에 대한 감액기준 마련

□ 축산업 허가·등록제 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방역·소독시설 기준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축산법 시행령 개정, 4월)

\* 차단시설기준 신설, 울타리(담장) 및 차량·방문자 소독시설 기준 개선, 가금류 등록 사육시설규모 확대(15㎡ → 10) 등

- 허가·등록제 정기점검 강화(2년 1회 → 년 2회), 축종별 집중점검을 통해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강화
- 방역 취약농가 축사시설현대화(울타리, 소독시설, 전실, 새 그물망 등) 지원(농가당 최대 1~3억원)
  - 효과적인 질병 방지를 위하여 축종별(육계, 오리 등) 차별화된 방역 시설 기준('14.10)에 따라 시설개선 추진

**ICT를 활용한 첨단방역으로 방역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소규모 농가 등 전체농가 DB화 및 상시 현행화
  - KAHIS 등록정보 확대\*, 가금 생산·유통 이력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 정비 및 방역본부 등을 통해 최소 반기별 정보 현행화\*\*
    - \* (현행) 축종·사육 규모·소재지 등 등록 → (개선) 계열화·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가축거래기록, 방역정보(질병발생, 백신접종 등) 등 추가
    - \*\* 농업경영체 등록DB와 KAHIS를 연동시켜 누락되는 농가 없도록 상시 확인 병행
  - GPS 차량등록 대상을 확대(알차량 등 추가)하고, 차량 외부 표시 및 미등록·미장착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제한 등 GPS 장착확인 강화
  - 소 이력제에 이어 돼지 이력제 의무 시행('14년 12월, 7천농장, 10백만두)
    - \* 가축질병의 역학조사, 거래내역 등의 신속한 확인 및 이력추적에 활용
- 전체 방역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축질병 확산 경로에 대한 사전예측 모델 개발(10월, 검역본부-KT 공동)

**다 철저한 AI 방역대책 추진**

- ◆ (발생현황) '14.1.16일 최초 발생(고창) 이후 7.25일까지 총 212건(191일간) 발생, 9.4일 이동제한 해제 후, 9.24일 재발생(영암·나주·무안 등 총 41건)
  - \* 일부 농장 등에 잔존하던 AI 바이러스가 축산차량, 사람 등을 통해 전파 추정
- 최근에는 방역 취약농가 등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 ('14.12.13 나주 오리농장 → '14.12.22 모란시장 → '15.1.6 무안 오리농장)

- 겨울철새의 우리나라 유입이 증가되고(11월 중순부터 유입), 전 세계적인 AI 발생\* 등 고려시 추가 발생 가능성 상존

\* 일본(12.29 H5N8), 독일(12.20 H5N8), 미국(12.16, H5N8), 캐나다(12.16, H5N2) 등

- ◆ (방역실적) AI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및 관련 기관별 AI 상황실(309개)을 운영하여 방역대책 수립 및 매일 상황을 점검 중

- 발생지역에 기동방역팀 파견(농식품부·검역본부 4명) 및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초소(96개소, 589명/일) 설치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내 가금을 모두 비운(All-Out) 후 일제소독(매주 수요일)하고, 소규모 농가(가든형 판매시설 포함) 방역점검 실시
- 철새도래지 예찰 확대(월 4회~8) 및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운영(10월~)
- 살처분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3km 방역대 내 농장은 위험도를 평가하여 실시('15.1.8일 기준, 42농가 532천수 살처분)

## 효과적인 AI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14.8)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 추진

- 야생동물 AI 검사 전문기관 설립(환경부, '17.8월 예정), 철새 예찰강화(GPS 부착·검사 확대) 및 철새 이동 경로상 국가간 공조체계 구축\*

\* 야생조류 AI 공동예찰 등 MOU 체결(환경부 vs 중국 임업국, 검역본부 vs 하얼빈 수의연구소)

- 철새도래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가금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농가 지원 및 특별관리

\* 132개 읍·면·동 1,700농가(전체대비 35%), 약 35백만수(20%) 추정

- 거점소독시설 설치('15년 20개소) 및 가금농가 맞춤형 컨설팅('15년 1천회)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농식품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농진청, 매년 약 35만명) 등을 활용하여 농가교육 강화

- AI 조기 발견 및 신고를 위해 임상교재 제작 및 교육 강화(검역본부)

\* 기축질병 정보 제공(주사기·소독약 사용법 등 포함)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 라 철저한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 ◆ **(발생현황)** 7~8월에 경남·북 양돈농장 3개소(7.23 의성, 7.27 고령, 8.6 합천 발생 후 추가 발생 없었으나 **충북 진천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12.3)**
  - 현재 4개 도 13개 시·군 38개 농장(돼지 37, 소 1)에서 추가 발생
    - \* (충북) 진천 10, 청주 7, 음성 2, 증평 2, 괴산 2, (경기) 용인 2, 이천 1, 안성 1, (충남) 천안 7, 세종 1, (경북) 영천 1, 의성 1, 안동 1
  -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바이러스가 농장내로 유입되어 백신접종이 미흡한 개체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
    -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발생건수는 '10년 동일기간 대비 4% 수준)
- ◆ **(방역현황)** SOP에 따라 추가 백신, 이동제한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기동방역팀 파견(농식품부, 검역본부 4명), 이동통제초소 및 방역대 설치(반경 3km 이내)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의 돼지농장은 시·군 전체 또는 읍·면단위(진천, 증평, 청주 3개읍면, 천안 5개읍면)로 이동제한 조치(12.16일~)
  - 감염되거나 증상이 있는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감염이 광범위한 경우는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 살처분 조치('15.1.8, 28,849마리)
  -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에 대한 긴급 추가 백신
    - 천안·음성·청주로 확산(12.18일) 이후 대상 지역 확대(50개 시·군)
  - 전체 농장 및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기축수송·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후 일제소독 실시(2회, '14.12.31~'15.1.1, '15.1.7)
    - 발생지역에 실시하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 확대 시행(1.7)
  - ⇒ 구제역이 진천 이외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SOP에 의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12.18)
    - \* 농식품부 및 관련 기관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설치·운영 등

## 구제역 백신 접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생활화되도록 기반 확립

#### ○ 농장의 백신 공급 및 접종 확인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

- \* 공급 : (농협·수의사회) 공급실적 통보 → (지자체) 농가 백신구입 독려
- 접종 : (지자체·농협) 백신 접종실적 통보 → (검역본부) 취약농가 선정  
→ (지자체) 취약농가 집중점검

#### ○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상반기)

- 매월 농가별 백신 공급 실적 파악·분석하여 해당 지자체 통보, 백신 구입이 저조한 농가는 혈청검사를 통해 확인·점검

### □ 새로운 백신접종법(피내) 및 백신 국산화 개발 연구 추진(계속)

- \* 수입 백신의 국산 전환을 위한 백신연구소 설립 추진('13~'16, 261억원)

### □ 정확한 백신접종을 위해 농가 교육 및 홍보 강화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농진청) 등을 활용한 백신접종요령 등 교육, 리후렛, 문자발송 등 추진

## 마 기타 가축질병 방역 대책 추진

## 기타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 돼지유행성설사병 및 결핵병, 브루셀라병, 광견병 등 발생 최소화

- 돼지유행성설사병 고역가 백신(3월) 및 신규 개발 백신(15. 상) 공급
- 결핵병 발생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발지역 집중검사·관리
  - \* 발생 : ('10) 223건 → ('11) 257 → ('12) 292 → ('13) 321 → ('14.11월) 400
- 국제기준(OIE)에 부합한 브루셀라병 청정국 달성 추진('17년까지)
  - \* 정기검사, 검사증명서 등 방역정책 지속 및 농장단위 관리정책 도입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관리(미끼예방약, 백신접종 등)
  - \* 발생 : ('10) 5건 → ('11) 2 → ('12) 6 → ('13) 5 → ('14.11) 0

## V. 일하는 방식의 전환

1. 스마트농정
2. 현장농정
3. 협력·상생농정
4. 공감·소통농정
5. 재정조기집행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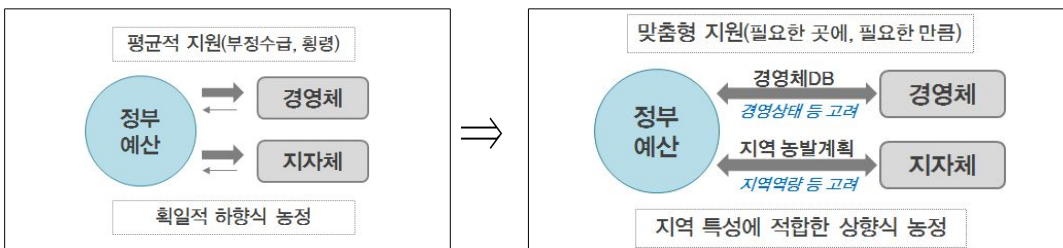
## 객관적·과학적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정

### 1. 추진배경

- 농업농촌 투융자 심사 및 집행과정에서의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사례** 등의 문제가 투융자 효과를 저하
  - 부적격자 보조금 수령·횡령 및 유사중복 지원문제와 보조금 사업이 **부실화**되는 사례 발생
- 지역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농정을 전달**하는 수준
  - 지자체 현실에 맞는 **자율적·차별적 농정 부재**를 초래

### 2. 스마트 농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스마트 농정으로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 **(경영체)** 지난해 **보완된 경영체DB**를 바탕으로 비정상사례 해소를 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스마트한 농정 구현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영체DB의 **보조금 지원이력,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정상 사례 차단
  - 경영체DB의 농지면적, 경영형태, 소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지역농발 계획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도록 유도
  - 지자체 예산사업 평가시 **지역 농발계획 근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가점 부여** 등 우대

## 2

## 현장중심 농정

### 1. 추진배경

- 농업인 등 정책 수혜자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
- 농정 거버넌스는 농업인이나 전문가 등이 소극적으로 농정에 참여하는 단계를 넘어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
  - 농업인 등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나 사업 등을 현장요구에 맞도록 운영함**으로써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및 창의적 활동 촉진

### 2. 스마트농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현장중심 농정으로 농정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규제)** 농업인 등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합리화
  - 자체 규제효과/비용 분석 및 협업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 **(제도)** 각종 제도의 **현장 적합성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주요 제도를 대상으로 수혜 대상자 **이용실적, 만족도,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
- **(사업)** 현장 농업인 등 사업 수혜자 관점에서 사업 운영
  - '15년부터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맞춤형 사업계획에 따라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 도입
    - \* 과수·채소분야, 식량, 축산분야 등 12개 사업 시범적용
  - 개별 사업시행지침을 **분야별 지침**으로 간소화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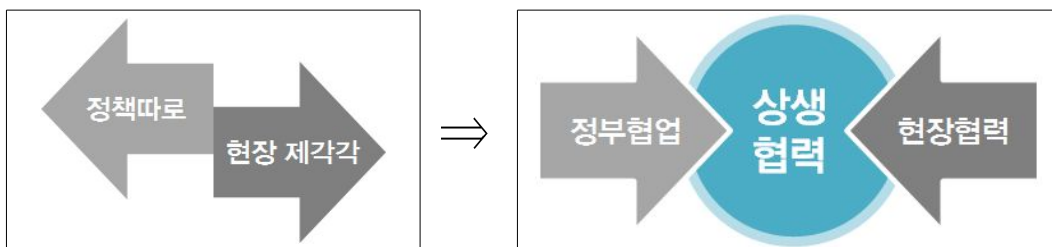
## 협력과 상생의 농정

### 1. 추진배경

-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도농격차 등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농업농촌 분야 예산 등 **인적·물적자원은 충분치 않은 상황**
  - 농촌복지,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는 관련 부처의 협력 필요
- 최근 귀농·귀촌,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 증가
  - 소득, 경쟁력, 복지 등 농업농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 융합 필요**

### 2. 스마트 농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농업계와 비농업계가 상생하는 농정을 펼치겠습니다.**



- **(협력)** 관계부처·양청 협업 및 소속·산하기관 역량 결집
  - 6차산업화(식약처), 농촌복지(복지부), 수출(산자부) 등 협업을 통해 성과가 창출된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 강화**
  - 6차산업화·**농촌관광**(농진청, 산림청), **기술개발**(농진청) 등은 양청과 협업을 통해 성과 제고
  - 산하 공공기관별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핵심과제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역량 결집 추진
- **(상생)** 농업과 외부의 **인적·물적자원의 융합(상생)** 촉진
  - 귀농귀촌, 도농협력, 농업·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4

##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한 소통·홍보 강화

## 1. 추진배경

- 국민들의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저하
  - \* 도시민의 농촌발전 세금 추가 지불의사: ('07) 49.5% → ('14) 32.5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촌 활력 제고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2. 중점 추진과제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를 국민들과 적극 소통·공감하겠습니다.

- 농업인 중심의 행사 분산 개최
- 일반인·농업인 대상의 홍보
- 협력홍보 취약한 기관별 홍보



- 범국민적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연계·통합
- 홍보 타겟 세분화, 전략적 홍보
- 관계기관 홍보자원 역량 결집

- **(가치홍보)**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명문화하고 사회 각 분야의 실천적 참여를 제시하는 「국민농업헌장」 제정 추진
  - 도시민과 젊은 층이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농업역사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의 인지도가 낮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인터넷 영화제', '스팟 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 **(행사통합)** 농업인 중심으로 개별, 분산 개최되고 있는 농업관련 행사가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기적 연계·통합
  - 농업인의 날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사직대제 등)를 조율하고, 농업관련 행사를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 및 공통 메시지 개발 사용
- **(홍보역량)** 민간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농정 담당자의 홍보역량 강화
  - 주요 농업 어젠다에 대해 유관기관·소속기관 협력 홍보 강화

## 1. 추진배경

- 재정투입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15년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농식품분야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
- '15년 재정집행 대상사업 예산 총12조 761억원중 **상반기 54.0%** (6조 5,256억원) **조기집행** 추진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하여 상반기 60% 집행**

## 2.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 **(사전준비)** 지자체 예산편성 등 보조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보조사업예산 통지('14.12)
  - 생산기반정비 등 SOC 계속사업은 1월까지 발주·계약을 완료하고, 공모사업도 2월까지 대상자 선발 완료
- **(통폐합)** 유사사업 통폐합 등 사업 단순화를 통해 재정투자의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 통폐합 실적 : ('14) 65개 사업 → ('15) 30(△35)
- **(제도개선)** 농림사업시행시침 간소화 등 조기집행 저해 요인 해소
  -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사업절차 및 보고 등은 과감하게 개선
  - 일선에서 반복되는 문제 등은 업무매뉴얼(사례집) 제작·배포
- **(성과제고)** 반복적 집행부진, 부정수급 등 문제사업은 외부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평가 실시
  -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자체가 부진한 사업은 단계적 축소, 폐지 등 구조조정
  - \* 농업보조금 성과평가·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15.하)



[별첨 1]



---

경쟁력 · 성장동력 · 활력화

# 기술이 답입니다

= 2015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

2015. 1







# 목 차

I. 2014년 평가 .....	223
II. 2015년 여건전망 및 업무추진체계 .....	231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	235
<미래성장>	
1.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	239
2.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지원 .....	241
3.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242
<현안대응>	
4. 개방 대응 품목별 기술 경쟁력 향상 .....	247
5. 농촌현장 고질적 애로기술 해결 .....	251
6. 기후변화·식품안전 및 위기대응 강화 .....	254
<상생협력>	
7. 경영체 역량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	261
8. 세계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	262
<국민행복>	
9.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265
10. 국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 강화 .....	266
IV. 분기별 추진일정 .....	267
<참고> ①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② 2015년 주요정책·행사 캘린더 .....	276
③ 2014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	277



## I . 2014년 평가

1. 주요성과

2. 평가 및 반성



# 1. 주요성과

◇ 박근혜 정부 5년간의 농촌진흥사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객·현장·정책중심으로 첨단농업과 개방대응 기술개발 보급에 매진

□ (사업방향 정립) 여건변화, 시대트렌드를 반영하여 청 사업기반인 「제1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13~'17)」 수립('14.5월)

○ 4개 분야(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국제협력)를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첨단기술 융복합) ICT·BT 활용, 생산성 향상 및 성장동력 창출

○ ICT 기반의 시설원예작물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관리 등 스마트온실 구현모델 설계(4작물 :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국화)

\* ICT 적용과 생육단계별 컨설팅(화순 한울농장) : 수량성 40%↑, 에너지 35%↓

○ GPS, 관성센서 활용 자율주행 비 제초로봇 개발(인력대비 16배)

○ 장기이식 과정의 거부반응(4단계) 중 2개(초급성·급성 거부단계)를 제어할 수 있는 형질전환돼지 생산(원숭이 대상 장기 이식:38일 생존)

□ (현안대응) 개방 대응 기술적 대책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 지원

○ 유전체 정보를 이용, 품종을 판별하는 '품종인식 바코드시스템' 개발(99% 유사품종 구별)로 수입쌀 혼합·부정유통 방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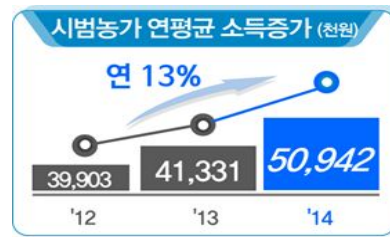
\* 쌀 관세화 대응 홍보 : 교육(농업인 76천명, 공무원 9천명), 전시(7회), 리플릿(2종, 20만부)

○ 수입대체 벼싯 신품종 개발(양송이 '호감' 등 4종, 품종출원 7종)과 종균 보급으로 벼싯국산품종 점유율 확대('12: 44.6% → '14: 48)

○ 전남 해남지역 풀무치 대량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농식품부·전남·농협 등, 60ha)을 통해 발생 5일 만에 방제 완료

□ **(6차산업화 지원)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멘투멘 컨설팅 확대**

- (소득) 6차산업화모델 시범 경영체 (209개소, 3,865농가)의 연평균('12~'14) 소득증가율은 13%로 일반농가(7% : '11~'13) 대비 1.9배 수준



- (일자리) 지원 대상 경영체(346개)를 통해 2년간('13~'14) 총 3,122개(상시 943, 비상시 2,179)의 일 자리를 창출



□ **(부가가치 향상) 곤충, 농축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우리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 누에고치 이용 세계최초 '치과용 실크 차폐막' 개발('14.12월)
  - \* 기존소재(고어텍스 등) 대비 : 신생 뼈 형성률 5.3배 ↑, 골밀도 2.7배 ↑
-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14.7.9월, 식약처)으로 곤충을 우리 식탁의 공식 먹을거리로 제도화
- 마늘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효과를 구명,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15.1, 식약처)
  - \* 국내산 농산물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 10년간('15~'24) 49만여톤(1조 6,540억원)의 마늘 추가소비 기대(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협업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업무추진의 시너지 확대**

-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방안 연구(↔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 맞춤형 치유농업프로그램 확산(↔ 환경부, 법무부, 교육부, 복지부)

- ◇ 「201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농진청 R&D 6건(총90건 중) 선정('14)
  - \* 국가 R&D 예산(17조)의 3.3%(5,600억원)로 우수성과의 7% 달성
-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부문 6년('09~'14)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국조실)

## 2014년 농식품 기술 개발 보급 성과

###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 **밭작물 일관 기계화 기종 개발로 노동력 절감**

○ 고구마 정식기, 조·수수 파종기 및 수확기 개발

\* 향후개발 : ('14~'15) 잡곡 → ('16~'17) 감자·배추·무



<조·수수 수확기>

□ **태양 잉여열 축열식 히트펌프 온실난방시스템 개발**

○ 경유대비 온실난방비 80%↓, CO<sub>2</sub> 배출량 42%↓

\* 공기열 히트펌프 대비 32% 성능 향상



<히트펌프 및 축열조>

□ **식량작물 품종 및 핵가족·수출용 中小果 육성**

○ 식량작물 품종 육성 : 61종(벼18, 맥류12, 밭작물31)

○ 탁구공 크기 사과(루비에스), 껍질째 먹는 배(조이스킨)



<사과 중소과 루비에스>

###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산업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에 따른 가공기술 개발**

○ 전통양념 첨가 발효소시지 단기(1~5개월) 제조법 확립

\* 가열·비가열 육제품 제조매뉴얼 제작 보급(110종)



<발효 소시지>

□ **인삼 앞에서 미백성분(진세노사이드 3종) 분리 성공**

○ 버리는 인삼 잎을 화장품 원료로 활용, 신 소득원 창출

\* 부가가치액 : 2천원/kg ('15년 산업체 예상 매출액 10억원)



<인삼 잎 활용 미백화장품>

□ **국내 최초 꿀벌 신품종 '장원벌' 육성**

○ 일반농가 꿀벌 대비 꿀 수집능력 31%↑

\* 일벌 개체 당 수집 꿀 양 19%↑, 벌통 당 일벌의 수 45%↑



<장원벌>

##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 □ 농가유형·기술수준별 맞춤형 신기술 보급

- 현장수요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122종, 728개소)
  - \* 일반농가 대비 시범농가 : 생산성 21.3%↑, 소득 29.5%↑
  - \* 보급 만족도: ('13) 84.8점 → ('14) 86.6, 사업 개선율: 80% → 87.5



<농업기술 길잡이>

### □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및 지도역량 향상

- 중소규모 가족농 대상 경영진단·컨설팅(3,529회)
  - \* 소득변화 5.4%↑, 역량변화 7.9%↑, 컨설팅 만족도 4.5점/5



<경영개선 실천교육>

### □ 농작업 안전관리, 고령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지원

- 농작업 안전마을 확대('13: 173개소 → '14: 227)
  - \* 농기계안전사용 등 농작업안전보건 실천율 증가 : 39.6%↑
- 고령자 대상 건강장수마을 조성(155개소)



<농작업환경개선교육>

##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ODA 모범모델로 육성(20국)

- 개도국 현지농가 참여형 시범단지 운영(10개 사업)
  - \* (필리핀) 우리 벼 재배기술 지원 : 생산성(3.8톤/ha → 4.5)
  - \* (캄보디아) 병아리 도태율 감소 : 기존대비 23.1%↓



<필리핀 벼 재배단지>

### □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KoLFACI) 출범(13국)

- 아시아(AFACI, 12국), 아프리카(KAFACI, 18국)와 함께 3대륙 협의체 구축을 완료



<KoLFACI 출범, 9월>

### □ 2014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만(단장: 농진청장) 추진

- (기간) 11.12~23 / (대상국)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 (대표단) 농산업체 등 24명(포럼, 비즈니스 미팅 실시)
  - \* 국제기관 협력 MOU(2건), 248만불 상당 수출계약



<1:1 비즈니스 미팅 페루>



## 2. 평가 및 반성

◇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집중 노력

□ **(ICT 기반 확대)** 시설원예·축산 등 ICT 융복합 기술 적용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산업화 핵심기술이 부족

- 단편적 기술개발에 그치고, 국산제품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한계
-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한 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필요

□ **(현장수요 대응)** 영농·산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수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농업인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 ('12) 71.7% → ('13) 72.8 → ('14) 73.4

- 발작물에 있어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일관기계화가 부족하고 노동력 절감효과가 큰 파종·이식·수확기 우선 개발이 필요
- 가축분뇨 악취로 관련규제 강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위협, 악취저감 및 분뇨의 자원화 촉진기술이 시급

\* 가축분뇨 발생 : ('12) 4,649만톤 → ('13) 4,724 / 악취 민원 : ('05) 4,302건 → ('13) 9,914

□ **(전문인력 양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 습득을 위한 체계적 교육 확대 필요

- 경영수준·연령(고령농)·대상자(농업인, 귀농인)별 전문프로그램 강화  
\* 취농·창업프로그램, 첨단화된 농업시설 운영능력 배양 등

□ **(개도국 기술협력)** 협력사업 확대에 비례하여 효과적인 사업 관리체계 구축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 등 내실화가 요구

- 현지 농가 참여형 시범사업 확대 등 지원 기술의 현장 조기 보급 및 수원국의 기술보급역량 강화 필요



## **Ⅱ. 2015년 여건전망 및 업무추진체계**

- 1. 2015년 여건전망**
- 2. 업무추진체계**



# 1. 2015년 여건전망

◇ FTA와 함께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 확대

□ 농업과 ICT·B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산업 및 고부가가치 新시장을 창출하는 여건이 성숙

○ 공장형 시설원예(화란), GPS 활용 정밀농업(미국) 등 농업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증가

○ 선진국은 종자·신소재 개발 등 농업의 신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

\* 세계 BT 시장 규모 : ('12) 144억\$ → ('17) 248(11% 성장 전망)

□ 쌀 관세화·FTA 체결(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개방 확대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로 농업의 체질개선과 기반유지 대책이 핵심 이슈화

○ 생산비 절감·품질향상 등 자생력 향상 기술수요는 물론 농민 체감도가 높은 신선농산물 수출 등 시장 개척형 기술 개발 필요

\* 신선농산물 수출액 : ('08) 6.8억\$ → ('13) 11.8(약 1.7배 증가, 전체 수출액의 20% 수준)

□ 농업생산과 2·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 활동분야가 다각화 되고 농외소득이 증가 추세

○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농가소득 증대와 연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착이 핵심

\* 농외소득 : ('10) 12,946천원 → ('13) 15,705(21.3% 증가)

□ 이상기상·가축질병 등 생산변동요인 증가로 농산물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고령농·농촌여성 대응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

○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개선, 기상이변 대응 및 농작업 편이장비 확대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2. 업무추진체계

### 비전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행복시대 선도**

### '15 목표

- FTA 시대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성장동력」 창출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 활력」 극대화

#### 미래성장

- ◇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 ◇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 ◇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종자 · 생명공학 · 신소재 · 식품자원

#### 현안대응

- ◇ 개방대응 기술 경쟁력 향상
- ◇ 농촌현장 고질적 애로기술 해결
  - 발작물생산성 · 가축분뇨처리
  - 기간채소수급
- ◇ 기후변화식품안전 및 위기대응

#### 상생협력

- ◇ 기술농업 현장 확산
  - 가족농 · 경영 · 신기술보급 · 인력양성
- ◇ 세계 공헌 글로벌 기술협력
  - 양자협력 · 다자협력 · 국가기관간협력

#### 국민행복

-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농업인복지(고령농 등) · 농작업 안전
- ◇ 국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 강화
  - 현장기술지원 · 공유 · 정부3.0

**| 고객 · 현장 · 정책 중심의 기관 운영으로 국민신뢰 제고 |**

###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미래성장

◇ 현안대응

◇ 상생협력

◇ 국민행복





## 미 래 성 장

1.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2.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지원
3.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1.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 ◇ 스마트팜 적용모형 표준화,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 ICT 융복합 스마트팜 농장 등 시범사업 추진 : ('15) 13개소

### □ (스마트팜 표준화) 현장의 온실유형에 적합한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유형 및 표준화 방안」 설정

○ 유형별 온실 분류기준 설정(2월) 및 스마트팜 적용모델 분류(5월)

○ 「ICT+내재해+에너지절감」 스마트온실 구조설계 및 표준화

\* ('14) 단동비닐하우스 → ('15) 연동비닐하우스 → ('16) 유리온실

### □ (기반기술 개발) 스마트팜 지원 ICT 융복합기술 개발·현장 확산

○ (로봇 상용화) 방사청과 협업, 벼 제초로봇 성능 고도화와 제조단가 인하 및 현장 상용화 추진

\* 성능시험(2월), 기술이전(3월), 시험제작기계(5월), 현장실증(8월)

○ (센서 실증) 토양측정센서 현장실증(상주 오이농가) 및 RFID<sup>1)</sup> 이용 돈사출입 자동관리시스템 기술 이전(8월)

\* 토양센서 현장실증 : ('13) 영양분(EC)·수분 → ('15) 산성도(pH)

### □ (컨설팅 기반 구축) 주요 작목의 단계별 생육환경 자동측정·정밀관리모델 개발 및 종합컨설팅 지원

○ (시설원예) 시설작물 최적 생육관리모델 개발(4과제)

\* 개발대상 :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국화 등

\* 주요내용 : 3D 영상 활용 '잎 길이, 잎 온도, 줄기 굵기, 화방 높이' 등 지동측정

1)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극소형 칩에 정보를 담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 (노지과수) 사과 해충 및 생육 정밀관리 기술(1과제)
  - \* 해충 모니터링 정밀도 향상(95% 이상), 사과 과원의 저온피해 경감 및 생육예측 기술 등
- (축산) 가축생체정보기반 동물복지 돈사관리모델 개발(1과제)
  - \* 돼지 행동과 체온 등 생체정보 패턴 분석 등

√ 빅데이터 기반 생육정밀관리 종합컨설팅 실시 : ('14) 2농가 → ('15) 5  
 · 현지 농장의 환경과 생육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영농방안 컨설팅

□ (시범농장) 현장 체감형 「ICT 기반 스마트팜 시범농장」 육성

- 농식품부와 협업, ICT 거점지원센터(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권) 연계 시범농장 육성 : ('15) 4개소 → ('16) 8
  - 투입기술 : 생육자동센싱, 휴대형 토양센싱,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농산물 안전판정기술 등
  - \* 스마트온실 표준화 ↔ 생육 자동측정 ↔ 빅데이터 가공 컨설팅 ↔ 성과분석

□ (현장확산) 효과가 입증된 ICT 융합기술 중심으로 패키지화 하여 영농현장에 시범투입 및 성과 발굴과 교육 체계화

- (시범사업) 온실·축사 원격제어 등 스마트팜 실용기술 시범(9개소)
- (사례발굴) 분야별 ICT 활용 기술보급 우수사례 조사·확산(3월)
  - \* 시범사업 등 기술보급 추진실적 및 성과, 지자체 적용사례 등 발굴
- (현장교육) 농장유형별(고령·복합농, 전업농 등) 원격제어, 생육 환경관리 등 기술 분류 및 현장 활용교육(공무원·농업인 등 14천명)
- 노동력 절감(제조로봇), 자동화(에너지 진단, 원격제어), 친환경(무인 방제) 등 ICT 분야 종합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시범마을 조성 추진
  - \* 소규모 복합영농마을 조사(4~5월) → ICT 기술분석(6월) → 시범적용(10월) → 사업화('16)

## 2. 지역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지원

### ◇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 연평균 농가소득증가율 : ('14) 13.0% → ('15) 13.6 → ('17) 15.0

### □ (기반기술) 지역 자원과 R&D기술 연계 사업화 지원 및 기초통계 생산

- 지역·농가단위 수익모델 구축 및 특화품목 중심 6차 산업 활성화 지원('14: 209개소 → '15: 245)
- 6차산업 업체별 경영실태 조사 및 기초통계 생산(1만경영체)  
\* 6차산업 유형·참여현황, 농가소득, 고용현황, 경영애로사항 등

### □ (인력양성) 6차산업 전문리더 육성 및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시장조사, 전문매장 입점 및 수출 지원 등 사업장별 우수제품 발굴 및 판매촉진 전문리더 육성(384명)  
\* 담당공무원(중앙), 조직화 등 지역단위 리더(도원), 농가단위(시군센터)
- 도 단위 종합마케팅 지원 전문가 협의체 운영(9개소) 및 개별 경영의 취약점 해소를 위한 사업별 네트워킹(조직화) 추진(20개소)  
\* 학계, 업계, 농협, 대형마트 MD, 컨설팅 전문업체 등 전문가 인력풀 구축
- 잡곡 가공원료 대체단지 육성('15: 5개소 → '17: 10) 등 지역특산품 가공원료 국산화 추진 실무단 구성 및 협력 지원

### □ (사업관리) 기존사업 사후관리, 관련정책 연계 등 6차산업 정착 지원

- 시범사업(1~2년) 종료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 등 사후관리(3년) 강화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성과 확산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50개), 강소농(55천 농가)을 6차산업 전초기지로 육성
- 농산물종합가공센터('10~'15: 30개소 → '17: 90)확대, 6차산업화 지원 센터와 창업교육 연계, 지역특화품목 가공 상품화 등 이용 효율화

### 3.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 가 종자산업 육성 지원

- ◇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및 BT 등을 활용, 분야별 우수종자 개발
  - 종자수출 지원 : ('13) 0.4억불 → ('17) 1.2

#### □ (유전자원) 나고야의정서 대응, 다양한 고부가의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 유전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장기보존 기술 및 정보 DB 구축
- 고부가의 국내외 유전자원 확보(1만점) 및 유망자원 평가(15천점)
  - \*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기능성작물 등 신수요 자원과 국외·국제기구 보존 자원

#### □ (로열티) 고품질·기능성·생력화 품종 개발로 종자주권 확보 및 수출품종 육성

- 화훼류(수출용: 장미 등 5작목, 12품종 / 내수용: 거베라 등 7작목, 13품종) 및 기능성 약용작물 품종 육성
- 수출용 종자(벼, 옥수수, 감자)의 해외적응성 검토(30계통, 7개국)

#### □ (조사료) 염에 강하고 봄에 파종해도 생육이 건전한 IRG 등 풀 사료 품종과 논에 적응성이 높은 사료용 옥수수 개발

- 내염성, 춘파적응성 등 강화된 IRG 신품종 육성
- 야생 옥수수를 이용, 습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
  - \* 품종개발, 산지초지 확대 등 자금률 제고 : ('14) 82% → ('15) 85 → ('17) 90

#### □ (가축개량) 한우·젓소 등 주요축종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와 씨가축 개발 및 보급

- 보증씨수소 선발(한우 20두, 젓소 2두), 씨돼지 보급(250두: 축진 씨돼지 150, 난축맛돈 100), 닭·오리 고유품종복원(5품종, 12계통)

## 나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 ◇ 농업과 생명공학 접목으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기술 개발
  - 고유 작물·미생물 유전체 해독·DB화(누적):('14)1종→('15)3→('17)9

### □ (원천기술) 농생물 자원의 신규유전체 해독 등 원천기술 확보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14~'17) 참여와 함께 국내 고유 자원 9종(들깨, 국화, 고구마, 양파 등)에 대한 유전체 해독을 추진
- 재래가축(오골계, 제주馬)의 유전체 지도 작성 및 배추 종자수량 유전자 발굴 등 유전체정보 기반 유용형질 발굴

### □ (실용기술) 기능성 작물 및 바이오장기 생산용 형질전환돼지 연구

- 간척지 재배가능 내염성 작물 개발을 위한 유전자 발굴(3종)
- 거부반응 유전자가 3개 이상 제어된 바이오장기용 다중형질 전환돼지 생산 \* 거부반응 단계(4단계) : 초급성 → 급성 → 혈관성 → 만성
- 형질전환돼지 유즙을 이용한 바이오신약 대량정제·약리평가 연구 \* 분리단백질 유효성평가를 위한 약리효능 활성값 측정 및 전임상 수행(11월)
- 정부운영 특수목적견 복제생산 등 생명공학기술의 공익적 활용 \* 복제견 보급 : ('14) 10두 → ('15) 15(관세청, 검역본부 등)

### □ (GMO 개발·안전) GM 작물 개발 및 안전성 평가

- 소비자 충족을 위한 영양 개선형 2세대 GMO 개발(항산화물질 함유 벼)
- GM작물에 도입된 유전자의 발현산물 분석<sup>2)</sup>을 통한 안전성 평가와 식품 및 환경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6종)
  - \* 벼, 고추, 콩, 배추 안전성평가 지침서 개정(4), 비표적생물체 영향평가 등(2)

2) GM사료를 먹인 동물의 혈액, 소변, 소화기관 등에서 DNA와 단백질 검출

## 다 농축산물 활용 부가가치 창출

### ◇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농식품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확대

○ 곤충자원 : ('14) 실크 차폐막 등 20종 → ('15) 28 → ('17) 40

#### □ (식의약소재) 곤충, 누에, 약용작물 이용 식의약 신소재 개발

- 장수풍뎅이, 귀뚜라미의 식품원료 신규 등록 추진과 갈색 거저리의 제과제빵 및 환자식 메뉴 개발
- 곤충의 생리활성물질 이용 의약용 신소재 개발(3종: 항혈전, 혈행·피부 질환 개선) 및 누에 이용 사료첨가 천연항생제 상용화(육계용 등 2종)

#### □ (기능성소재) 농식품자원의 기능성 식품원료 등록 및 소재 개발

- 기능성 원료 등록(감, 구기자, 복분자) 및 기능성 평가(흑미 등 4종)
- 쌀 저항전분(혈당조절), 눈큰흑찰(비만개선), 새싹보리(숙취해소, 간기능 개선) 이용 건강기능성 산업화 모델 개발
- 감귤 부산물 활용, 신기능성 천연물질 분리 연구(2종)

#### □ (산업소재) 농축산 부산물 활용 산업용 소재 개발

- 감귤 바이오겔 이용 미백활성(10종) 및 가공식품(초콜릿 등 3종) 소재 개발
- 약초자원(쑥부쟁이 등 40종) 활용 화장품용 미백활성 소재 발굴

#### □ (식품가공)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발효기술 실용화

- 농산물 냉해동 특성 및 냉동 가공기술 개발(쑥 등 산채류 3종)
- 막걸리 발효기술 개발(2종: 스파클링, 거품막걸리) 및 증류식 소주 전용 효모를 적용한 쌀 소주 개발(1종)



## 현 안 대 응

4. 개방 대응 품목별 기술 경쟁력 향상
5. 농촌현장 고질적 애로기술 해결
6. 기후변화·식품안전 및 위기대응 강화



## 4. 개방 대응 품목별 기술 경쟁력 향상

### 가 쌀 관세화 대응 및 소비 촉진

- ◇ 직파재배 기술 단점 보완으로 재배면적 10% 조기 달성
- ◇ 가공용 쌀 재배단지 확대 정책목표 지원 : ('13) 2천ha → ('18) 10

#### □ (쌀 이용확대) 농업인과 가공업체 동반성장, 수출 확대

- 건식제분용 초다수 연질미 품종 및 활용기술 개발(산업체 공동)
  - \* 기존 습식제분 대비 제분 비용 50% 절감, 건식제분 적성 품종 : 설갱
- 국내산 원료곡 활용 촉진 사업 추진(한국쌀가공식품협회 공동)
- 대호간척지 수출용 가공 쌀 단지(540ha) 중심 포트육묘 등 실증 시범포 운영(32ha) 및 쌀 수출 전문경영체 육성(5개소)

#### □ (가격 경쟁력) 직파재배로 생산비 절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

- 지역·지대별 무논직파 재배 적응성 평가('15~'18:8개도)
- 벼 무논직파 및 무인 헬기 현장 집목단지 조성(10개소)

#### □ (부정유통 방지) 국내산과 수입쌀 원산지 판별기술

- 수입쌀 판별 및 밥맛평가기술 개발('15~'17)
- 쌀 원산지 비파괴 판별 장치 개발 및 분광 영상 D/B 구축

#### □ (소비 확산) 품질 차별화, 국내육성 품종 인지도 향상 등 소비 확산

- 최고품질 품종 다양화 : 중만생종 중심 → 조·중생종 확대
- 소비자 식미검정단 활용 국내육성 품종 밥맛 우수성 홍보
- 등교시간 조정에 따른 학생 아침식사습관 확산 등 쌀 중심 식생활교육 추진(70과정 21천명)

√ 식량산업정책 조기 확산을 위한 '식량산업기술지원단' 운영

## 나 농식품 수출지원기술 개발 등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 소비자 맞춤형 육성 및 저장·유통·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 수출목표 달성 지원 : ('13) 54억불 → ('15) 77 → ('17) 100

□ (품종육성) 소비자 선호·수출유망 고품질 신품종 육성

- 배 중소과, 극조생 감귤, 조생종 완전단감 등 소비확대품종 개발
- 수출용 딸기(21계통)·버섯(느타리, 큰느타리) 및 장미(3종) 육성

□ (안정생산) 연작장해 방지 등 안정생산기술 개발

○ 분자마커를 이용한 인삼뿌리썩음병 밀도 검정법 확립

\* 인삼뿌리썩음병원균 신속 진단(도입 전 : 7일 → 도입 후 : 2)

○ 단감 해충 예찰용 성페르몬 개발 : ('14) 1종 → ('15) 3

□ (저장) 신선도 유지 등 장기 저장기술 개발로 수출품목 확대

○ 수출딸기(설향, 매향) 선도유지기간 확대(7~9일 → 9~11)

○ 감귤의 저장·유통 중 손실 발생을 축소(손실율 : 37% → 25)

○ 부패억제(멜론·참외), 세척·포장(감귤), 예냉법(버섯) 개선 등

\* 수출품목별 수확 후 관리 매뉴얼 보급 : ('14) 6종 → ('15) 9(포도, 감귤, 버섯 추가)

□ (선별·안전) 수출 과실의 품질균일화를 위한 성숙도 판정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기술 보급

○ 과일 숙성, 향·색변환 반응 센서 제작 및 성능평가

○ 초분광 영상 이용 사과의 내·외부 결함 판정 기술 개발

○ 수출국별·작목별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보급(8국가 28작물) 및 원예작물 바이러스 현장 진단용 키트 전국 분양(11종, 16천점)

√ 농식품·농업기술 수출 지원 전담 「수출농업지원과」 설치(1월) 및 「할랄식품 연구개발 TF」 발족(4월) 등 수출지원조직 운영

## 다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 ◇ 생산성·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과 친환경 축산기반 확대

- 돼지 MSY<sup>3)</sup> 목표 : ('14) 18두 → ('15) 19 → ('17) 22
- 소비 확대용 제품 개발(누계) : ('14) 148종 → ('15) 250 → ('17) 294

### □ (생산성 향상) 돼지 MSY 증진 및 한우 생산성 향상

- 축사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 종합사양기술 보급 등 돼지 MSY 증진  
\* 대외 협력사업 추진(↔ 네덜란드, 미국) 및 사양기술 현장지원(12개소)
- 농산 부산물 활용 거세한우 육량개선 첨가물질 개발

### □ (사료비 절감) 산지축산 활성화 및 부산물 활용 사료비 절감

- 산지·임간초지 조성에 적합한 혼파조합 선발(2종) 및 가축의 성장단계별 산지초지 이용기술 개발
-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영양성분 DB 구축

### □ (동물복지) 국내 사육여건에 적합한 동물복지형 시설현대화

- 열환경(온·습도) 측정 장치 이용 적정 관리방안 마련 및 젓먹이 어미돼지 자동 급이기 농가 보급(10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마련(11월: 오리) 및 축산농장 인증기준 해설서·교육동영상 보급(한·육우, 젓소)

### □ (소비촉진) 축산물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보급

- 식육즉석판매용 육제품 제조기술 보급(100종: 가열육제품 50종, 비가열 육제품 40, 말효육제품 10)
- 국내 자연치즈 유통실태·소비자 선호도 분석(9월) 및 저지방 모짜렐라 치즈 제조기술 확립(10월)

3) 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 모든 1마리 당 1년간 생산된 돼지 중 판매체중까지 생존하여 판매된 수

## 라 농업 에너지비용 절감

### ◇ 산업폐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효율 향상기술 개발

- 시설재배 평균 난방비 비중 : ('14) 35% → ('15) 30 → ('17) 25

#### □ (산업폐열) 미활용 산업폐열의 농업시설 활용 기술 정립

- 농업분야 유용 산업폐열현황 조사(66개소 완료) 및 분포지도 작성
  - \* 접근이 어려운 스티로폼공장 등 민간업체보다 접근 용이한 소각장 중심 추가조사
- 산업폐열 이용시설, 폐열원 종류, 열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 산업폐열 유형별 농업분야 활용 모델 개발(농식품부 협업)
  - \* 국내외 산업폐열의 농업적 활용 우수·실패사례 조사 및 개선책 마련

#### □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 태양열 복합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농업시설 난방 실증연구
  - \* 태양열-지열, 태양열-공기열 등 다중 열원 복합시스템 현장 실증
- 여름철 온수와 겨울철 냉수를 지하에 저장 후 온실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하수층 이용 축열' 방식 연구
  - \* 보온과 단열성이 우수한 지하 충적대수층을 대용량 축열조로 활용

#### □ (이용효율 제고) 시설원에 부분 냉난방 기술 정립

- 딸기, 토마토, 분화류 등의 생장점 등 온도 민감부에 집중 난방
- 저온기에 광투과율을 증진시키는 외피복제 이용기술 개발
  - \* 기능성 피복재(나노코팅 필름 등)를 활용한 광투과율 증진 : 85% → 90

#### □ (현장보급) 작물별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 보급

- 수출용 파프리카, 난 생산을 위한 냉난방패키지 기술 실증
  - \* 다겹보온커튼 + 지중열 냉난방시스템, 온수패드+잠축열재 등
- 지중열 히트펌프 냉·난방 기술 보급(농식품부 협업)

## 5. 농촌현장 고질적 애로기술 해결

### 가 | 발작물 생산성 향상

#### ◇ 발농업 기계화 및 신기술 확산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

- 수량목표 : 콩 (현재) 171kg/10a → ('15) 190 → ('17) 200  
          잡곡 (현재) 135kg/10a → ('15) 160 → ('17) 180

#### □ (기계화) 발농업 일관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 기계 우선 개발
  - 양파수확기·마늘파종기·발작물용 트랙터 등
- 기계의 포장 적응성 향상을 위한 재배 표준화(마늘·양파·고구마·잡곡)
- 기 개발 기계를 활용한 발농업 일관기계화기술 정립·확산

#### □ (생산성) 발작물 농가 수량격차 해소방안 마련

- 농가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매뉴얼 발간 보급(5월)
  - \* 품목별(콩/참깨/팥/조), 주산지별, 재배형태별 감수요인 대응기술(4종 4만부)
- 규모화·단지화 촉진을 위한 작물별 맞춤형 재배매뉴얼 보급(4월)
- 생산성 저하 요인별 대응기술 농가현장 실증(작목별 3개소, 30% 증대)

#### □ (기술 확산) 선도단지 중심의 핵심기술을 일반단지로 확대

- 콩 최대생산 선도단지 조성 : 수량목표 ('14) 300kg/10a → ('15) 320
  - 권역별 단지 조성(30ha) : 중북부(과주), 중부내륙(괴산), 서남부(무안)
  - \* 신품종, 콤바인 수확기술 등 신기술 투입 + 2모작 경영모델 설정
- 잡곡 거점단지 확대 조성 : ('14) 19개소 23ha → ('15) 25, 45
  - 작목별 핵심단지 : 조(여수), 수수(원주), 기장(정읍), 팥(제주)
  - \* 기계화 연시 : 조·기장 기계산파, 수수 육묘 기계이식, 콤바인 수확
- 발작물 우량 신품종 종자 조기 보급(콩·참깨·들깨·땅콩 등 4작목, 3톤)

## 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 ◇ 가축분뇨 고품질 퇴·액비 생산기술 확립 및 냄새 개선

- 축산냄새 저감 기술 개발·보급 : ('14) 4종 → ('15) 6 → ('17) 10

### □ (자원화)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기술 개발 및 보급

- 현장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퇴·액비화 기술 개발 및 착유 세척수 정화처리기술 실증(5월, 2개소, 서울우유·강원대 협업)
  - \*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 중 발생하는 NH<sub>3</sub> 가스 회수 ⇒ 질소보강 액비생산
- 액비사용 만족도 연구 등 액비 적정 사용방안 제시(6월)
- 축산농가 방문 가축분뇨시설 기술지원 및 퇴·액비화 우수처리 농가 성공사례집 발간 배부(12월)

### □ (냄새저감) 냄새저감 기술 개발 및 취약농가 대상 현장지원 강화

- 돈사 냄새발생요인 분석 및 냄새저감물질 효능 평가
  - 사육밀도별 돈사 핵심 냄새유발물질 농도 분석(5~10월) 및 돈사 슬러리용 미생물 혼합제(바실러스류 4종) 효능 평가(3~10월)
- 냄새유발요인 및 경로 분석을 통한 악취 평가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15~'17, 미국 농업연구청)
- 미생물제 활용 가축분뇨 냄새저감 기술 확산(108개 시군센터)
  - 미생물제 축사 살포농가 확산 : ('14) 32.5% → ('15) 50 → ('16) 80
- 축산농가 규모별 냄새저감 표준시설 매뉴얼 개발 보급(5월, 3천부)
-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냄새저감 교육 및 홍보
  - 축사관리방법 정기(4회), 하절기 특별교육 및 on-line 홍보
  - 협회지, 전문지, TV(지역) 기획홍보(4회), 사례집 발간(5월, 3천부)

√ 축산냄새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한 생산자단체 합동 기술지원(수시)



## 다 기간채소 수급관리

- ◇ 고추, 마늘, 양파 등 기간채소의 손실경감 기술과 위성을 활용한 관측 정확도 제고 등으로 채소수급 안정화 추진
  - 기간채소 손실률 : (현재) 30~35% → (목표) 20~25

### □ (저장기술) 기간채소 품목별 저장성 연장을 위한 패키지화 기술 개발

- (마늘, 양파) 수급조절을 위한 저장기술 확립(손실률:30~35% → 20~25)
  - 손실 감소를 위한 마늘, 양파 예냉 및 일관체계화 기술 확립
- (무) 재배 작형별 저장기술 확립 및 기간 연장(2~3개월 → 3~4)
  - 무, 세척무의 예냉, 건조, 포장 및 저장 일관체계화 기술 확립

### □ (손실경감) 수확 후 단계별 손실요인 분석 및 손실조사 기법 개발

- 배추, 양파 등 주요 기간채소의 품목별 손실요인 분석
  - 「수확→예냉→선별→저장→포장→출하」 단계별 손실 원인 분석
- 요인 분석을 위한 주요 손실항목 체크리스트 개발
  - 손실항목 분석, 경감 방안 모색 및 손실조사 프로토콜 개발

### □ (관측정보) 농업관측정보의 현장 확산과 이용률 제고

- 농진청-KREI 합동 지방 농업관측 모니터요원 교육(6월, 760명)
- 농업관측정보를 이용한 농업인 영농 의사결정 지원
  - \* 작목별 재배의향 면적, 가격·생산동향 및 전망 등 확산

### □ (작황예측) 위성(항공)영상을 활용한 작황 예측 기술 개발

- 원격탐사 : 재배면적·분포지도 작성, 생육·수량 추정 모형 개발
- 작황예측 : ('15) 배추·무 → ('17) 양파·마늘

## 6. 기후변화 · 식품안전 및 위기대응 강화

### 가 기후변화 대응

- ◇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토양 탄소 격리 기술을 통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신소득 작물 도입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14) 37천톤CO<sub>2</sub> → ('15) 509 → ('17) 1,012

#### □ (영향평가) 작물 재배지 변동·생산성 및 병해충 발생 예측

- 식량, 원예작물 재배지 변동지도 제작 및 주산지의 작형 변동 분석
- 기온 상승에 따른 작물 생육반응(감귤, 포도 등) 분석 및 CO<sub>2</sub>와 온도 상승이 병해충에 미치는 영향 평가(참다래, 감귤)
  - \* 최근 10년 전국 사과, 배 품질 데이터 DB 구축(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협업)
- 농업생태계 장기 기후영향 평가(생물상 5종, 물질순환 3종 등)

#### □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고도화 및 감축기술 개발

- 농경지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및 고도화
- 농산 부산물 활용 토양탄소 격리 기술 개발
  - \* ('13~'14) 밭 1종 → ('15~'16) 과수 1종

#### □ (피해경감) 이상기상 조건하의 작물 반응 및 극복기술 개발

- 콩, 잡곡, 옥수수 등 밭작물 피해원인 분석 및 경감기술
  - \* 콩 습해, 등숙 지연 생리특성 분석 및 한발저항성 진단
- 과수 착색불량, 숙기지연, 개화불량 등 생리반응 극복기술

#### □ (신소득 작물도입) 열대, 아열대작물의 국내 적응성 평가

- (채소) 여주, 파파야, 아티초크 등(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권역)
- (과수) 용안, 리치, 올리브 등(아열대 유전자원 수집 : 커피 등 40종)

## 나 친환경 안전농식품 공급 및 농자재 관리

### ◇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기술 개발 및 유통자재 안전관리 강화

- GAP 인증 농산물 확대 : ('13) 4% → ('15) 10 → ('17) 30

### □ (생산기반) 유기농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유기농작물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개발(2작물) 및 「유기농 ↔ 관행농」 간 환경영향 평가를 통한 최적 관리방안 제시
- 유기농 기술서 보급 : ('14) 15종 → ('15) 17
  - \* 과수 유기재배 매뉴얼 발간 : ('15) 사과, 배, 포도 → ('16) 감귤, 단감
- 작물별 GAP 생산 가이드 보급 : ('14) 15종(누계) → ('15) 20

### □ (안전성 향상) 생물적 위해요소 안전관리 연구

- 식중독 미생물의 환경 친화적 제어물질 선발(2종: 박테리오파지 등)
- 농가단위의 소규모 수확 후 위생처리시설 모델 개발(2종: 고추, 딸기)

### □ (농자재 관리) 유통자재 안전관리 강화 및 부정·불량자재 근절

- (제도개선) 농자재 안전성 평가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
  - WHO 분류 '발암성 농약' 안전성 특별 재평가(말라티온 등 3종)
  - 도심 공원 등 생활권 수목방제용 농약관리기준 개선
    - \* 농약 살포 후 재출입 기간 설정, 수목별 그룹화 농약등록 간소화 등
  - 소면적 재배 및 수출유망 작물 적용 농약 직권등록 확대
    - \* ('14까지) 75작물/234품목 → ('15) 80작물/255품목
- (품질관리) 유기농자재 지표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2종)
- (유통관리) 공시등기관, 생산(수입)업체 유통점검 및 교육
  - 민관 협력 및 유관기관 협조 불법자재 근절(밀수농약 특별점검 등)

## 다 가축질병 대응

◇ 농가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 참여 확대로 구제역·AI 발생 및 확산을 조기에 방지

### □ (예방활동) 가축질병 예방활동으로 차단방역 및 질병관리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 신설 등 질병 차단방역 강화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적용
  - 차단방역 의식제고 교육 : 연구행정직원(1회/반기), 가축관리직원(1회/분기)
- 전주 이진지 방역 대책 및 가축 이송 계획 수립
  - 축종 및 축군별 질병관리방안 수립 및 추진
  - 축산생명환경부 보유 가축 이송 전·후 조치 사항 등

√ 자연적 방역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축산 연구기능 이전 추진  
가축유전자원센터(남원 → 함양), 가금연구단지(성환 → 강원)

### □ (교육·컨설팅) 축산농가, 농업인 대상 차단방역 교육 및 컨설팅

- 농업인 대상 교육 전 과정에 가축방역 생활화 과정을 별도 편성하고, 집합교육을 대체한 메일링 모바일교육 병행 운영
  - \* 가축방역 사이버교육 신설(2월~연중)
- 축종별·농가별 역할분담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관리
- 축산담당공무원 대상 가축방역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 중앙단위 교육과정 개설(2,620명 : 현장실무 2,600, 지역별 정예요원 양성 20)
- 전문가(교수, 수의사)로 구성된 가축방역 컨설팅 시범운영(4개단)
  - \* 오리 등 가금류 밀집지역 전담사업단(전남), 한우사업단 3(전남·북, 경남)

## 라 재해·병해충 피해 최소화 지원

### ◇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농업기상·병해충 피해예방 및 경감

- 농업기상관측망(AWS) 확대 : ('14) 160개소 → ('15) 180 → ('17) 200
- 병해충 피해 경감율 : ('14) 80% → ('15) 85 → ('17) 87

### □ (조기경보) 농가·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 농업기상관측 네트워크 확대 : ('14) 160개소 → ('15) 180
  - \* 농업기상정보의 생산 및 서비스 주기단축 : ('14) 10일 주기 → ('15) 7
- 기상재해 조기경보시범서비스 확대 : ('14) 6개 읍면 → ('15) 3개 시군
  - \* 다양한 영농현장에 맞는 농가 맞춤형 조기경보 서비스체계 구축
- 농업기상재해 위험지도 작성 : 4종(태풍, 조풍, 돌풍, 일조부족)

### □ (재해대응) 재해 대응능력 강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인식 제고

- 신속한 재해정보공유 및 대응체계구축
  - \* SMS 서비스고객 DB 현행화(141천명), Band, SNS 등 재해정보 확산 채널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사례중심 교육 강화(265천명)
  - \* 보험회사·민간기관 협력, 보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작목특성 등 기술적 요인 제공

### □ (협업방제) 유관기관 공동방제 및 실시간 병해충정보 제공

- 농경지·산림 협업방제사업('14:1개소 → '15:8)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상설 운영 확대
- ICT 결합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예찰 시스템 구축(20개소) 및 병해충 발생 위기대응매뉴얼 현장 적용 추진
  - \* 농진청(방제대책수립), 농식품부(외래해충검역), 산림청(이동성해충 방제) 등
- 지자체별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132개단) 및 운영조례 제정 지원('14:2개소 → '15:17)



## 상 생 협 력

7. 경영체 역량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8. 세계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 7. 경영체 역량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 ◇ 중소규모 가족농 경영개선 및 신기술 보급·인력교육 확대
  - 경영개선 실천율 향상 : ('14) 43% → ('15) 44 → ('17) 48

### □ (경영개선) 기 육성(1~4년차) 가족농 사후관리 및 신규농가 지원

- 대상농가의 지속적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100명) 운영
  - \* 전문농업인, 귀농인 대상 수준별·단계별 컨설팅, 1:30 멘토링 등 농가밀착관리
- 신규농가는 '경영진단 후 소득제고 교육·컨설팅' 실시(1만 농가 내외)

### □ (신기술보급) 최신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교육·연시(230회), 자료(60종), 시범사업(134종) 및 동영상 제작 확대(40종) 등 보급방식 다양화
- 모바일 밴드(12종)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실시간 문제해결 지원
  - \* 밴드확대 : ('14) 기술포럼·식량 등 6종, 565명 → ('15) 12종, 1,000명

### □ (인력양성) 경영·마케팅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영농기술 교육

- (경영기술교육) 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교육(600명, 시군당 4명), 농업경영 전문 컨설턴트 양성(80명) 및 사이버교육(2,500명)

√ 경영지도 콘텐츠인 '네비게이션 팜나비'를 활용, 현장컨설팅 추진(4,500호)  
\* (팜나비) 경영분석, 투자분석, 자금관리, 고객판매관리 등 경영지원 콘텐츠 460종

### ○ (영농기술교육) 농업기술 전문능력과 자립역량 제고

- 지역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137개소 13천명)
- 경영수준·성장단계별 품목별 전문교육(855천명)
- 귀농인(1~5년차) 및 40대 미만 청년층 대상 영농정착 교육(5천명)
- 농기계안전교육(262천명), 트랙터 안전 시뮬레이터 설치(5개소)

## 8. 세계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 ◇ 개도국 농업현안 해결 기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기술경쟁력 강화

- 개도국 시범마을 조성 및 소득 향상 : ('15) 3개국, 5% → ('17) 10, 15
- 국제기관 협력(9기관, 27과제), 국가 간 협력(12개국, 25과제) 등

### □ (개도국 지원) KOPIA를 통한 맞춤형 기술 지원 : 20개국

- 센터별 중점 기술 개발(46과제) 및 개발기술 시범사업(10개소) 추진
  - \* 채소(베트남, 우즈벡), 벼(미얀마, 필리핀, 세네갈), 감자(페루, 볼리비아) 등
- 새마을운동 연계 농가 참여형 시범마을 조성(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 ※ 마을 생산단체 조성(새마을운동 연수 + 농민 교육) → 종합기술 지원

- ▶ 기술투입으로 얻은 소득이 마을 환경개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추진 (농식품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 □ (다자간 협력) 대륙별 기술협력협의체를 통한 협력과제 추진

- 아시아(AFACI) : 기후변화 대응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 등(12과제)
- 아프리카(KAFACI) : 빈곤해결을 위한 식량증산·기술보급 등(12과제)
- 중남미(KoLFACI) : 벼 생산성 향상, 양분관리기술 등(3과제)

### □ (대외협력) 첨단기술 도입 등 대외협력 및 대북 농업기술 지원 준비

- 국제기관 : ('14) 8기관, 24과제 → ('15) 9, 27
  - \*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와의 식량정책 관련 공동 심포지엄 개최(9월)
- 기술강국 : ('14) 12개국, 22과제 → ('15) 12, 25
  - \* 유전체 연구(↔ 독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미국), 병해충 방제(↔ 뉴질랜드) 등
- 북한농업 :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정책지원 및 대북 기술지원 준비
  - \* 곡물생산량 분석 : 접경지 활용 작황평가, 추정량 산출 등

# 국 민 행 복

- 9.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10. 국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 강화



## 9.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의식 개선

- 농촌노인 생활만족도 향상 : ('14) 79.3% → ('15) 80 → ('17) 82
- 농작업 안전보건 실천 증가율 : ('14) 39.6% → ('15) 42 → ('17) 44

### □ (현황조사)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현황 및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 국가승인통계(제14303호) 생산
  - \* 조사표본 : 전국 10,000농가 대상, 19세 이상 동거농업인 전수
- 농업인 복지실태 주제별 조사(4천가구 대상, 가족·교육·지역사회 등)
- 귀농인 정착과정 조사('14~'18: 전국 1,000명, 지역사회 활동실태 등)

### □ (노인복지) 농촌지역 대상별 특성에 맞는 노인 생활안정서비스 추진

- (독거노인) 마을조직체 돌봄 서비스 추진(효도전화, 말벗, 음식제공 등)
  - \* 읍면 또는 마을단위 생활개선회원-마을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163마을)
  - \* 노-노 돌봄 매뉴얼, 농촌노인 생활안전지침 등 자료제공(1천부)
- (건강한 노인) 일거리(보유기술·솜씨의 소득화), 배움(취미교양, 서예 등), 건강관리(운동, 체조 등), 행복마을 가꾸기(환경개선 등) 등
  - \* 마을별 수요·우선순위 파악,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32마을) 등 활동 지원
- 기존 성공마을 운영결과분석으로 유형별 모델링을 통한 확산
  - \* 건강장수마을 성공요인분석('05~'14, 737마을) 및 유형별 매뉴얼 개발(용역)

### □ (농작업 안전) 농작업상 질병 및 재해 예방관리 실천 지원

- 작목별 작업 단계별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 시범(60개소)
  - \* 안전관리 홍보(리후렛, SNS, 언론 등), 작목별 위험요인개선·안전실천 지침(5천부)
- 영농활동 안전지킴이 육성(245명) 및 안전실천교육(18천명)
- 농작업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개선(2건)

## 10. 국민중심의 현장소통행정 강화

- ◇ 농촌현장 직접방문과 현장으로 직접해결 등 현장공감 확대
  -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융합

### □ (컨설팅) 분야별 기술컨설팅 「농업기술현장지원단」 연중 운영

- (식량) 두메산골현장지원단(50회), 식량작물 종합컨설팅(39회)
- (원예) 찾아가는 원예사랑방(농가별 또는 마을단위 종합컨설팅, 40회)
- (축산) 이동동물병원(연중), 취약농가 대상 종합컨설팅(30회)
  - \* 진단장비 탑재차량을 이용한 현장 진단 및 처방

### □ (현장민원) 주산단지 에로 해소 「농업기술 이동상담장터」 운영

- 과채류, 엽채류, 과수 등 주산단지별 전문가 현장상담(10회)
- 현장민원 발생 시 스마트폰, SNS 활용 연구원과 실시간 상담
  - \* 농업기술상담 콜센터(1544-8572) 연중 가동

### □ (취약층 배려) 취약계층 대상 「안심(安心)영농」 기술 지원

- 대상별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북한이탈주민(↔통일부), 재소자(↔법무부), 초보귀농인(↔귀농귀촌종합센터)에 대한 농업분야 취업·창업상담 및 기술교육

### □ (종합상담) 농촌 오지마을 대상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 추진

- 영농기술, 생활수리, 의료봉사, 법률상담 등 종합지원(연4회)
- 도기술원, 시군센터, 의료기관(한림대, 순천향대병원) 등과 협업

#### √ 지자체·기업체 등과의 농산업 거버넌스 강화 등 공유 확대

- ▶ 전국의 특화작목연구소(40개)와의 학술정보 교류 활성화 등 지원 추진
- ▶ 중소농산업체 등에 대해 첨단시설·장비 개방 및 시험포장 공동 이용 확대
  - \* 주요대상 : 시설(농기계시험로 등 27시설), 장비(유전자 검출기 등 112종), 포장(5.1ha)

## IV. 분기별 추진일정

	주요업무	일정
'15 1분기	▪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소농 대상자 선정	1~3월
	▪ '14년 영농활용기술 경제성 심층 분석	1~2월
	▪ 국제농업과학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	1월
	▪ 연구개발 중기사업계획서('15~'19) 수립	2월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사업 평가회	2월
	▪ 수출확대 딸기 연구사업단 구성	2월
	▪ 농촌고령화 대응 전문가 협의체 구성	3월
	▪ 전북혁신도시 이전(국립 식량·원예특작·축산 과학원)	3월
'15 2분기	▪ 2015년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본방향 수립	4월
	▪ 지역농업 R&D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4~7월
	▪ KAFACI 3차 총회 및 집행이사회 개최(집바브웨)	4~7월
	▪ KoLFAC·KOPIA 아시아센터, 중국농업과학원 기획회의	5월
	▪ 구제역·AI 가상방역훈련(CPX)	5월
	▪ 2015년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	6월
	▪ 2016년도 지역농업특성화 및 6차산업 공모사업 심의	6~9월
'15 하반기	▪ 농업기술수준분석 델파이조사 및 종합분석	7~11월
	▪ 연구개발 어젠다 과제제안요청서 작성, 진도관리, 결과평가	7~12월
	▪ 농산물 소득조사 발표	8월
	▪ 기술보급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11월
	▪ 2016년 농촌진흥사업 수행계획 수립	11월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생명공학 육성농업 16년 시행계획 수립	11월
	▪ 2015년 농작물 직무육성 신제품 선정	11~12월
▪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개최	12월	
'15 연중	▪ 연구개발 어젠다 운영위원회, 농업 현안 기술 수요조사	연중
	▪ 주요 작물 생육조사 결과 분석 및 자료 제공	연중
	▪ 병해충 관찰포 조사 분석 및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연중
	▪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 운영 및 현장애로 기술지원	연중





## 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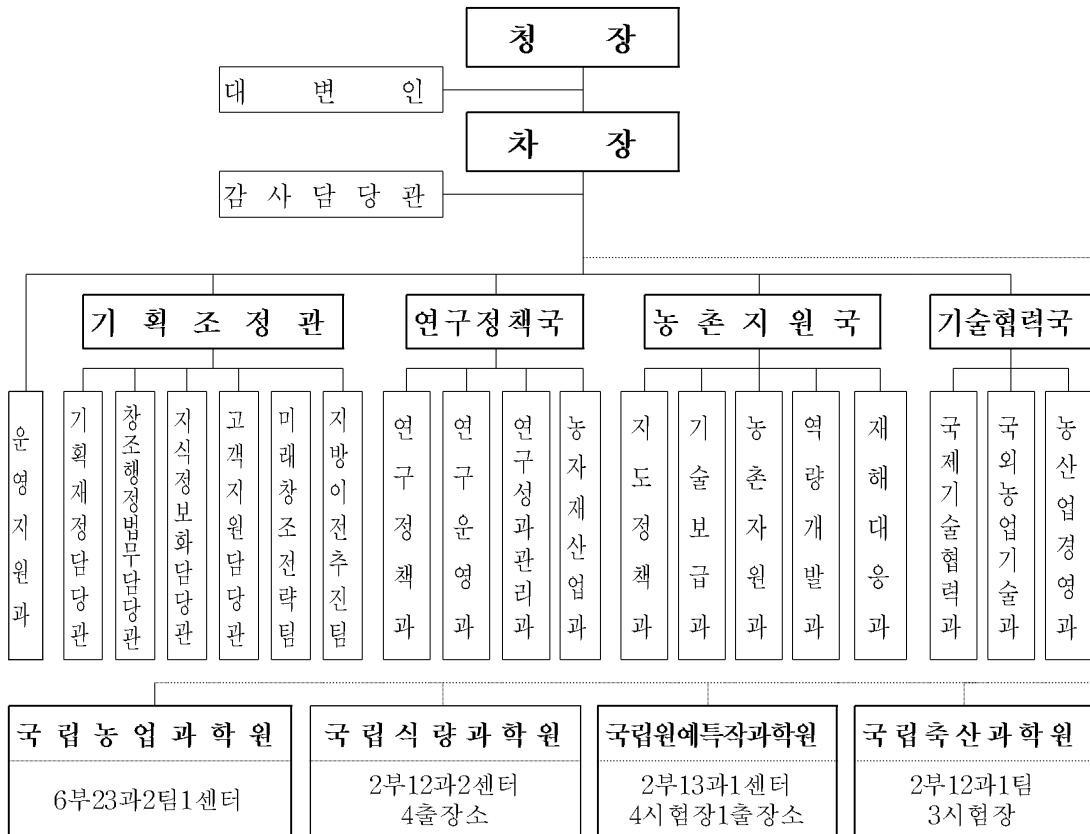
- ① 농촌진흥청 일반현황
- ② 2015년 주요 정책·행사 캘린더
- ③ 2014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 가 연 혁

1962. 4    농촌진흥청 발족 (2국 11기관)
1994. 12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  
및 농림부의 농자재 품질관리기능을 통합,  
농업과학기술원 신설
1996. 2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설
1997. 1    도 농촌진흥원 및 시군농촌지도소 연구·지도직  
지방직화 (연구직 580명, 지도직 6,900명 지방직 전환)
2002. 3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신설
2007. 6    작물과학원에 인삼약초연구소 신설
2008. 10    품목·기능 중심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으로 조직개편 (9개 소속기관 → 5)
2009.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2009. 10    한국농업대학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 한국농수산대학)
2014. 7    농촌진흥청 전북혁신도시 이전

# 나 조직 : 1관 3국 21과(담당관·팀) 4연구기관



- ※ 지방농촌진흥기관 : 9개 도 농업기술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 ※ 산하 공공기관(1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다 정원

(단위:명)

구분	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행정직	농업· 전산 등
계	1,856	22	1,165	95	254	320
본청(1관 3국)	347	6	112	69	95	65
소속기관(4)	1,509	16	1,053	26	159	255

## 라 임 무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교육훈련 및 국제기술협력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 농업인 복지·농촌 활력 증진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국·기관	정원	주요 임무
계	1,856	
<본청>	347	
기획조정관	81	정책수립 조정, 예산, 조직, 법령, 성과평가, 정보화, 미래전략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영농기술 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연구정책국	65	연구개발사업 기획·운영·성과관리, 농자재등록 및 품질관리
농촌지원국	83	기술보급, 농촌자원 개발, 농업인 교육, 재해대응
기술협력국	49	국제협력, 해외농업기술개발, 농업경영기술개발
대변인	1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정책발표에 관한 브리핑 지원
감사담당관	14	공직기강, 농촌진흥청 및 산하단체 감사, 진정 비위 조사·처리
운영지원과	43	보안, 관인, 인사, 급여, 예산집행, 국유재산관리
<소속기관>	1,509	
국립농업과학원	512	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농기계, 생물·식품자원, 생명공학, 유전자원 등에 관한 기초기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국립식량과학원	347	식량작물 품종개량·재배법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7	채소·과수·화훼, 인삼·약초·버섯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국립축산과학원	323	가축·가금, 축산물안전성, 축산시설·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마 2015년 세출예산**

□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2,386억원으로 2014년 예산 (12,236억원) 대비 150억원(1.2%) 증액

- 이 중 지방이전, 인건비 등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는 7,347억원으로 2014년 예산(6,860억원)보다 487억원(7.1%) 증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3,462억원으로 2014년 예산(3,857억원) 대비 395억원(10.2%) 감액

(단위 : 억원)

분야별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b>합 계</b> (지방이전 제외)		12,236 (8,379)	12,386 (8,924)	150 (545)	1.2 (6.5)
기 능 별	◇ 사업비 (순수사업비)	<b>6,860</b> (6,686)	<b>7,347</b> (7,006)	<b>487</b> (320)	<b>7.1</b> (4.8)
	○ 연구개발	4,600	4,763	163	3.5
	○ 국제협력	193	195	2	1.0
	○ 기술보급	1,729	1,877	148	8.6
	○ 정보화	164	171	7	4.3
	○ 실용화재단이전	-	66	66	순증
	○ 이주지원및관리	174	275	101	58.0
	◇ 지방이전	<b>3,857</b>	<b>3,462</b>	<b>△395</b>	<b>△10.2</b>
◇ 인건비	<b>1,324</b>	<b>1,375</b>	<b>51</b>	<b>3.9</b>	
◇ 기본경비	<b>195</b>	<b>202</b>	<b>7</b>	<b>3.6</b>	
회 계 별	일 반 회 계	7,046	7,449	403	5.7
	농 특 회 계	405	489	84	20.7
	지 특 회 계	928	986	58	6.3
	혁 특 회 계	3,857	3,462	△395	△10.2

## 분야별 순수사업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합 계	6,686	7,006	320	4.8
1.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 개발	287	328	41	14.3
2. 바이오 기반의 신성장 동력 창출	1,527	1,353	△174	△11.4
3.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1,119	1,230	111	9.9
4.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1,149	1,282	133	11.6
5.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605	690	85	14.0
6.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	942	1,023	81	8.6
7.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농촌 활력화 지원	700	734	34	4.9
8.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193	195	2	1.0
9.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164	171	7	4.3

## 2

## 2015년 주요 정책 · 행사 캘린더

주요정책 · 행사명	일 정	비고
▪ 전국 도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2월	청장, 도원장
▪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3월	농업인단체장
▪ 전국 지방농촌진흥기관장 현장 워크숍	3월	도원장, 시군센터소장
▪ AFACI 고위급 워크숍	3월	회원국
▪ KoLFACI 고위급 워크숍(볼리비아)	3월	회원국
▪ 탐과채 성공 다짐 대회	3월	공무원, 농업인
▪ 아시아-태평양지역 잠사과학 국제심포지엄	4월	한국·중국·일본
▪ (가칭)쌀수출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4월	각계 전문가
▪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념행사	5월	식량원·원예원·축산원
▪ 제3차 KAFACI 총회(짐바브웨)	5월	청장
▪ 제48회 한일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5월	회원
▪ 제5회 농진청-미국 농업연구청 공동워크숍	6월	청장
▪ 전국 농과계대학장협의회 공동 심포지엄	9월	청장, 농과계학장
▪ 농진청-국제식량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엄	9월	청장
▪ 신비한 흙의 세계사진전시회	9월	국민
▪ 세계양봉대회 개최	9월	120여 개국
▪ 제8회 전국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	10월	국민
▪ 한국4-H중앙연합회 중앙경진대회	10월	4-H회원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11월	농업인
▪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	12월	도원장, 시군센터소장



## 3

## 2014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구분	평가분야	수여기관	평가결과	수상일
계	32건 (65점)			
최우수 (2)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국무조정실	우 수 (최우수기관)	'14. 4
	지역발전사업 평가 (지역전략산학협력)	지역발전위원회	최우수	'14. 6
우수 (30)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안전행정부	우 수 (총리표창 2)	'14. 2
	책임운영기관 평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행정부	우 수 (장관표창)	'14. 4
	과학기술진흥유공	미래창조과학부	우 수 (장관표창 7)	'14. 5
	발명유공	특허청	우 수 (훈장 1) (장관1·청장표창)	'14. 5
	재정사업 평가 (신기술보급사업)	기획재정부	우 수	'14. 5
	지역발전사업 평가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지원)	지역발전위원회	우 수 (2)	'14. 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미래창조과학부	우 수 (장관표창 6)	'14. 6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차세대바이오그린21)	미래창조과학부	우 수	'14. 6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한국과학기술 총연합회	우 수 (5)	'14. 7
	공무원교육훈련 종합평가	안전행정부	우 수 (국무총리표창)	'14. 7
	정부3.0 브랜드과제 평가	행정자치부	우 수 (장관표창)	'14. 7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성가족부	우 수 (장관표창)	'14.10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대통령표창 1) (총리 1·장관표창 4)	'14.10

구 분	평가분야	수여기관	평가결과	수상일
우수 (30)	정보기술아키텍처활용성과	행정자치부	우 수 (장관표창)	'14.11
	성과관리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장 려 (장관표창)	'14.11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총리표창)	'14.11
	대한민국 특허발명대전	산업통상자원부	금 상 (장관표창)	'14.11
	흙의 날 포상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장관표창 2)	'14.11
	을지연습 공로	행정자치부	우수 (대통령표창)	'14.12
	국가기록관리 평가	행정자치부	우 수 (장관표창)	'14.12
	중앙우수제안	행정자치부	장 려 (국민1, 공무원1)	'14.12
	친환경농업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장관표창 2)	'14.12
	국제통상협력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장관표창 2)	'14.12
	농식품 수출진흥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장관표창)	'14.12
	새마을운동유공	행정자치부	우 수 (대통령표창 1) (장관표창 1)	'14.12
	생명산업육성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우 수 (장관표창 3)	'14.1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유공	미래창조과학부	우 수 (대통령포장 1) (장관표창 1)	'14.12
	우수 협업과제 평가	국무조정실	우 수 (포상금)	'14.12
	2014 정책홍보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우 수 (장관표창 1)	'14.12
	2014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우 수 (장관표창 1)	'14.12

---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

2015. 1.



# 순 서

<b>I. 기관 현황</b> .....	<b>283</b>
<b>II. 2014년 성과와 반성</b> .....	<b>289</b>
<b>III. 2015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b> .....	<b>297</b>
<b>IV. 2015년 주요 업무계획</b> .....	<b>305</b>
1. 창조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육성 .....	307
2.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	316
3. 산림재해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321
4.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 .....	326
5.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	331
6.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	337
7. 개방과 소통의 행정 구현 .....	344
<b>V. 주요 정책 현안</b> .....	<b>347</b>
<참고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355
<참고2> 2015년 입법 추진계획 .....	356
<참고3>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 .....	357



# I. 기 관 현 황

1. 조직 및 정원
2. 주요 업무
3. 소관 법률
4. 2015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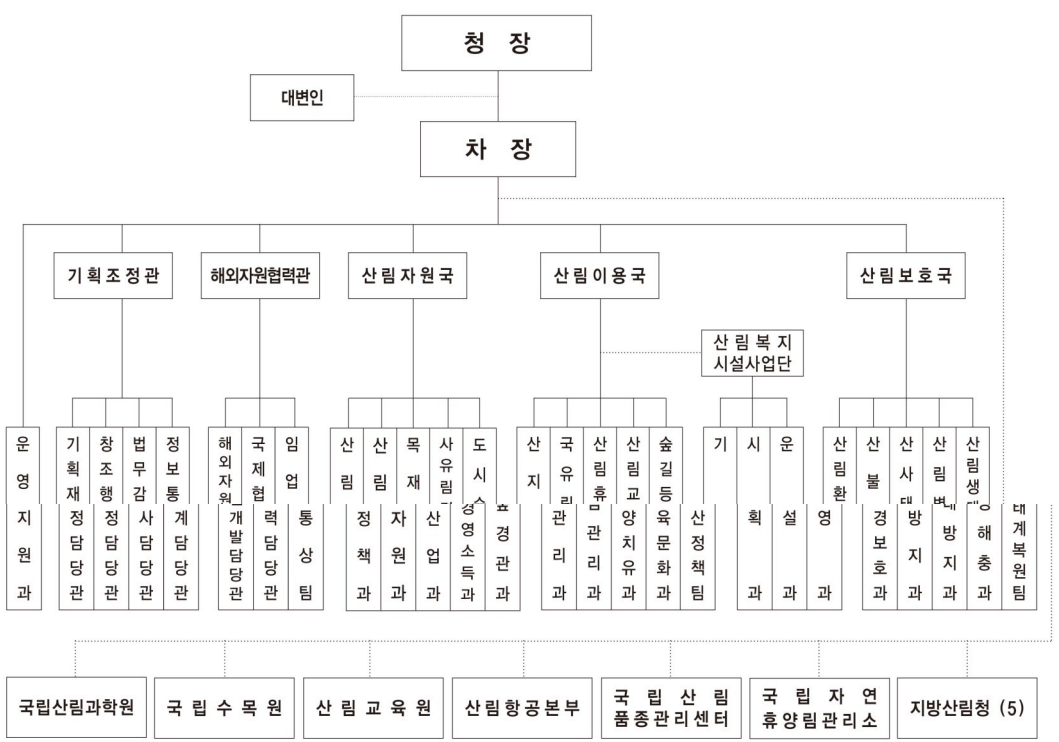


# 1. 조직 및 정원

□ 임 무 : 산림자원 · 산업 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 · 복지

□ 조 직 : 2관 3국 1단 24과 3팀, 11개 소속기관

-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5)



□ 정 원 : 1,751명 [본청 276, 소속기관 1,475]

## 2. 주요 업무

### □ 본 청

구 분	주 요 업 무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 및 재정성과, 행정혁신, 조직 및 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 정보화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수출입·관세 정책, ODA, 임업분야 통상, 국제기구·협약 협상, 양자·다자협력, AFoCO 지원
산림자원국	산림정책·연구조정, 기후변화·산림탄소,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중요·조림·숲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목재수급,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양성, 임도, 도시숲 조성·관리, 무궁화 보급, 임산물 수급,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
산림이용국	산지관리,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복지·휴양 증진, 치유·산촌, 산림교육·문화, 숲길조성, 등산지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	백두대간·중앙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 전시·체험·연구시설 운영
산림보호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산림보호·단속, 백두대간 보호·관리, 산림생태계 복원,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 □ 소속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산림보전·산림유전자원·임산공학 등 시험·연구
국립수목원	산림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증식, 광릉숲 보전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공무원·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산림항공본부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구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및 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 및 관리, 국유림 확대 및 이용, 산불예방·진화 지원

### 3. 소관 법률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 사방사업법	1962. 1.15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2. 9	○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법	1980. 1. 4	○ 산림 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97. 4.10	○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3.28	○ 수목원 조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기본법	2001. 5.24	○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산지관리법	2002.12.30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3.12.31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2005. 5.31	○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 8. 3	○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산림보호법	2009. 6. 9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산사태·산림병 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1. 7.25	○ 국가·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2. 2.22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5.23	○ 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 4. 2015년도 예산

### □ 회 계 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4 예산	2015 예산	증△감	
				%
계	18,651	19,484	833	4.5
○ 일반회계	9,023	9,791	768	8.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81	5,936	△45	△0.8
○ 지역발전특별회계	3,206	3,305	99	3.1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41	452	11	2.5

※ 2015년 예산(총지출기준) : 정부예산 대비 0.52%, 농림예산 대비 10.1% 수준

### □ 프로그램별

(단위 : 억원)

부 문 별	2014 예산		2015 예산		증△감	
	예산	%	예산	%		%
계	18,651	100	19,484	100	833	4.5
○ 산림과학기술 개발	640	3.4	769	3.9	129	20.2
○ 해외자원 협력	237	1.3	240	1.2	3	1.3
○ 산림자원 육성	6,147	33.0	6,016	31.0	△131	△2.1
○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4,457	23.9	4,695	24.1	238	5.3
○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441	2.4	452	2.3	11	2.5
○ 산림자원 보호	5,303	28.4	5,843	30.0	540	10.2
○ 산림행정 지원	1,426	7.6	1,469	7.5	43	3.0

### □ 집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억원)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2015	17,242	10,309	59.8	5,100	29.6	5,209	30.2	3,532	20.5	3,401	19.7
2014	16,787	10,564	62.9	3,974	23.7	6,589	39.2	2,520	15.0	3,704	22.1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기준 금액('14년은 실적)

## Ⅱ. 2014년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2. 반 성



# 1. 주요 성과

## □ (산림산업) 체계적인 지원·육성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목재법」(’13.5시행)에 따른 산업체 기술교육과 법적등록을 실시하고, 목재펠릿 생산·소비지원으로 산업화를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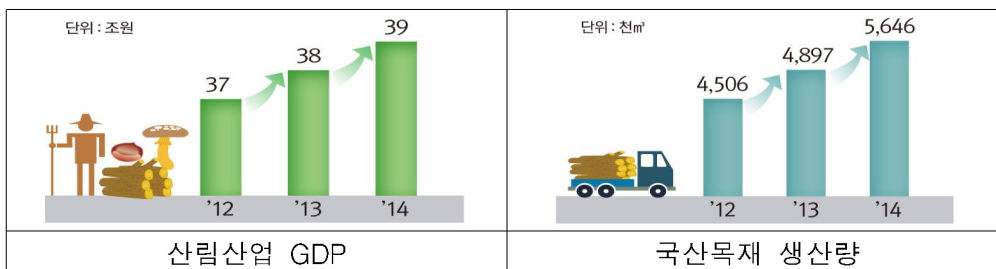
- 업종별 맞춤형 교육 추진 및 생산업체 법적 등록 완료(2,769개)
- 목재펠릿 제조시설 지원 등으로 국내 생산량 증대(66→90천톤)
- \* 목재펠릿 90천톤 생산 → 원유수입 41천톤 수입대체 및 CO<sub>2</sub> 123천톤 저감

○ 임업인 소득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복구지원 확대로 재해에 대비한 임업인 소득안정망을 구축

-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자금지원 확대(250→350억원)
- \* 산림경영컨설팅센터 개원(’14.2)으로 임업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병행
- 재난복구비 기준 상향(11개 품목, 45%) 및 지원대상 확대(7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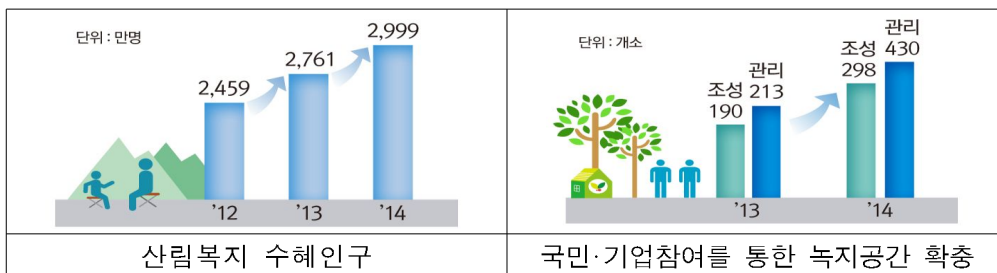
○ FTA 등 시장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임산물을 보호하고, 품목별 발전대책 마련으로 FTA의 전략적 활용 기반을 구축

-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보호를 위한 양허제외 및 단계적 개방 협의
- 10대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대책 수립
- \* 밤, 뽕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양삼, 산나물, 산지약용식물, 조경수, 분재 등



□ (산림복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도시녹화의 민간참여 확대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

- 늘어나는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
  - 휴양시설(14개소), 치유·교육시설(16개소), 숲길네트워크(441km) 등
  - ☞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고려대)에서 총 40개 정책사업 중 2위로 선정
-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림교육 모델**을 제시
  - 생태탐방, 에코힐링캠프, 가족캠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휴양림 우선 예약제(21개실) 추진 병행
  - ‘방과후 아카데미’,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도입
- **도시 생활권** 내에 다양한 유형의 **녹색공간을 확충**
  -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등 접근성 높은 도시숲(258개소)을 확대 조성
  - 주거환경 개선과 산림문화보전을 위한 마을숲(2개소) 및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숲(75개교) 확대 조성
- 국민과 함께 하는 **도시녹화운동(도시愛숲캠페인)** 전개로 녹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 보급
  - 시민참여로 민·관협력 모델 제시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교육부 협업으로 학교 무궁화 보급(158개교) 등 추진



\* 산림복지 수혜인구 : 자연휴양림·치유의숲·산림교육시설·수목원 이용자 수(연인원)



□ (재해방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 ‘산불골든타임제’ 강화를 통해 산불피해 발생면적 감소

\* 산불피해면적 : (10년 평균) 776ha → ('13) 552ha → ('14) 137ha(82% 감소)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산사태 피해 : (10년 평균) 456ha, 7명 사망 → ('13) 312ha, 3명 → ('14) 70ha, 0명

○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로 산사태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

- '14년 최초로 고속도로변 위험지(29개소) 사방사업 추진(국토부 협업)

\* 도로변 산사태(건) : ('10) 6 → ('11) 3 → ('12) 16 → ('13) 9 → ('14) 0

□ (해외협력)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리더십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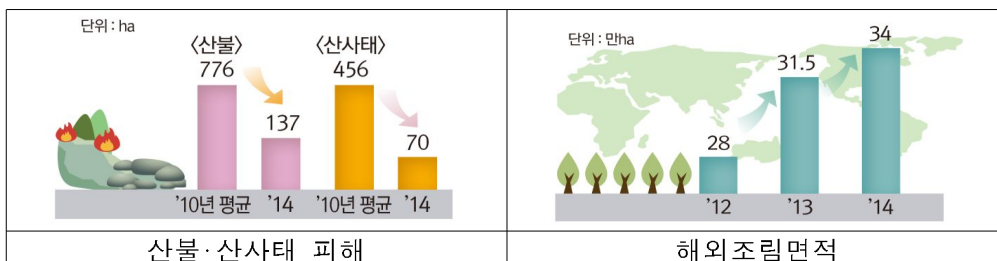
○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여 녹화성공국으로서 국제 산림복원의 리더 역할을 수행(제12차 CBD 당사국 총회시 채택)

○ 정상회담 의제를 중앙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확대

\* 정상 임석하 MOU 체결 : 한-카자흐('14.6), 한-캐나다('14.9)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산림복원메커니즘을 창립하고, 건조지 녹화파트너십(GDP)\* 을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확대(3→7개국)

\* 개도국의 사막화방지를 지원하는 산림청, UNEP 및 UNCCD 3자 협력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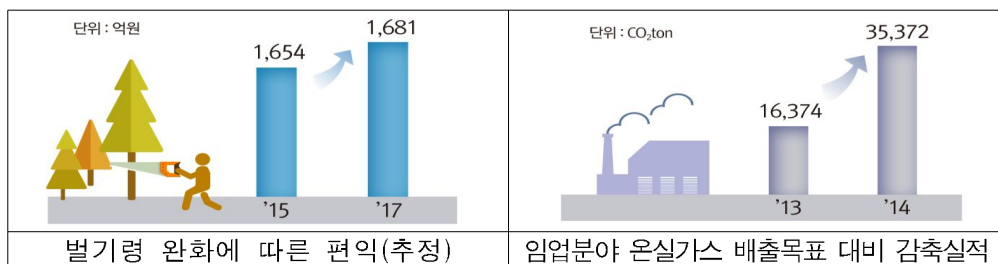


□ (규제개혁) 선제적인 규제개선으로 경영활동을 지원

- 산지 내 풍력시설 설치 규제 완화로 발전업계의 투자를 촉진
  - 산지 편입제한 완화(3만→10만㎡)로 풍력발전 사업의 규모화 유도
  - 풍력시설용 기자재 운반·관리를 위한 대형 진입로 설치 허용
  - \* 산지 내 풍력발전사업 규모 상승효과 기대치 : ('13) 79 → ('15) 200MW(2.5배)
- 임업인·축산업인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벌기령 완화(참나무 50→25년)로 산주 소득향상 및 목재 공급 활성화
  - 산지 내 가축방목 허용 확대(3만→5만㎡)로 산지축산 육성 기반 마련
  - \*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저항력 제고 및 버려지는 산림부산물 가축사료화 기대
- 규제 개선과제 지속·발굴 추진 및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 비용분석(5건)으로 27억원 뱅킹 및 비용감증 시 부처최초 '동의' 획득
  - ☞ 「2014년 규제개혁 성과창출 사례 평가」(국조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청 단위 유일)

□ (협업) 부처 간 협업으로 산림정책의 효율성을 증진

- 산지개발 시 발생하는 임목자원의 재활용 추진(국토·환경부 협업)
  - 기존 폐기물 처리방식을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실시
  - \* 전국 확대보급 시 연간 폐기물처리비 690억원 및 원목수입 1,725억원 절감 기대
- 기후변화에 따른 임업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농식품부 협업)
  - 7개 업체의 감축목표 이행 관리, 교육 및 연구회 운영 등 지원 강화
  - \* 동화기업, 선창산업, 대성목재공업, 성창보드, 광원목재, 포레스코, 한솔홈데코



## 2. 반성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품질 저하 및 신규 피해지역 발생

- 단기간 내 피해목 전량방제에는 성공하였으나, 방제 전문 인력 부족, 현장 관리 미흡 등으로 방제품질은 저하
- 피해고사목의 인위적인 이동과 피해발생 지역에 한정된 예찰·방제 실행으로 인해 신규 피해지역이 확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 ('13) 59개 → ('14) 74개 시·군·구
- ☞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대책'을 수립(11월)하고, 완전방제 대책단을 구성·운영(12월)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중
  - 지역담당관·책임담당관 배치 및 방제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병행

### □ (임업인 규제) 산림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임업인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부족

- 금년도 주요 규제완화 사항이 풍력단지 시설, 관광·산업단지 조성, 병원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임업 이외 산업분야에 해당
- ☞ 임업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로 임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

###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 노출

- 감사원·산림청 감사를 통해 인사운영 상 부적정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고, 국회·언론에서 지적사항이 발생
- ☞ 채용세습 방지 등 인사규정 개정으로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



### **Ⅲ. 2015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

**1. 여건 전망**

**2.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



## 1. 여건전망

- (산림산업) RPS<sup>1)</sup> 제도 정착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목재·청정임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버섯, 약용식물 등 국내 청정 임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 목재수요 : ('13) 28백만 → ('14) 29백만 → ('17추정) 31백만<sup>3</sup>
    - 임산물 생산액 : ('11) 5.7조 → ('12) 6.7조 → ('13) 6.9조원
  - 국산목재가 주로 저부가가치로 이용됨에 따라 목재수요의 증가가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
    - 국산목재 이용 : (고부가) 제재·합판 14%, (저부가) 펄프·보드 등 86%
    - \* 부가가치(원목 1<sup>m</sup>기준) : 펄프용 8만원, 합판용 10만원, 제재용 12만원
  - 임산물 생산이 소규모·분산 재배로 이루어지고, 단순재배형 1차 산업에 머물러 임가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임가소득('13) : 29,958천원(농가소득대비 86.8%, 어가소득대비 77.6%)
  - FTA 등 시장개방으로 국산 임산물의 수출 활로가 확대 되는 한편, 국제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 창조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원수요의 증가를 소득증대로 연결하고, 국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수출임업을 활성화할 필요

1)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도('12년 시행)

□ (산지이용) 개발 가능한 토지의 한계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의 타용도 이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산지비즈니스(산지를 활용한 1·2·3차 산업)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무분별한 훼손 방지’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
  - \* 스위스 체르마트 : 산악관광으로 인구 6천명 소도시에 연 130만명 관광객 유치
  - \*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 케이블카 설치로 무분별한 트레킹길 감소 → 식생 회복
- 각종 개발규제로 산지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저해되는 실정
  - 경사도(25도 이상), 표고(50% 이상), 산지구분(보전산지)에 따른 제한 등
- ☞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산지비즈니스를 육성할 필요

□ (산림재해) 기후적·인위적 요인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증가

- 봄철 따뜻한 날씨와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로 인한 방제 인력 분산 등으로 산불 대응여건이 불리
  - 1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철 고온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
  - \* '14년 산불 피해(137ha)의 대부분이 봄철에 발생(129ha, 94%)
- 지구온난화와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로 대형 산사태와 각종 산림병해충 발생·확산 가능성이 증대
  - 연평균 산사태 면적 : ('80년대) 231 → ('90년대) 349 → ('00년대) 713ha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 ('10) 26 → ('11) 49 → ('12) 48 → ('13) 218만본
- ☞ 3대 산림재해의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력을 향상시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산림복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

○ 여가시간 확대로 산림교육·휴양·치유 등 체험·힐링수요가 급증

- 국민이 선호하는 야외 여가활동 1순위로 등산이 선정('12, 문체부)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구 : ('13) 2,761 → ('14) 2,999 → ('17추정) 3,530만명

○ 다양한 국민수요에 비해 **산림복지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산림교육·캠핑·힐링 등 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복잡·다양화

- 정부예산을 활용한 복지시설·인력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한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되, **민간산업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 및 **소득·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

□ (북한산림) 북한 황폐지 복구와 관련한 협력사업 재개가 예상

○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우선사업**으로 부각

\* 남한 : 복합농촌단지(드레스덴 선언), 산림공동관리(8.15 경축사), 종자교류(통준위)

\* 북한 : 산림황폐화의 심각성과 그간의 산림 조성·관리부실 인정

☞ 남북협력사업 재개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준비태세 확보**가 필요

□ (해외협력) 녹화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

○ 개도국으로부터 **산림복구 경험·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부각

☞ 국제사회의 기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산림분야 ODA** 규모를 늘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

\*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1조 1,074억원) 중 산림분야는 0.1%에 불과

## 2. 2015년도 업무추진 방향

### 비 전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 목 표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경제혁신		국민안전·행복		통일과 국제협력
창조경제로 산림산업 육성	규제개혁으로 산업활동 지원	재해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복지 증진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①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①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①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①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①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②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② 규제 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	②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②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②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③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발굴·육성	③ 산지규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	③ 과학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	③ 노년·회년기·소외계층의 산림치유·수목장 확산	③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④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업 육성	④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④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④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④ 기후변화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기반 확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개방과 소통의 행정 구현
①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	① 정부 3.0
②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체계 구현	② 비정상적 정상화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③ 공공기관 개혁
④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	

##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금년도 업무 추진과제〉

국정과제	세부과제	금년도 전략목표	금년도 추진과제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12]	산림부국 실현 [12-4]	창조경제로 산림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li> <li>•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li> <li>•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발굴·육성</li> <li>•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입업 육성</li> </ul>
		산림복지 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li> <li>•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li> <li>• 노년·회년기·소외계층의 산림치유·수목장 확산</li> <li>•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li> </ul>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li> <li>•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체계 구현</li> <li>•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amp;D 활성화</li> </ul>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111]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111-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li> </ul>
지역경제 활력 제고[107]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107-1]	규제개혁으로 산업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li> <li>•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li> <li>• 산지규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li> <li>•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li> </ul>
총체적인 국가 재난 관리체계 강화 [86]	홍수, 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83-6]	재해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예방·대응 체계 고도화</li> <li>•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li> <li>• 과학적인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li> <li>•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li> </ul>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92]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이행[92-1]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92-3]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li> <li>• 기후변화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li> </ul>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126]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126-3] 남북간 소통의 통로를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126-5]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li> <li>•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li> </ul>



## IV. 2015년 주요 업무계획



# 1. 창조경제를 통한 산림산업 육성

##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창조경제의 내실화를 통한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 정책과제

①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합판·방부목·집성재 등 국내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 이용 촉진
-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연 500만톤)의 활용기반 마련
- 생산·유통 체계 개선 및 교육·관광을 결합한 6차산업화 유도

② BT·NT 등을 활용한 ‘첨단 산림산업’ 육성

-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유망 산림자원의 발굴·관리
- 첨단산업 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개발 추진
- 산업계 기술이전과 창업지원을 통한 주요 기술의 산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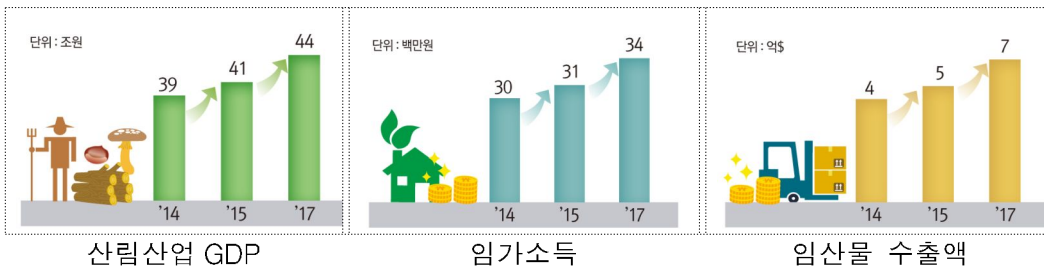
③ 정원·자생식물·건강산업 등 신규 유망산업 발굴·지원

- 정원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원식물 소재개발 추진
- 희귀·특산 식물과 야생화자원의 수집·보급 등 이용기반 마련
- 산림휴양·치유 등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 유도

④ FTA 대응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임업 육성

- 청정 임산물의 생산기반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수출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략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 기대효과



1

**‘자원 이용방식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고도화) 목재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이용 고도화 추진

- 국내 목재산업계의 노후설비 현대화를 최초로 지원하고, 가공기술 확대·보급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활성화
  - 제재·건조·방부장비 등 목재제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30개소)
  - 국산소나무를 합판 원료로 공급하여 고도이용시장 창출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목조건축으로 방부·집성 등 핵심기술 확산
    - \*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집성기술을 통해 목재자원의 가치를 10배 이상 제고
- 품질인증 활성화와 생활권 목재문화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이용 촉진을 유도
  - 집성재 품질인증(K-Wood) 제품 확대 : ('14) 0개 → ('15) 5개
    - \* 인증제품의 조달우수제품 등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 권역별 목재문화체험장(7개소) 운영 및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 목재부품산업과 전방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
  - 부품산업(생산·가공) 및 전방산업(건축·가구 등) 간 협의체 구성·운영

원목의 가공 유형별 부가가치 상승 비교(목재 1㎡ 기준)



원목(9만원)



제재목(18만원)



방부목(36만원)



집성재(71만원)



## □ (부산물 자원화) 산지 내 버려진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규제 완화와 임목생산 시스템 개선으로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연간 500만톤)의 활용 기반을 마련

- 산림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 재활용 유도(환경부 협조)
- 원목과 부산물을 동시에 수집하는 '전목(全木) 수집시스템' 확대
  - \* 국유림 목재생산 구역 내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 산림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산림부산물 이용을 증대

- RPS제도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 목재펠릿 생산 : ('14) 90천톤 → ('15) 95천톤(원유 43천톤 대체, CO<sub>2</sub> 130천톤 저감)

## □ (6차산업화) 생산·가공과 서비스의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

○ 임산물 생산·가공단지를 집단·규모화하고 유통체계를 효율화

- 생산단지(38개소) 및 복합경영단지(22개소) 조성으로 집단·규모화
- 생산지별 산지유통센터 조성(7개소) 및 산지·소비자 직거래 확대
-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65백명)을 6차산업화 주체로 육성

○ 산림자원 6차산업화단지 확대(2→6개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뽕은감·황칠 등 주산지에 생산·가공·연구를 복합한 클러스터 조성
- 수확·체험(U-pick farm)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탐방 프로그램 접목
- 숙박시설, 식당, 버스·철도, 여행사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 6차 산업화 성공사례(청도 감 와인)



- 경북 청도 감 재배단지와 연계하여 감 와인 가공·생산
- 폐철도 터널을 와인숙성 창고로 활용 및 관광 상품화
- 대통령 취임식, G20 정상회담 등 건배주로 이용
- 연간 30만병 생산으로 약 20억원의 매출을 기록

## □ (자원 확보) 첨단산업에 활용될 유망 산림자원 발굴·관리

### ○ 국내 주요 식·약용 및 산업용 산림자원의 탐색·수집을 확대

- 유용 산림자원의 수집·확보 및 보존 확대(103만→105만점)
  - \* 국내 육상 생물종의 92%가 산림에 서식하고, 지형·기후변동 커서 활용 잠재력이 풍부
- 고문헌과 향토지식을 활용한 유용물질 탐색 및 DB화 추진

### ○ 나고야 의정서 발효('14.10)에 따라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

-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가권리 획득과 무분별한 국외 반출 제한
  - \* 구상나무 등 고유자원이 국외로 유출되어 관상수로 활용되는 사례 발생
- 생명자원 연구의 허브인 산림약용자원 연구시설 건립 추진('15.12 준공)

## □ (기술개발) 분야별 전략기술 선정·투자로 기술경쟁력 확보

### ○ 첨단산업 시장분석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정

- 국립산림과학원, 컨설팅기관 등을 활용한 기술분야별 조사 추진

### ○ 전략기술의 집중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

- (BT) 의약품, 화장품 등에 활용 가능한 기능성 천연 물질 연구
  - \* 산뽕나무('14, 퇴행성뇌질환에 기존치료제보다 우수한 효과 구명 → 동물실험 필요)
  - \* 산양삼(면역강화), 황칠나무(항노화·미백), 천마(심혈관 질환 개선) 등 산업화 유망
- (NT) 나노융합산업의 원료인 목재 섬유소 분리·활용기술 개발
  - \* 휘어지는 종이배터리('14, 나노섬유 분리막 특허등록 → 손목형 스마트폰 등에 활용 가능)
  - \* 인공뼈·혈관, 생분해성 플라스틱, 나노 복합재용 강화제 등 산업화 유망

## □ (산업화) 기술이전·창업지원을 통한 첨단산림산업 활성화

- 산림분야의 우수 기술 및 특허의 민간 이전으로 산업화를 유도
  - 대학·공공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특허를 기업에 소개
  - ‘先 기술이전, 後 기술료 납부’ 제도화로 기술이전 촉진(산업부 협조)
- 기업의 초기 정착을 돕는 **창업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
  - 임업진흥원과 선도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벤처 멘토링단’ 구성·운영
  -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경영 훈련, 창업비용 지원 및 유관기술의 집적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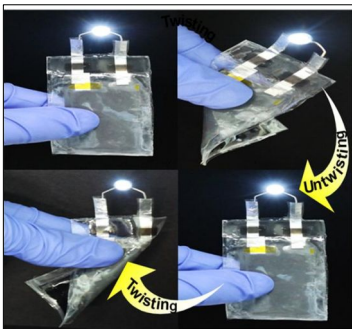
### 산업계 기술이전 성공사례



#### <헛개나무 기능성 물질 특허 기술이전>

- 동의보감·본초강목에 소개된 헛개나무 효능을 토대로 유용물질 탐색
- 헛개나무 추출물의 숙취해소 효과를 증명하여 특허 출원(국립산림과학원)
- (주)생명의나무에 기술이전(이전료 18천만원)
- (주)생명의나무는 상품화로 연평균 90억원 매출 실현

### 산림산업의 나노기술 적용사례



#### <휘어지는 종이배터리 개발>

- 나무로부터 휘어지는 종이배터리 제조 원천기술 확보(국립산림과학원)
- 나노섬유 응용 전지용 분리막 개발('14, 국제특허등록)
- 전지폭발 위험방지, 고용량 및 고출력 구현 가능
- 리튬이온전지 세계시장 22조원 규모(웨어러블 전자 기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배터리 등 응용 가능)

### □ (정원산업)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반으로 산업화 유도

#### ○ 정원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초 인프라를 구축

-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운영 및 산업화·연구개발 근거 마련
  - \* 「수목원법」 개정안 시행('15.7 예정) 대비 하위법령 마련
- 정원문화 진흥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
  - \* 정원소재의 생산·유통, 기술·자재개발,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전담

#### ○ 정원문화 확산 등 정원산업의 6차산업화 기반을 조성

- 정원 페스티벌, 가든쇼 등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 '14년 순천만정원 345만명, 코리아 가든쇼 45만명 관람 등 성과거양
  - \* 영국 첼시플라워쇼 매년 1.3억불 수익, 일본 정원동호인 37백만명 등 벤치마킹
- 수목원·식물원(46개소)을 기반으로 정원식물 소재개발 및 상품화 방안 마련
  - \* 희귀·특산식물 증식·이용, 정원소재용품 개발, 정보교류 및 유통기반 구축 등

### □ (자생식물산업) 희귀·특산식물, 야생화 자원의 산업화 추진

#### ○ 잠재가치가 큰 자생식물의 수집·증식·보급으로 이용기반을 마련

- 수집·1차 증식 후 화훼생산자 분양을 통한 유통·판매 지원
  - \*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및 화훼생산단체 협력체계 구축

#### ○ 새로운 디자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자생식물 세밀화를 확대 제작(445점→520점)하고, 희망기업 등에 보급하여 상품화를 추진

- \* BH 사랑채 세밀화 전시 : '14.5월 개장 후 중국 관광객 호평 등으로 1년 연장

## □ (건강산업)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산업화 추진

-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구축
  -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 등록제 신규 도입 및 프로그램 유료화
    -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산림복지서비스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 추진(국립산림과학원)
    - \* 전문업 등록제 운영, 산림치유마을 육성, '산촌유학' 활성화 방안 등
- 건강산업의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 정부 직접고용에서 탈피한 민간위탁형 시범사업(협동조합 등) 실시
  - 산림교육서비스 유료화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공모사업 추진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 국립뿐만 아니라 공·사유 휴양림까지 산지전용신고 의제 확대
    - \* 국·공립 시설 신규조성 지양 및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사유 휴양림 활성화 병행
  - 지자체장도 조성·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지원(개소당 연간 1억원)
  - 개재된 非산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1ha 이내) 등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례



- '13. 4. 20 ~ 10. 20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 세계 각국의 선진 정원문화를 국내에 소개
- 방문자 수 : '13년 440만명 / '14년 345만명
- 지역경제 파급효과('13)
  - 생산유발 1조3천억원, 부가가치 6,790억원
  - 일자리 11천명 창출

#### □ (생산기반) 임산물 산업화 및 소득창출을 위한 전략품목 육성

- 수실류, 관상식물류 등 생산기반 지원으로 임가소득을 증대
  - 밤, 감, 대추, 호두 등 주요 수실류 생산 장비 및 시설 지원
  - 지력이 약화된 재배지에 친환경 관리비(유기질비료 등) 지원
- 미래성장 품목인 산양삼 등 산림약용자원 산업을 육성
  -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품질검사 비용 지원 등 재배자 부담 경감
  - 산양삼 위상 정립을 위한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 조성(53억원)
- 산림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연구개발을 추진
  - 표고버섯 원목·톱밥배지 생산시설 및 우량종균 공급 지원(11억원)
  - 톱밥배지 공급 확대를 위한 남부권 톱밥배지센터 조성(1개소, 30억원)
  - 표고버섯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13~’21)’ 수행

#### □ (소비확대) 지역 특산 임산물의 명품화로 상품가치를 제고

- 지리적표시 확대로 국내 청정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
  - 지리적표시 등록 : (’14년까지) 51 → (’15) 52 → (’17) 60품목
- 지리적표시 품목의 명성·특성을 고려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여 임산물 소비를 촉진

#### □ (소득안정) 재해보험 확대 및 산지은행 도입 등 소득안정성 강화

- 임목보험 도입(’16년)을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시스템을 구축
- 임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추진

## □ (수출기반) FTA시대에 맞는 품목별 수출 전략상품 개발·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상품개발 R&D**를 추진('14~'16)
  - 주요 임산물에 대하여 對 중국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략상품 개발
  - 중·장기적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법 및 유통방안 마련·보급
- **임산물 가공지원 및 수출특화단지 확대**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시설개선 지원('15년 최초 2개소)으로 수출형 명품브랜드 생산 유도
  - 임산물 수출특화 단지 육성 및 공동 수출장비·선별시설 지원

\* '13년 충남 부여(표고) → '14년 충남 청양(표고/밤) → '15년 경북 청도(감)

## □ (해외시장개척) 임산물 수출국 다변화와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진출 희망업체에 대한 **시험수출기회 제공**(마켓테스트) 및 **시장조사·박람회 참가** 등으로 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
  - 해외시장 개척사업 : ('14) 1,028백만원 → ('15) 1,386백만원
- **해외 판촉전 및 주요 바이어 초청·홍보 지원**으로 국산 청정 임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규 거래선을 확보

## □ (수출조직) 체계화된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전문조직 육성

- **수출협의회(5개)**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활성화**
  - \* 품목별 수출협의회(5개) : 밤, 감, 표고버섯, 목재제품, 합판·보드
- 수출 전문업체를 **수출선도조직**으로 육성('15년 2개소 선정)하여 **임가의 지속공급체계를 확립**하고,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강화

## 2.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규제개혁을 통한 농림축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산악관광 등 유망산업 활성화

◇ 정책과제

①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 고밀도개발과 절대보전의 이분법적 산지이용 기준 개선
- 산지 원형과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공법의 개발·보급

②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농림축산업인의 경영 효율성 제고

- 임업경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임업인 소통 강화
- 수원함양보호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 유도
- 산지 내 가축방목과 조사료 파종 등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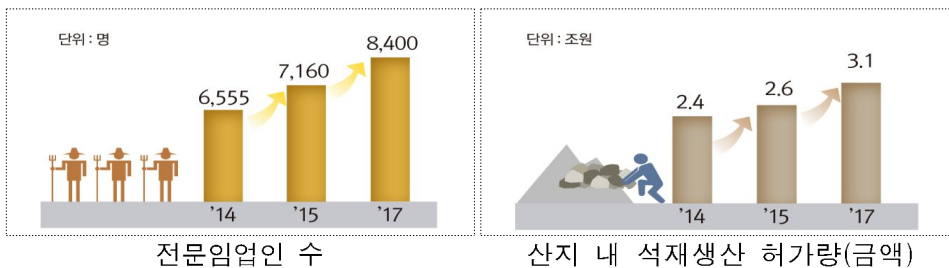
③ 산지구제 개혁을 통한 유망산업 투자 촉진

- 토석채취지 내 외부토석 반입 허용 등 석재산업 육성 제도 정비
-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평균 경사도 제한 완화로 투자 활성화

④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산악관광 특구법」 제정을 통한 산악관광 제도화 추진
- 평창(대관령) 동계올림픽 특구를 활용한 산악관광 모델 창출
- 산림복지시설·트레일 등과 연계한 산악관광 네트워크 구축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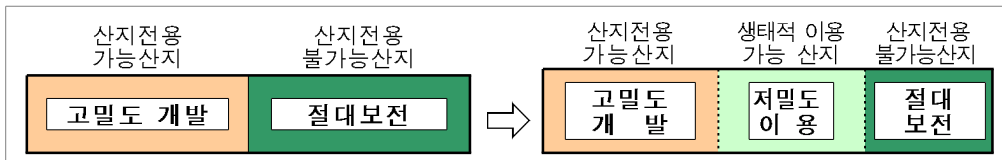
1

산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 (생태적 산지이용)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진

- 고밀도 개발과 절대보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을 추진
  - 평지화된 개발보다 율형을 최대한 존치하고, 경관을 고려한 저층건물·목조주택 등 친환경 소재 및 공법 활용
- 획일적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 벗어나 산림재해 안정성 등 지형조건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을 마련
  - \* 적용범위 : (현행) 「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에 따른 일부 산지 → (개선) 산림복지단지, 산악관광특구 내 시설 및 산지 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

<생태적 산지이용의 개념>



- 자연친화적인 복구를 위해 산림기술자의 설계·감리 참여를 제도화하고, 복구설계서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

□ (계획적 산지이용) 산지관리 계획에 따른 산지이용 추진

- 산지관리 기본·지역계획에 반영된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에 따른 계획적 전용허가를 실시
  - \* 산지경관 관리체계 개발('13~'15), 산줄기연결망 체계구축('13~'16) 연구추진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추진
  - \* ('15년) 산지구분타당성 시범사업 → ('16~'17년)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17개 시·도) → ('18년) 산지구분도 작성·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반영

### □ (임업인)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 추진

- 청정 임산물 재배에 적용되는 산지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등 서류 작성에 따른 비용·시간적 부담 완화(임업인·단체 주요 민원사항)
  - 재배면적 제한(5만㎡ 미만) 폐지로 임업경영의 규모화 유도
- 임업인 간담회, 국민공모제, 규제개혁신문고, 소통·체감 100℃ 등 임업인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채널을 다각화
- 기 규제개선 사항의 조기 현장 정착과 임업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현장 홍보·점검을 실시

### □ (농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 대표적 보호지역인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의 61%) 내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을 허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법」 개정 추진(농식품부 협조)

### □ (축산업인)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속 추진

- 농림어업인·법인의 요존(要存)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허용
- 임간(林間) 방목지 내 조사료 파종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를 신고로 완화하여 축산업인의 부담을 완화

\* 현재는 조사료 파종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초지조성허가)가 의무화

### □ (석재산업) 산지 내 토석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석재 가공장비의 가동률을 제고(석재산업계 주요 건의사항)
- 체계적인 산업지원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석재 채취·가공단지 조성, 인력양성, 창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규정
  - \* ('13년) 토석채취허가 184건 578만㎡, (연간 생산액) 1조원으로 임산물 중 최대

### □ (개발제한)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규제개선

- 산지 개발을 저해하는 **연접개발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
  - 선(先) 개발자 선점 시 주변지역 추가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 해소
  -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지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기존허가 면적을 합산하여 3만㎡ 이상일 경우 전용 제한(국토계획법상 동일규제는 '11년 폐지)
- 산지 내 개발사업 허가에 필요한 도로 관련 규제를 완화
  - 「도로법」 및 「사도법」 상 법정도로 이외에 현황도로까지 추가 허용

### □ (기타규제) 경사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부담금 감면 추진

- 구역 등의 협의 시 산지의 **평균경사도**에 대해 검토를 받은 경우, 실시계획 협의(허가)시에는 추가 검토대상에서 제외
  - 구역 협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불허되는 문제점 해소
- 공용·공공용시설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을 확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용시설에 대한 감면 확대

4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제도정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산악관광 제도화 추진

○ 「산악관광 특구법」 제정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문체부 주관, 산림청 등 협조)

- 기존의 경사도·표고 제한은 완화하되, 재해에 안전한 산악관광 시설 입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 평창(대관령) 올림픽 특구 내 수목원 조성 등과 연계한 신규 산악관광모델 창출

○ 산림 내 캠핑·레포츠 관련 규제개선으로 관광자원을 확충

- 산림 내 캠핑 수요 충족을 위한 숲속야영장 및 산악승마, 패러 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 (시설연계) 산림복지시설·트레일 등을 산악관광과 연계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프로그램을 산악관광 자원으로 활용

- 출생~청년기 : 숲대교, 교육·레포츠 등과 연계한 체험형 산악관광

- 장년~노년기 : 산림휴양·치유 등과 연계한 탐방형 산악관광

○ 5대 트레일·명산 둘레길과 연계한 산악관광 네트워크화를 추진

국가트레킹길 구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걷기문화 창출을 위한 전국을 잇는 트레킹길 네트워크 추진(7,614km)</li> <li>• 한반도 숲길의 핵심축인 5대 트레일과 5대 대표 명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국가 트레킹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트레일 : 백두대간·DMZ·낙동정맥·서부종단·남부횡단</li> <li>* 5대 둘레길 : 설악·속리·덕유·지리·한라산</li> </ul> </li> </ul>

○ 6차 산업화 단지(임산물 생산·유통 및 체험단지)와 연계로 지역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 소득제고에 기여

### 3. 재해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과학적 산림재해 방지 체계(SPS, Smart Protection System)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 정책과제

##### ① 산불예방 및 대응 체계 고도화

- 산불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
-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제’ 및 ‘기계화진화대’ 운영

##### ②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ICT 기반의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 증진
- 생활권 사방사업 확대 및 부처 간 공동 예방·대응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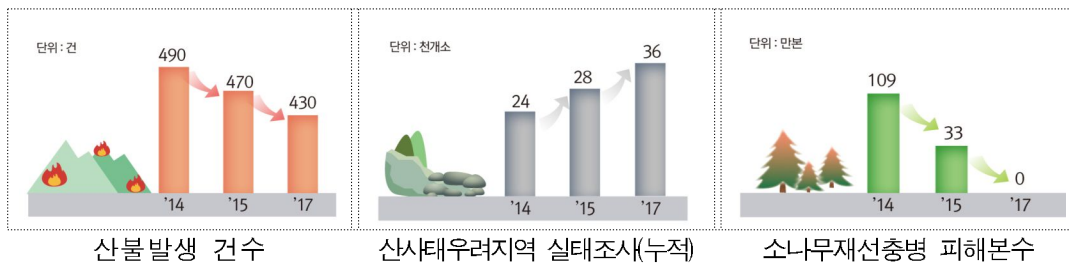
##### ③ 과학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재선충병 피해지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예찰 시범사업 추진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페로몬트랩 등 방제 기술 다양화
- 참나무시들음병 부처 간 공동방제 및 나무의사 제도 신설

##### ④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휴양시설의 4단계 안점점검 및 노후시설의 선제적 정비 추진
- 재난대비 시설 보완 및 휴양림 직원·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 ◇ 기대효과



## □ (예방·감시)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기능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황관리 및 예방대책을 시행
  - 지역·시간대별 분석결과에 따른 감시인력의 효율적 배치 실시
    - \* 지역별 : (남부권) 1~4월, (중부권) 2~4월, (북부권) 3~4월
  - 불법소각 단속 강화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100개 → 200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효율적인 입산 관리와 산불방지지설의 적지적소 설치를 추진
  - 네이버·다음지도 등 등산로 개방구간 대국민 서비스 확대
    - \* 관리 가능한 등산로는 최대한 개방하고, 통제구간(7천km)은 단속을 강화
  - 산불예방·사후감식이 가능한 밀착형 감시카메라(19개소) 및 주요 대상물 보호를 위한 산불소화시설(18개소) 확충

## □ (진화)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 ‘골든타임’(30분내 현장 도착) 강화를 위해 헬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전국 격납고(11개)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 수시 이동 배치
  - 대형산불 확산 시 유관기관 헬기(소방 25, 군 21) 조기 지원 및 임차헬기(49대)의 인접 지자체간 진화 지원 활성화
- 지자체·관리소별 초동진화 전담 ‘기계화진화대’(193대)를 운영
  - 야간산불 발생 및 산불 확산 시 ‘광역특수진화대’(6대) 지원
  - 진화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지역단위 진화경연대회 실시

□ (예방·대응) 산사태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거주자 실태 DB 구축 등 집중관리
  - \* 실태조사 : ('14까지) 24,000 → ('15까지) 27,500 → ('17까지) 36,000개소
  -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현장예방단 확충으로 취약지역 점검 등 예방 조치를 강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 ('14) 50개단, 200명 → ('15) 88개단, 352명
-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도 증진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확충
  - ICT 기반의 산사태 발생 예측을 위한 산림지반특성지도 시범 제작

□ (사방사업) 산사태 재해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역에 사방 사업을 우선 시행하여 재해예방 효과성 제고

-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사업을 우선 추진
  - 사방댐/계류보전 : ('14) 916개소/589km → ('15) 895개소/584km
-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
  - 도로변 산사태우려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 추진
  - \*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하여 고속도로변(64개소), 국도변(9개소) 산사태 재해예방
  - 민북지역 군사시설 주변 산사태 재해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추진
- 전문가 현장지원 확대로 사방사업의 안전성·환경성을 강화
  - 산사태 원인조사, 설계·시공 기술지문 등을 위한 현장지문단 구성·운영
  - \* 사방구조물의 안전성 및 경관·환경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사방사업 확대

- (재선충병 방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방제현장 품질관리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기반 구축
  - 항공예찰(무인항공기 활용) 등으로 피해지역을 조기에 발견
  - 매개충 우화기 이전 피해고사목을 진량 제거하고, 방제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방제품질을 제고
    - 사업장별 중복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실사업 원천 차단
    - \* 감시체계 : 상시감독관 / 현장특임관 / 지역담당관 / 책임담당관 / 외부 모니터링
  - 방제기술을 혁신하고, 피해고사목의 재활용을 촉진
    - 페로몬 트랩 실용화(1천ha), 천적 개발, 불임 매개충 방사 연구 강화
    - 고사목 처리방식을 개선(훈증→파쇄 후 펠릿 제조)하고, 대량 훈증 시설을 설치(3개소)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재목으로 활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 책임을 강화
    - 책임방제 개념, 방제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신설
- (일반병해충 방제) 생활권 주변, 등산로 등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 방제로 피해 확산 저지
  - 부처 간 공동방제로 수도권지역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을 저지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솔잎혹파리 방제로 산림경관을 보호
  - 지속적인 임업적 방제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를 유지
    -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종합방제 사업 지속 추진
  -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강화 및 나무의사 제도 신설 등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



#### □ (예방강화) 산림휴양시설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 안전점검 관리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점검을 실시
  - 표준화된 점검표에 따라 4단계(매일, 월별, 반기, 특별점검) 점검
-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의무화하여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
  - 연 2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미흡·개선점은 즉시 보완
- 수질검사 강화로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제공
  - 음용수는 연 4회, 물놀이장 등 생활용수는 연 2회 검사 실시
- 시설물 정밀진단, 보완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노후시설을 정비
  - (국립) 목조건축물(37개소) 정밀진단·보완, (공·사유) 산사태, 산불 등 복합재해 모니터링 실시(18개소)

#### □ (신규제도)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숲속야영장·치유의 숲 등의 시설·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
- 안전관련 시설기준 마련에 따른 각종 안전 보완사항을 추진
  - 재난경보(방송)시설, 숙박시설 내 소화·피난 설비, 비상대피시설 등
  - 지자체, 사유시설별 현황 파악,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
  - 권역별 교육 실시(상반기), 휴양림 별 자체 직원·이용자 교육 등

## 4.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

###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복지 증진

◇ 정책과제

①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 유아숲체험원 등 유아 전문 산림교육 공간 및 전문가 양성 확대
- 산림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산림교육 다양화를 위한 부처협업 증진

② 청·장년층의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

- 자연휴양림 등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계층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숲길DB 구축·개방 및 권역별 레포츠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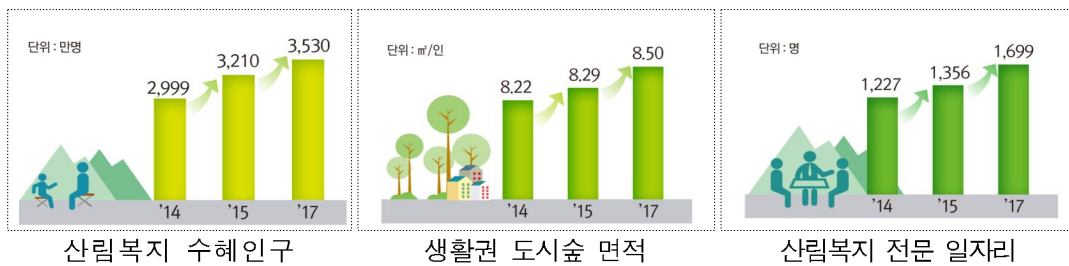
③ 노년·회년기 산림치유·수목장 확산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소외계층·스트레스 직군을 위한 특화된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를 위한 수목장 확대 및 홍보 강화

④ 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 도시숲, 가로수 등 생활권 녹색공간 및 우리꽃 무궁화 확대 보급
-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의 확대 전개

◇ 기대효과



1

**유아청소년의 산림체험·교육 강화**

□ (유아숲교육) 유아 전문 산림교육 공간과 전문가 양성 확대

○ 유아의 창의성과 오감발달을 위한 체험·놀이·교육 공간으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을 대폭 확대

- 유아숲체험원 조성 수 : (‘14까지) 23개소 → (‘15까지) 58개소
- 유아숲교육 수혜 인원 : (‘14) 63만명 → (‘15) 80만명

○ 숲과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융합시킨 유아숲지도사를 확대

- 유아숲지도사 양성 : (‘14까지) 350명 → (‘15까지) 710명

□ (산림교육) 산림교육 역량 강화 및 협업사업 확대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확대하고, 숲해설가의 전문성을 제고

- 프로그램 인증 : (‘14까지) 18개 프로그램 → (‘15까지) 50개
- 숲해설 경진대회, 숲해설가 보수교육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 산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

- 교육부(자유학기제), 여성가족부(방과후 아카데미), 법무부(보호 관찰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등

산림교육 추진 사례



유아숲체험원(천보산)



유아숲교육



산림교육(학교폭력 학생 대상)

## □ (산림휴양)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 휴양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

- 휴양림(6), 산림욕장(4), 숲속야영장(1), 바이오휴양벨리(3개소) 등
- 요우커 등을 위한 맞춤형 시설 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평창올림픽 연계)

### ○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

- 숲속야영장, 레포트 시설의 정의, 타당성 평가·인증제·체험료 도입
- ‘제대로, 그대로’ 올바른 휴양문화 캠페인을 전개

\* ‘제대로, 그대로’ : 산림은 있는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 즐기자는 대국민 캠페인

### ○ 소외계층을 배려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보완 등
- \* 바우처 : 저소득층 가족에게 산림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권(약 15만원) 제공

## □ (숲길·레포트)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레포트 기반 강화

### ○ 전국 숲길 DB 구축·개방으로 이용객을 위한 열린 플랫폼을 마련

- 구간별 숲길 정보 활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산업화 유도
- \*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사업’으로 ‘17년까지 전국 숲길 DB구축·개방 완료
- 향후, 숲길 통합정보(지도·교통·숙박 등) 모바일화(‘코리아모빌리티’) 추진
- \* 주변지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숲해설가 등산카이드 등) 창출효과 기대
- \*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모빌리티’ 가동(’08) 이후 트레킹 인구 매년 15% 증가

### ○ 산림레포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등산학교 설치를 추진

- 오리엔티어링, 산악스키·승마·마라톤·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등
- 국가 차원의 건전한 산행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 □ (산림치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 산림치유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 치유의 숲 : ('14까지) 8개소 → ('15까지) 13개소
    - \*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10~'15, 1,413억원 / 영주·예천)
    -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300명) 및 민간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건강인/준환자, 장애인/비장애인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12만명)
- 소외계층·스트레스 직군에 특화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
  - 관련 부처와 민간 협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프로그램 품질 향상
    - \* 소외계층(다문화가정·탈북주민·요보호 아동), 스트레스직군(시방역·소방·경찰 등)

### □ (수목장) 수목장림 확대 등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선도

- 국·공립 수목장림을 확대하고, 사립 수목장림 조성을 지원
  - 국립 수목장림 신규 조성(중부권), 공립 수목장림 신규 조성(보령시)
- 각종 규제완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로 수목장을 활성화
  -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의제처리 규정 마련
  - 지도층 참여유도, 임업 유공자 묘역 마련 등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산림치유·수목장 추진 사례



치유의 숲(경기 양평)



도시민을 위한 산림치유



국립수목장림(히늘숲추모원)

**4****도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인프라 확충****□ (인프라) 도시 생활권내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

- 도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생활권 녹색공간을 제공
  - 도시숲(224개소), 명상숲(106개소), 가로수(631km) 조성·확대
- 교육부 등과 협업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를 확대 보급
  - 생활권 무궁화 동산 조성(11개소), 학교 무궁화 보급(318개교)
- 전통 마을숲을 복원하고, 지역특화형 산림경관숲을 시범조성
  - 전통 마을숲 복원(8개소), 복합경관숲 조성(2개소)

**□ (도시녹화운동) 시민·기업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확산**

- 도시숲 조성의 시민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
  - 금호강 생활숲(대구시민의 숲) 신규 조성(10억원)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도시녹화운동 참여 확대
  - 기업·지자체·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 조성(10개소)
  - 시민단체·기업이 참여한 학교숲 조성(8개교)
  - \* 대표사례 : 울산대공원(SK), 대전 유림공원(계룡건설), 학교숲(삼성화재) 등
- 도시녹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시숲트러스트를 구성·운영

**도시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사례**

도시숲(서울)



학교숲(인천)



가로수(아산)

## 5. 국제사회의 그린리더십 구현

###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그린데탕트 구현 및 글로벌 시대의 산림협력 주도

◇ 정책과제

#### ①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 종자교류, 산림병해충 방제 등 민간단체의 소규모 협력사업 지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 개발 및 남북 산림과학자 간 공동연구 추진
- ‘복합농촌단지·그린데탕트 협의회’ 및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운영 활성화
- 북한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및 대북 종자 지원용 양묘장 추가 조성

#### ②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 해외투자 컨설팅 강화 및 목재바이오매스 조립 시범사업 모델 개발 추진
- 기업·국제기구 해외인턴 확대 및 양자협력 국가별 특성화 의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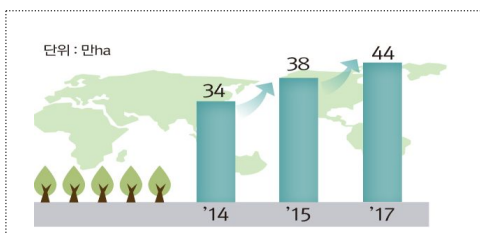
#### ③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정상간 합의 의제 이행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 설립
- 한국형 산림복지숲(녹색한류 新모델) 개발 및 사막화 방지 등 ODA 강화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및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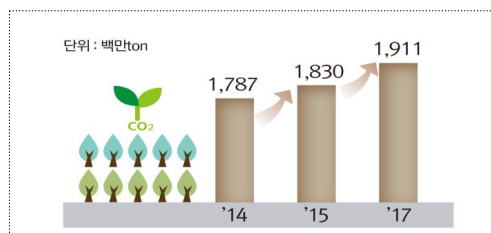
#### ④ 기후변화 시대의 선도적 대응 역할 수행

- 제1차 탄소흡수원 종합계획 이행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 한국형 REDD+ 모델 정립 및 GCF, GGGI와 연계한 산림사업 추진

◇ 기대효과



해외 조림면적



산림의 CO<sub>2</sub> 저장량

## □ (협력사업) 조기 실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도출

- 신뢰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 소규모 사업을 우선 추진
  - 초기에는 종자교류,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임농복합경영 등 시범조림과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
- 안정적 사업을 위한 FAO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개발·추진
  - 북한 산림 공무원 등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
  -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산림조사사업 등 신규사업을 개발
    - \* 산림청-FAO 협력사업 : 아시아(북한) 기후변화 능력배양 사업('09~'16)
- 남북한 과학자간 **학술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연구**를 추진
  - \* 한반도 수목도감 발간, 통일나무(남북 수목간 교잡육종) 개발 등

## □ (추진기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유관부처, 민간단체 등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통일부, 농식품부 등과 '복합농촌단지·그린데탕트' 협의회 운영
  -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과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간단체 사업 지원 및 협력사업 발굴·구체화
- 북한 산림 **황폐화** 및 **산림재해** 발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북한 산림관련 **최신자료**를 수집하여 **DB** 구축
- 대북지원용 **종자·묘목을 비축**하고, **양묘장을 추가 조성**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북용 종자 20톤, 묘목 15만본 확보
    - \* 지원종자 : 낙엽송, 잣, 오리, 아까시, 싸리, 물푸레나무 등
    - \* 지원묘목 : 낙엽송, 잣, 밤,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오리, 싸리나무 등
  - 기후·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대북지원 양묘장 조사·설계 추진



## 2

## 해외 산림자원 개발·확보

### □ (자원개발)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에 대비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반 조성

- 해외 산림자원개발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유망국가 발굴을 위한 정보 서비스, 컨설팅 강화 및 바이오매스 조립사업 모델개발 등 해외 산림 투자업체 지원을 강화
  - 해외투자설명회 개최(2회), 투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개편
  - 목재바이오매스 조립시범사업 모델 개발 추진(인도네시아)
    - \* ('13~'15) 시범조립 → ('16) 사업모델 보급 → ('24) 민간 투자 확대(2만ha)

### □ (해외인턴) 해외산림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 내실화

- 국제산림협력 전문가 양성을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
  - FAO, ITTO, 몽골사업단 등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 파견확대
- 기업수요에 맞는 인턴-기업 맞춤형 채용으로 취업률을 제고

### □ (양자협력) 협력국가별 맞춤형 관리와 특성화 의제 개발

- 맞춤형 양자산림협력 활성화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
  - 필리핀 양묘장 조성, 중국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에콰도르 산림복구 등

#### 해외산림자원 개발·협력 사례



해외조림 시범사업(인도네시아)



해외인턴 발대식



한·캐나다 산림협력 MOU

- (합의이행) 정상합의 이행으로 국익제고 및 국제사회 기여
  -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인도네시아), 목조건축 및 대형 산불 방지 기술교류(캐나다), 녹색산촌 복원사업(베트남) 등을 이행
  - 아스타나 우호의 숲 조성과 아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카자흐스탄) 추진으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에 기여
    - \* 아랄해 : 90%가 고갈된 세계 4대 내륙호수로 환경재앙의 대표적 사례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4.12) 합의에 따라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로 확대 설립
- (지구녹화선도)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 산림복원 및 사막화방지 지원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14.10 CBD 총회시 채택) 이행을 위해 CBD 사무국과 MOU를 체결하고, 액션플랜을 수립
  - FAO의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산림황폐지 경관복원 대상국가 선정 및 이행
  - UNCCD 및 UNEP 등과 함께 추진하는 건조지 녹화파트너십(GDP)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7→10개국)
  - 동북아 황사피해 저감 및 사막화방지를 위하여 한-몽그린벨트 프로젝트 및 중국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지속 추진
    - \* 한국·중국·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DLDD(사막화, 토지황폐화 및 가뭄)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공적개발원조) 맞춤형 녹색 ODA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산림복원을 대표 협력브랜드로 구체화하고, 한국형 산림복지숲을 녹색한류 新모델로 개발

\* 한국형 산림복지숲 : 생애주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휴양 모델

- 민-관, 관-관, KOICA 협력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발굴하고 내실있게 추진

□ (국제회의)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및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유치로 국제사회 그린리더로서의 국격을 제고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를 통해 산불 방지 및 진화 기술을 공유하고, 산불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

\* 제6차 세계산불총회 : '15.10.12~16, 평창 알펜시아, 80개국 3천여명 참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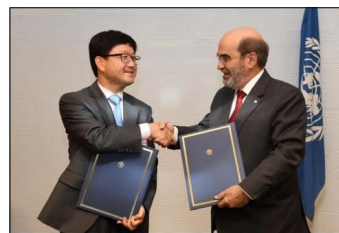
-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이자 산림정책 및 기술을 공유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15th World Forestry Congress, 2021)를 유치

\* FAO 공동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되며, '15년 제14차 총회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140개국, 1만명 참석 예상)

국제기구 등을 통한 산림협력



2014 한-아세안 특별산림 장관 회의 ('14.12월, 부산)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이행합의 ('14.6월, 로마)



몽골 그린벨트사업 조림지 (문شم, 몽골)

#### □ (기후변화)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적극 활용

-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20년 산림탄소 순흡수량 3천만톤 확보를 위한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15~'19)을 이행
  - 탄소흡수원 확대 등 6대 중점과제 및 22개 세부 과제 추진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로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
  -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산림탄소관리사 자격 도입 추진
- 산림분야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이행('15.12)
  - 제1차 적응대책 평가 및 환류, 신규 과제 발굴 등 추진

#### □ (탄소배출권) 개발도상국의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을 통해 탄소배출권 선점 기반을 마련

- 동남아 4대 중점협력국가와 REDD+<sup>2)</sup> 공동시범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한국형 REDD+ 모델을 정립
  - 인도네시아 최초 REDD+/산림경영계획구 도입
  - 캄보디아(6만ha), 미얀마(4만ha)의 현지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통해 동남아 REDD+ 사업기반 확산
  - \* 동남아 4대 중점협력국가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개도국과의 상호이익에 기반한 사업 추진
  - 기후변화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협력
  - 개도국 공적개발원조와 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연계한 사업 진행

2)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lus) :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 6.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 정책 개요

◇ 정책목표 :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관리

◇ 정책과제

① 산림자원 육성·관리체계 선진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한국형 산림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 종자채취에서 벌채까지 산림사업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마련
- 임도·기계·기능인 등 산림산업의 기반이 되는 SOC 확충

② ICT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 체계 구현

- Post 2020 체제에 대비한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Smart Protection System’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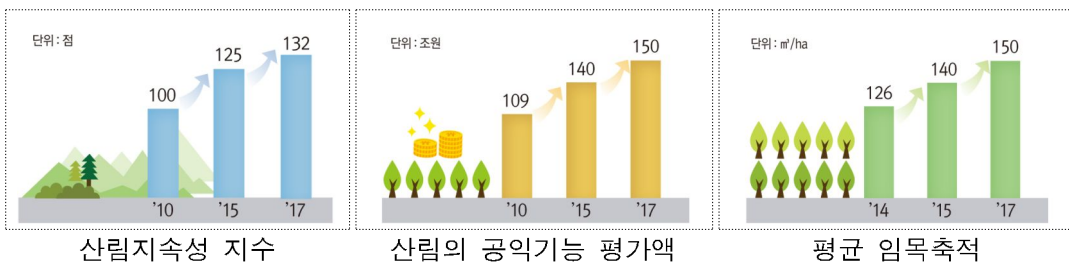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기후변화취약종 모니터링 및 백두대간·DMZ 훼손지 복원 실시
- 기후·식생대별 산림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수목원 조성 추진

④ 산업활동과 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R&D 활성화

- 임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임산물 신제품종과 관리기술 보급 확대
- 목재수확 효율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추진
- 산림치유의 건강증진 효과 규명 및 산림재해 정보화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산림지속성 지수 : 산림면적 증감, 생물종 다양성 등을 토대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계량화한 지표

### □ (산림경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위해 **한국형 산림인증제를 도입**
  - 한국산림인증위원회('15.1 출범)를 통한 인증표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 산림기능구분도('14년 제작)를 활용한 **기능별 산림관리를 실시**
  - 산림기능을 고려한 지역단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산림사업 설계
    - \* 6대기능 : 목재생산, 수원함양, 생활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 산림휴양, 재해방지
  -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조림을 위한 맞춤형 조림지도 고도화
- 「**경제림육성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8개소, 10년간) 운영으로 수익성 창출을 위한 **경영모델을 창출**
  - 목재생산 잠재력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재설계(450개 단지 292만ha)
  -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의 내실화 추진
    - \* 선도 산림경영단지 : ('14) 흥천, 진안, 보성 → ('15) 울주, 삼척, 홍성, 순천, 거창

### □ (산림사업) 종자채취부터 목재생산까지 통합적 사업관리 구현

- 목재생산·조림 계획(3년)과 연계한 **종묘생산**을 추진(48백만본)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정비 및 2세대 채종원 조성
  - 자연재해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5개소)
- 경제수종 조림을 확대하고(22천ha), **조림지 관리를 강화**
  -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은 낙엽송·편백 등 경제수종으로 교체
  - 풀베기 설계·감리 도입으로 조림목 활착율 제고 및 피해방지
- 현장 여건에 맞게 **숲가꾸기를 내실화**하고(222천ha), **사업품질을 제고**
  - 사유림 설계·감리 확대(47→100%) 및 외부 모니터링 강화

□ (국유림) 산림의 공익가치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국가관리 강화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백두대간, 꽃자왈 등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사유림 매수
-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유림 내 보호구역 관리 강화

○ 국유림을 장기·안정적인 우량목재 생산의 전진기지로 활용

- 「경제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목재생산을 위한 집중관리 구역 설정
- 국유림 경영계획구의 DB화를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유림 관리체계를 구축

- 지역별 국유림관리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 국유림 대부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유도

□ (산림 SOC) 임도 등 기반확충으로 생산비용 절감

○ 경제림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을 확충

- 임도시설(809km), 구조개량(306km), 유지보수(4,324km)

\* 임도 밀도(m/ha) : 한국 3, 독일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 지역 실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와 작업시스템을 개발·보급

- 대경목 생산용 기계장비 보급(60대) 및 전목집재 시스템의 단계적 확대

○ 산림작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임업기능인력 교육훈련을 강화

- 임업기계 상설 교육장 조성(5개소) 및 현장 방문형 안전교육 과정 신설

임도시설 활용 사례



목재생산(기계화 산물수집)

산림재해 예방(산불진화)

생태관광·레포츠(산악자전거)

## □ (산림관리) ‘Post 2020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국가산림 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

### ○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15~’19)\*을 수립·이행

\* 국·공·사유림을 아우르는 국가산림 정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 산림토목, 국유재산 업무 등 ‘국유림 정보화 체계’를 고도화

- 시범검증을 거쳐 공·사유림으로 통합관리체계를 확대 추진

\* (’15) 국유림 정보화 방안 마련 및 고도화 착수 → (’16) 공·사유림 확산을 위한 시범검증 실시(8개 시·군) → (’17) 국유림 완성 및 사유림 착수

## □ (재해관리) ICT를 활용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확산

### ○ 산불 예측·진화정보를 포함한 산불관제시스템 통합운영 체계 및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을 구축

### ○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과 연계(국민안전처 협업)하여 국가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고, 지자체 확산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

\* (’15)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연계 및 지자체 확산 → (’16) 오픈 API를 통한 민간 서비스 확대 → (’17) 위성정보 등을 활용한 예측 강화

## □ (스마트현장) 미래정보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산림관리체계를 확산

### ○ ‘종이없는 현장업무’ 실현을 위해 스마트야장·모바일기기를 확대 보급(1인 1대)하여 스마트한 산림관리를 구현

- 사물인터넷(IoT), 음성인식 등 최신 ICT와 융·복합한 앱(App) 개발

### ○ 현장 어디서든지 즉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기반의 원격업무처리시스템(온나라, e-푸른샘, 현장모바일)을 구축



### 3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생태계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적응력을 강화하고, 백두대간·DMZ 산림생태계의 영속성 및 보전가치를 극대화
  -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을 통해 식재가능 Zone Map 및 개화예측지도를 작성
    - \* 희귀·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
  - 백두대간·DMZ일원 훼손지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
    - 백두대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R)으로 등재 추진
    - DMZ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고성, 양구)로 DMZ 산림관리의 전초기지화
- (수목원) 기후 및 식생대별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국가수목원 조성 추진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기반을 구축
    -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09~'15, 2,200억원 / 경북 봉화
  - (온대중·남부)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및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
    - \* 국립중앙수목원 : '12~'20, 1,374억원 / 세종특별자치시
  - (서부·해안) 새만금수목원의 예비타당성 심사('15.2)에 대응
    - \* 국립새만금수목원 : '16~'25, 5,874억원 / 전북 새만금

### 기후·식생대별 수목원



백두대간 수목원(공사현장)



중앙수목원 내 전통정원(조감도)



새만금수목원(조감도)

#### □ (신소득창출) 임업인·산주·산업계 수요에 맞는 R&D 추진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신품종과 관리기술을 개발·보급**
  - 밤나무 ‘대광’, 표고 ‘백화향’, 헛개나무 ‘풍성1호’ 등 우수품종에 대한 경영임가 보급·확대(’14년 48품종 → ’15년 55품종)
  -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학적 재배관리기술과 과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확 후 관리기술 중점 연구 실시
- 임가유형·지역특성에 맞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14~’18)
  - 수실류·약용류·버섯류 등 신(新)소득 품목 및 재배기술 개발
  - 산림 내 서식하는 약용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연구 추진

#### □ (기술사업화) 목질자원의 가치 증진 및 재활용 기술 육성

- 국산 목재의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현장 적용기술 확보 추진
  - 대형 목구조 건축용 고강도 부재 및 구조시스템 개발(’15~’18) 및 관공서와 평창동계올림픽 목조경기장 등에 활용
  - 목질자원 열분해에 의한 바이오오일·반탄화 고체연료 성능 개선
    - \* 바이오오일 3.6%(5,600→5,800kcal/kg)·반탄화펠릿 6.0% 향상(5,000→5,300kcal/kg)
- 국산 소경목 **제재 기술 및 MDF 재활용 기술 연구**를 추진
  - 폐MDF 보드의 재활용을 위한 목질섬유 섬유분리기술 개발
  - 국산 소경재 효율 증진을 위한 단목제재 시스템 마련

## □ (자원효율화) 산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현장기술 개발

-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축산조사료 제조기술**을 연구(농식품부 협업)
  - 축산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질조사료 시제품 생산
  - 목질조사료 제조기술 표준화 및 대량생산·유통시스템 마련
- 산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자원 육성·생산시스템**을 구축
  - 탄소흡수원 등 산림기능의 최적발휘를 위한 산림 공익기능별 맞춤형 관리기술(Best Management Practice) 개발('15~'17)
  - 목재수확 비용절감 및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시스템 개선 및 한국지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 \* 벌채·집재 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 ('14) 25m<sup>3</sup>/인·일 → ('15) 3.5m<sup>3</sup>/인·일)

## □ (정책지원) 산림치유, 산림재해 등 정책현안 지원 강화

- **산림치유의 건강증진 효과규명**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
  - 민·관·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치유연구 네트워크 구축
  - 임학·의학 등 다학제 참여를 통한 산림치유의 보험화 방안 연구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
  - 산악기상관측망 확대(90→120개)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측력 향상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대응기술, 대국민 행동요령 등 경계피난 시스템 개발('15~'17)
  - 천적 개발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친환경적 방제법 연구 및 피해목 자원화를 위한 이동식 열처리기 및 컨테이너 소독기술 개발·보급

## 7. 개방과 소통의 행정 구현

### 1 정부 3.0

- (서비스 정부)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임업인·산주 등이 받아야 할 주요 서비스는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하여** 정보 부족에 따른 서비스 소외 사례를 방지
  - 소외계층 대상 산림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산촌주민, 고령자 등의 산림관련 **생활불편을 사전에 해소**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산림 패트롤」 운영
  -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도입**하여 산림행정 서비스 혁신
  
- (유능한 정부) 지식기반의 과학적·선제적 행정 구현
  - 산림지식 **범정부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행정**을 확대
  - 다른 부처와의 **협업지도를** 구축하고,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협업과제**를 발굴·추진
    - 산림재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업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 우선 발굴
  -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ICT 활용**으로 **재난대응력**을 강화
    - 산불, 산사태 등 빅데이터 기반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투명한 정부) 수요자 중심의 원천정보·데이터 개방
  -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천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 민간활용 효과가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개방('17까지 57종)하고,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적극 지원

## 2

### 비정상의 정상화

- (불법행위) 불법산지훼손 및 면세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ICT를 활용하여 불법 산지훼손(연 2,300여건)을 효율적으로 감시·단속
  - 보조사업 DB화 및 부처 간 시스템 연계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
- (임업인) 산림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과제 추가 발굴·이행
  - 산림산업계와의 협의·소통으로 신규과제의 공동발굴을 추진
    - 임업단체장, 목재산업총연합회, 분야별 생산자협회 등 활용
  - ‘산림청 정상화 추진 협의회’ 운영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독려

## 3

### 공공기관 개혁

- (공공기관 경영혁신) 사업방식 개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 신사업 모델 개발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으로 경영을 효율화
    - (녹색사업단)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사업 모델을 개발
    - (임업진흥원) 현장지원 강화 및 위탁사업의 자체수행비율 제고
  - 기관별 경영목표 및 경영계획에 따른 책임 경영을 지원
    -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해 경영성과 제고
- (산림조합) 채용·인사제도 합리화 및 경영역량 강화
  - 외부위탁을 통한 공개채용 활성화로 인사제도를 투명화
    - 인사추천위원회 역할 강화 및 감사제도 개편 병행
  - 전문경영분야의 인력을 채용하고, 성과관리제를 도입·시행



## V. 주요 정책 현안

1.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2. 봄철 산불방지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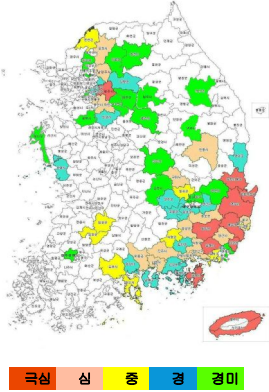
# 1.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

## 1 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 현황

□ (피해현황)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05년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급격히 확산

- 이상고온 등 기후적 영향으로 매개충 활동 시기가 길어져 재선충병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
- 전국 74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14.12)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피해고사목 약 109만본 발생이 예측(전년 대비 50%)

\* '14년 12월 기준, 피해고사목 89만본 발생



□ (방제현황)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을 수립('14.11)하고, 예비비 배정, 특별 이동단속 등 방제에 총력 대응

- '14년 방제예산(예비비 등 113억원 배정) 및 방제인력(2천명/일)을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고사목 방제작업을 추진

\* '14년 12월 기준 방제 진도율 : (발생) 89만본 → (방제) 37만본(41%)

- 매개충 밀도 감소를 위해 항공방제를 확대(3→5회)하고, 인위적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

\*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10.21~11.10)으로 총 44건 위반사례 적발 조치

- '15년 방제예산(국비 480억원) 조기 배정 및 방제인력 집중으로 매개충 우화기(4월말) 이전까지 고사목을 전량 방제할 계획

- 신속한 방제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14.12, 399억원)

◆ 시기별 맞춤형 방제전략 추진 및 방제품질 확보를 통해  
'15년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감소

- 피해본수(만본) : ('13) 218 → ('14) 109 → ('15) 33 → ('17) 0

### □ (1~4월)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품질 향상

○ 지역별로 매개충 우화기 이전에 피해고사목을 전량 방제

- 안정적인 방제인력을 확보하여 1일 4~5천명의 인력 투입

- 피해 극심지역은 모두베기(수종갱신) 등 차별화된 방법 적용

\* 매개충별 방제 완료 시기 : 북방수염하늘소 3월말, 솔수염하늘소 4월말

○ 책임방제·감리를 도입하여 현장관리 강화 및 방제품질 제고

- 지역별 책임방제구역 설정 및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 부여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현장특임관 운영, 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기능 대폭 강화

### □ (5~8월) 매개충 살충을 위한 항공방제 및 친환경 방제 실행

○ 선단지~피해 중심부까지 항공방제를 확대(2→5만ha)하고,  
주택가·양봉농가 등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은 지상방제 실행

○ 폐로몬 물질로 매개충 유인·포획 등 친환경적 방제 실용화

\* 천적 개발, 불임 매개충 방사 등 새로운 방제기술 연구·적용 병행

### □ (9~12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및 예방 나무주사 실시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등으로 인위적 확산을 저지

○ 문화재 등 중요지역에 대한 예방 나무주사를 확대(12~2월)

○ 하반기 재발생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방제작업을 추진

## 2. 봄철 산불방지 대책

### 1. 금년도 봄철 산불 전망

- 따뜻한 날씨와 재선충병 방제로 산불 대응여건은 불리
  - 1월부터 따뜻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예상되어(기상청 장기예보) 산불위험이 높고, 재선충병 방제로 현장 대응역량 분산 우려
  - \* 봄철 산불발생('14기준) : 연간 발생건수의 88%, 피해면적의 94%를 차지

### 2.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사전대비 철저
  - 산불감시인력(23천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316개)하여 위험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
  - 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 운영철저(3~4월)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사업 확대(200개 마을)
  - \* '14년 산불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34%)으로 분석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방지시설 확대 설치
  - 유관기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및 119로 신고 접수되는 임야 화재 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산불피해 최소화
  -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산불신고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 감시카메라, 등산로 개방·폐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산림헬기(45대), 인력 진화대(기계화 193대, 광역특수 6대) 등 보유자원을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 진화를 위해 최대한 활용



## 참 고 자 료

〈참고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참고2〉 2015년 입법 추진계획

〈참고3〉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



## 〈참고1〉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연번	제목	대통령 말씀	업무 추진현황
1	산림가치 재창조	“산림을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두업무보고, '13.3.22)	·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 수립·보고 ('13.6, BH 경제수석) ·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 이행('13.7~) · 목재이용종합계획 수립 이행('14.11 ~) · 탄소흡수원종합계획 수립 이행('14.12 ~)
2	야생화 자원화	“우리 고유의 야생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미중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진흥확대회의, '13.10.27)	· 유용식물증식센터 건립('14.3) · BH 사랑채 야생화 전시회('14.5~) · 야생화 세밀화 제작·보급(445점) · 도시숲 등 녹지공간 야생화 식재 확대
3	산지규제 개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환경도 지키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산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4.3.12)	·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14.4) ·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령개정안 마련('14.4) · 입법예고('14.4~5) 및 심사(6~8) · 개정안 최종 공포·시행('14.9)
4	북한 산림복구	“북한 지역의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북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헌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드레스덴 선언, '14.3.28) “남북을 가로지르는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 '14.8.15)	·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구성('14.6) *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와 연계 · 동북아 산림분야 국제 워크숍 개최('14.7) · 남북산림협력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보고('14.8, BH 외교안보수석) · 남북한 중차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아시아녹화기구·평화의숲·수목원·품종센터) MOU 체결('14.11) · ‘남북 농림축산협력 TF’ 참여('14.11 ~)
5	국가정원 지정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방문시 '13.10.20)	·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수목원법 개정('14.12) · 국가정원 지정 추진('15) · 정원지원센터 건립('15~'17)
6	복합 관광단지 개발지원	“기업이 목장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초지법 개정으로 국유림 내 허용행위 확대('14.11) · 평창 올림픽특구(대관령) 내 국 사유림 교환 추진('15)
7	산악관광 활성화	“산악관광은 성장가능성이 높음에도 산지규제로 제약이 많습니다. 산지를 대하는 의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국민이 산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전경련건의 '14.6.9)	· 창조경제추진단 주관 산악비즈니스 활성화 TF 운영('14.8~9) · 문체부 주관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 TF 운영 중('14.10~)

## 〈참고2〉 2015년도 입법 추진계획

### □ 입법 추진계획 : 총 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기타 구분
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의 정의</li> <li>○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대상 정비</li> <li>○ 용도변경승인 예외규정 신설</li> <li>○ 벌칙(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li> <li>○ 국회 제출 : 8월30일까지</li> <li>○ 시행 : 공포 후 6개월</li> </ul>	법령정비 (용어정의와 규정의 명확화 및 규제완화)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치유지도사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li> <li>○ 자연휴양림 내 금지행위 규정</li> <li>○ 자연휴양림 내 개재된 토지 (1ha 이내)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li> <li>○ 자연휴양림 등 조성시 인 허가 의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li> <li>○ 국회 제출 : 9월30일까지</li> <li>○ 시행 : 공포 후 3개월</li> </ul>	법령정비 (헌법합치성 제고) 기타 제도개선
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조합 임원 결격사유 중 불법선거에 따른 벌금(100만원 이상) 재판형량과정에서 선거·비선거 관련 사항을 분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처 제출 : 7월30일까지</li> <li>○ 국회 제출 : 9월30일까지</li> <li>○ 시행 : 공포 즉시</li> </ul>	법령정비 (헌법합치성 제고)
4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 및 귀촌희망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 인증절차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li> <li>○ 국회 제출 : 7월30일까지</li> <li>○ 시행 : 공포 후 6개월</li> </ul>	기타 제도개선



## 〈참고3〉 2015년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2015 1분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 책임담당관 지정·운영	1~4월
	▪ 제2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개최	1월
	▪ 산촌 활성화 사업 공모	1월
	▪ 201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1월
	▪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월
	▪ 봄철 나무심기 착수	2월
	▪ 2015년도 목재수급계획 수립	2월
	▪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2월
	▪ 제1차 한-에티오피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3월
	▪ 2015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3월
	▪ 소나무류 이동 전국 일제 특별단속 실시	3~4월
	2015 2분기	▪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
▪ 201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포		4월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심의회 개최		4월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4월
▪ 지리산 둘레길 걷기행사 개최		5월, 10월
▪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 MOU 체결		5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실시		5~8월
▪ 국가산림자원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6월
▪ 산림고용박람회 개최		6월, 9월
▪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개최		6월
▪ 임업인과의 만남 행사 개최		6월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6~8월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2015 3분기	▪ 태풍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긴급대책 수립·시행	7월
	▪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8월
	▪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준공	8월
	▪ 제14차 세계산림총회 참석	9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실시	9월
	▪ 국립 DMZ 자생식물원 개원	9월
	▪ 2016년 도로변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공동조사	9월
	▪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	9월
2015 4분기	▪ 제3회 I LOVE WOOD 캠페인 실시	10월
	▪ 제14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10월
	▪ 제2회 도시녹화운동 캠페인 실시	10월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10월
	▪ 제14회 산의 날 행사 및 산림박람회 개최	10월
	▪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10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준공	10월
	▪ 2016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시행계획 수립	11월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1월
	▪ 종묘가격 결정·고시	12월
	▪ 제4차 임도설치계획(2016~2020) 수립	12월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 수립	12월	
2016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5월
	▪ 산림탄소 전문가 제도 운영	12월
	▪ 나무심기, 숲가꾸기 추진	연중
	▪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방지 대책 추진	연중
	▪ 북한 산림복구 시범사업 추진(남북관계 등 상황을 감안)	연중
2017	▪ REDD+ 포럼, 국제심포지엄, 고위급 회의 등 추진	2월, 8월, 10월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밤재)	2~10월
	▪ 국제 산림탄소시장 연계 추진	12월
	▪ 나무심기, 숲가꾸기 추진	연중
	▪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방지 대책 추진	연중